

2005 독일통일백서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05



통일연구원

2005

독일통일백서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05

통일연구원

독일통일백서 2005

인 쇄 2006년 11월
발 행 2006년 11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연구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5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8,500원

© 통일연구원, 2006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독일통일백서 2005 =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05 / 통일연구원 [편]. — 서울 : 통일연구원, 2006
p. ; cm.

ISBN 89-8479-360-4 93340: ₩8,500

340.925-KDC4
320.943-DDC21

CIP2006002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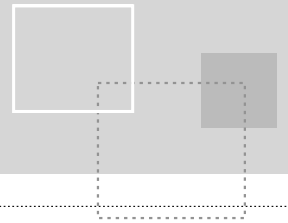
목차

제 1 부

- | | |
|---------------------------------|----|
| 1. 동독재건 15년: 중간평가 | 3 |
| 2. 경제동향 | 18 |
| 3. 동독재건 촉진정책 | 23 |
| 4. 인구구조의 변화: 신연방주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제 | 30 |

제 2 부 동독지역 재건 프로그램과 정책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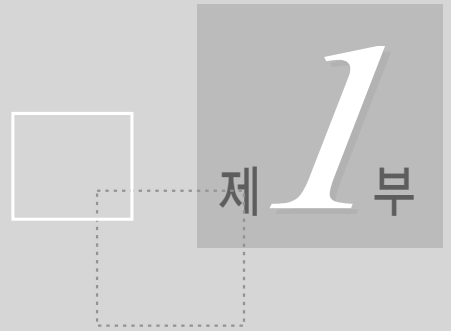
- | | |
|-------------------------|----|
| 1. 경제지원 | 37 |
| 2. 혁신지원 | 47 |
| 3. 교육·연구 중심지로서 동독 | 58 |
| 4. 농촌개발 | 69 |
| 5. 교통인프라 확충 | 75 |
| 6. 도시건설 | 83 |
| 7. 노동시장 정책 | 91 |
| 8. 직업교육기회의 확대, 청년실업률 억제 | 96 |



9. 아동, 청소년, 가족 및 여성 정책	105
10. 건강보험 및 사회복지 보험	114
11. 에너지와 환경	123
12. 예술, 문화, 스포츠	133

제 3 부 신연방주 지역 경제지표

1. 지역별 현황	144
2. 신연방주 지역 거시경제 지표	148
3. 경기지수	158
4. 노동시장 통계	162
5. 주요 재정지원 프로그램 및 자원	166
6. 1991년 이후 신연방주 지역 창업 및 폐업건수	170
7. 경제분야의 연구개발인력	172
8. 투자활동	173



제 *1* 부



독일통일백서2005

1

동독재건 15년: 중간평가

2005년 10월 3일로 독일통일은 15주년을 맞았다. 동독재건의 중간평가와 더불어 향후 재건작업이 직면하게 될 과제를 살펴볼 수 있는 해이다.

통일 15년, 과거 붕괴 위기에 처했던 구동독의 많은 도시들이 새로이 각광 받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현대화된 교통 및 통신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며 많은 기업이 설립되었다.

동서독 지역 간 생활수준의 격차도 많이 해소되었다. 하지만 동서독 간 격차해소는 여전히 중대한 정치적 목표이자 과제로 남아있다.

신연방주에서도 서독 지역에서 나타나는 도농 격차, 이를테면 쾰른과 아이펠 간에 나타나는 격차와 비슷한 양상이 지역 간, 도시·농촌 간에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큰 문제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신연방주의 노동시장 여건이다. 인구변동으로 촉발되는 각종 변화도 특히 어려운 과제이다. 이 사안들은 전 독일이 안고 있는 문제이지만, 특히 신연방주는 기존의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본 백서의 제1장에서는 구동독 지역 재건작업이 지금까지 거둔 성과와 핵심 정책노선에 대해 간략하게 중간평가를 내렸고, 이어서 실질적 정책과 향후 도전과제 및 미래에 대한 주요 전망을 담고 있다. 이어 제2장에서는 동독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정부대책 및 각종 프로젝트와 주제분야 등을 다루고 있다.

1.1 핵심 정책 노선

통일이 되던 해, 신·구 연방주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정치적 통일을 이루어야 했음은 물론이고 골병이 든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현대적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착수하여 추진해야 했었다. 이러한 거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다양한 정책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초기단계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했다. 당시 동독 경제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방안은 「화폐·경제 및 사회통합」조약을 조속히 체결(1990년 7월 1일)하는 것이었다.

1.1.1 화폐·경제 및 사회통합 조약

경제통합 조약 체결에 따라 경제발전을 위한 우수한 법적·정치적·경제적 틀(사유재산제, 경제활동의 자유, 경쟁체제, 임금 및 가격 결정의 자유 등)이 마련되었다. 경제통합 조약은 통일 초기 동독의 체제 전환을 위한 믿음직한 지침이 되었으나, 세분화된 서독의 법체계가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국민과 기업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기도 했다.

화폐통합 조약에 따라 서독 마르크화(D-Mark)가 조속히 도입되었고, 소규모 예금잔고와 임금을 1:1 고정환율로 하여 서독 마르크로 교환해 주었다. 이는 서독 마르크화의 신속한 도입과 공평한 교환비율의 적용은 동독 주민들의 바람에 부합하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거의 하룻밤 사이에 구동독 제품의 가격이 치솟는 결과를 가져왔다. 동독이 과거 상품을 수출하던 동유럽의 주요 시장이 급속하게 무너졌다. 동독제품은 독일 국내에서도 더 이상 팔리지 않게 되었다. 낮은 품질의 제품이 갖는 저가 메리트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결국 1990년 동독 경제는 엄청난 경쟁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업생산의 70%가 축소되었고, 많은 기업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엄청난 규모의 구조조

정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탁관리청(THA)은 구동독 경제의 핵심을 유지하고 동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했다.

통일을 통해 풀어야 했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동독 국영기업의 민영화였다. 독일 정부는 1990년 여름 신탁관리청을 발족, 민영화 사업을 추진했다. 신탁관리청은 약 4만 5천 개의 사업장에 4백여만 명의 직원을 둔 총 8500여 개의 국영기업을 인수했다. 국영기업의 인수에 따라 새로 탄생한 1만2천 개가 넘는 기업 중 1994년 말까지 약 절반이 민영화되었고, 13%에 가까운 기업은 이전 소유주에게 반환되었으며, 소수(2%)의 기업은 시영화 되었다. 나머지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은 1994년 당시, 이미 청산대상이었거나 청산작업이 완료된 상태였다.

신탁관리청은 민간 투자자로부터 각각 7%와 14%를 상회하는 고용 및 투자약속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탁관리청이 민영화 사업에 착수한 이래 1,200억 유로(Euro) 이상의 투자와 15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물론, 신탁관리청 관리하에 있던 자산의 가치가 초기에 과대평가된 것은 사실이었다. 투자자본의 영세성과 기업청산에 들어간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매출은 초기 예상했던 3000억 유로에 훨씬 못 미쳤다. 이에 따라 신탁관리청이 해체될 당시 1,000억 유로가 넘는 부채가 남겨졌으며, 이는 ‘기업청산유산기금(Erblastentilgungsfond)’으로 넘어갔다.

동서독이 하나의 통일된 민주적, 사회적 법치국가가 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사유재산문제에 대한 처리였다. 「미해결 사유재산 처리에 관한 법」과 「배상 및 보상법」을 통해 법치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와 차별로 인해 자산손실을 본 피해자들에게 자산을 반환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보상을 해주었다. 그러나 자산상태에 대한 심사기간이 경우에 따라 너무 오래 걸려 투자지체, 심지어 투자실패로까지 이어졌다. 이는 국영자산의 민영화 과정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투자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독일정부는 1992년 ‘투자우선법’을 제정, ‘보상 전 반환 우선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긴급한 투자수요에 대해서는 비록 과거 소유주의 의사에 반할지라도 반환보다 투자우위를 보장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신연방주의 임금인상은 화폐통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동독 지역 노동자에 대한 임금은 동서독 마르크의 1:1 교환비율에 따라 지급했다. 또한 임금협상자들은 경제발전

의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로, 동독의 임금수준을 서독의 수준으로 조속히 끌어 올리고자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높은 임금인상율은 동독 경제로 하여금 오히려 더 큰 경쟁압박에 시달리게 했다. 지금도 신연방주의 임금수준을 조기에 서독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이 주요실책의 하나로 자주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동서독간의 장기적인 임금격차는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도 오래 갈 수 없었던 사안이었다는 것이다. 임금격차가 해소되지 않고는 동독민들의 서독 이주가 지속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명목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자율적 임금협상에 바탕한 것이었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행히 지난 몇 년간 신연방주 제조업은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임금인상률이 적정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생산단위당 임금비용이 서독보다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회통합조약에 따라 서독의 사회보장체제가 신연방주에 적용되었다. 이는 서독이 동독에 제공한 막대한 양의 이전지출(Transferleistung)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회통합은 독일 전역의 생활수준 균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었으며, 동독경제체제의 전환이 신연방주 주민들에게 미치는 급격한 변화를 완화하는 데에 기여했다.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이전지출은 동독의 고용안정에 적잖이 기여하고 있다. 2005년 4월 할레 경제연구소(IWH)의 추정에 따르면 이전지출규모는 약 85만 명 근로자 소득에 버금가는 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독 재건정책의 목표는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를 확립하는 데에 기여하고, 신연방주의 이전지출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춤으로써 독일 전체의 경제력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있다.

1.1.2 현대적 자본 확보

동독재건의 핵심은 우수한 현대적 자본을 확보·구축하는 것이었다. 자본 확보는 동독 지역 발전을 점진적이며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개발정책과 구조전환정책의 핵심이었다. 인프라 구축 외에도 투자촉진은 통일 초기부터 성장과 고용의 안정적 기반을 닦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98년 이후로는 기업혁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 현대적 개발정책의 기본 축으로 삼았다.

90년대 전반기에는 도로, 주택, 사업용 건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건설부문이 중점 육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건설업이 크게 성장했다. 돌이켜 생각하면, 당시 조세지원방식을 통해 건설분야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지원한 정부 정책에 비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보조금 지급으로 1996년까지 신연방주에는 건설업이 팽창했다. 건설업의 팽창으로 통일 초기 동독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었으나,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신연방주의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실물시장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기업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업무용 건물 시장에서도 막대한 설비 과잉이 초래되었던 것이다. 신연방주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1998년 이후, 연방정부는 지원의 초점을 제조업과 생산형 서비스업으로 돌리게 되었다. 연구개발 및 기업혁신, 기업투자 및 기간 인프라 사업 외에 특히 네트워크 프로그램과 같은 각종 프로그램이 새롭게 추진하는 등 정부는 제3의 육성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새로운 지원책의 목표는 신연방주의 성장 잠재력을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실현하며, 기존의 핵심분야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자체 경제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동독의 자본 확충 및 현대화 노력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베를린을 제외한 신연방주의 1인당 자본 보유량은 1991년 서독 대비 37.4%에서 2002년 70.4%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물론, 이렇게 증대된 자본은 상당부분 동독 현대화에 투입되었다. 현재 자본 보유량의 현대화 정도는 모든 신연방주가 서독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브란덴부르크 주는 서독 대비 113%, 튀링엔 주는 112%). 정부의 지원책은 지난 수 년간 산업성장과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정부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안들을 본 보고서 1장의 3절에 제시하고 있다.

1.1.3 연대협약

통일 조약은 통합 과도기가 경과한 후, 동독 연방주의 주정부 간 재정 균등화(Finanzausgleich) 적용을 규정했기 때문에, 1990년 구동독 주 및 지자체의 재

정상태를 개선하고 견고한 경제기반 위에서 동독재건을 추진하기 위한 ‘독일통일기금’이 탄생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규모가 확충된 통일기금 중 총 822억 유로가 사용목적이 명시되지 않은채 구동독지역에 지원되었으며, 이중 40%가 지자체에 제공되었다.

1995년 이후, 신연방주는 완전하고 평등하게 「주정부간 재정 균등화」체제에 편입되었다. 특히 동서독 분단에 따라 발생한 특별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에 1995년에서 2004년까지 연대협약-I의 일환으로 총 820억 유로에 달하는 특별수요 연방지원금(SoBez)을 추가제공했으며, 2001년까지 투자촉진법에 의거 약 240억 유로를 지원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재정지원은 2005년 실행된 연대협약-II가 승계했다. 이에 따라 신연방주는 아직도 현저한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열악한 지자체의 재무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까지 1050억 유로의 ‘특별수요 연방지원금’을 제공 받게 된다. 이외에도 연방정부는 같은 기간 동안 구동독지역을 위해 총 511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금액은 동독재건을 위한 연방정부 프로그램 및 정책추진에 투입된다. 향후 수년간 동독지역 경쟁력 제고, 고용증대, 인프라 개선에 역점을 두고 지원될 계획이다.

1.2 경제 발전

지금까지 동독재건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1990년대 초 이후 경제발전의 주요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호네커(Honecker) 몰락 이후 일명 ‘쉬러 보고서(Schürer-Papier)’로 명명된 국가 계획위원회의 분석 보고서에서 나타났듯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1989년 당시, 동독 경제는 파탄 직전의 상태였다. 자본 스톡은 완전히 바닥이 낮고 신규투자는 부재했다. 경제 생산성은 서독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동독의 경제는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던 농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으며 서비스업은 거의 발달되지 못한 상태였다. 동독이 붕괴되기 전 수년간 주민들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동독의 산업이 오로지 소비재 생산에만 치중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통일 당시 동독경제가 이렇듯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회복도, 재건사업도 그 시작부터가 결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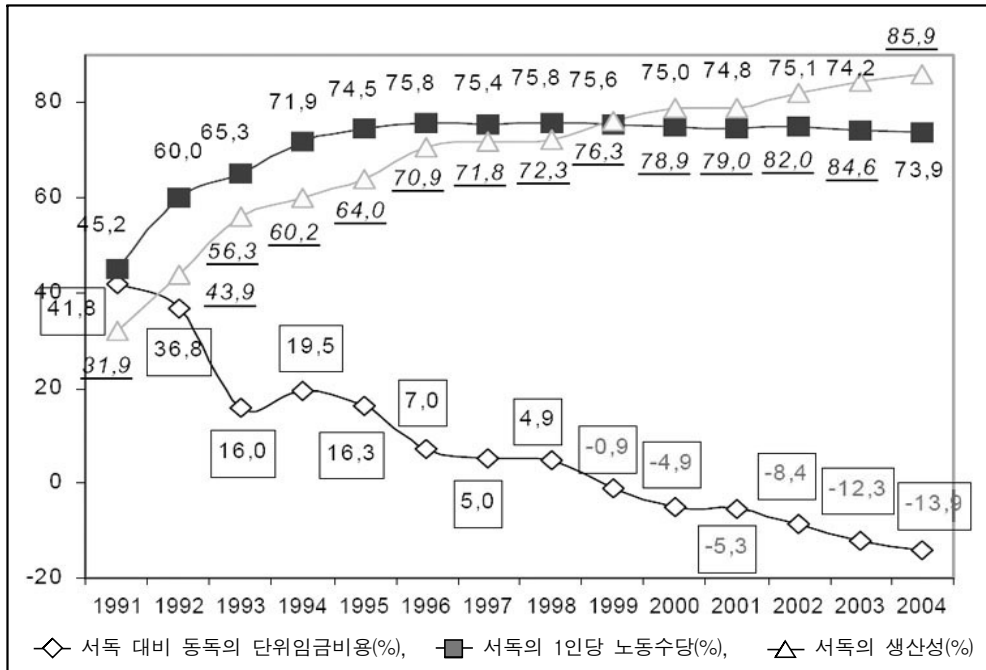
쉽지 않았다.

통일 이후 신연방주의 산업생산은 빠른 회복 과정에 들어서기 전 먼저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다(GDP는 1990년에서 1991년 사이 약 3분의 1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1991년부터 1995년까지 GDP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베를린을 제외한 신연방주에서 연평균 약 8.5%, 베를린을 포함했을 경우 약 6.4%의 성장율을 기록했다. 빠른 경제회복은 인프라와 산업건설 및 주택건설 부문에서 발생한 막대한 수요가 견인차적 역할을 했다. 정부의 세금보조도 건설산업을 빠르게 확대하는 데 중요한 몫을 했다. 그러나 1995년부터 경제 전반의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규모 축소와 침체 단계에 돌입한 건설업을 대신하여 제조업이 동독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떠오르게 되었다.

종합해 보면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의 GDP는 1991년 이후 두 배로 성장했으며, 독일 전체 GDP에서 신연방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1%에서 2004년 14.7%로 증가했다. 더욱 역동적으로 발전한 것은 1인당 GDP로 1991년 11,920 유로에서 2004년 17,500 유로로 급증했다(1995년 물가 기준. 3장의 표 2.1 참조).

같은 기간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의 생산성, 즉 경제활동인구 1인당 GDP는 서독의 절반수준(51.2%)에서 2004년 4분의 3수준(74.2%)까지 상승했다(3장의 그림 2.8 참고). 그러나 임금이 너무 급상승했기 때문에, 생산단위당 임금비용은 서독지역의 수준을 상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경쟁력의 주요지표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건설업 제외) 부문의 단위당 임금비용은 서독지역에 비해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로 자리매김했다(2004년 서독 대비 -13.9%. 그림 A 1.1 참조). 동독지역 기업설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은 약 17 유로로 이는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등과 비슷한 수준이며 서독의 28 유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한 수준이다.

그림 1.1 임금비용, 생산성 및 단위임금비용의 동서독간 비교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분야)



이상 기술한 과정을 거쳐 지난 수년간 동독경제는 구조전환에서 상당한 진전을 거두었다. 구동독지역 산업분야 수출비중은 1992년 13.9%에서 성장해 2004년 25.5%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동독 경제의 국제 경쟁력이 향상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경쟁력 향상에 다소 불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대상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 자본이 취약한 중소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신연방주는 향후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경제구조전환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성장동력의 핵심분야를 구축할 수 있었다.

연방정부가 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부문은 노동시장 분야이다. 동독 지역 실업의 주원인은 1990년대 초반 단행된 개혁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몇 년간의 국민경제 성장률은 고용을 확대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침체가 해소될 수 없었다. 다만, 극히 일부 부문에서만 미약하나마 긍정적인 발전이 이뤄졌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1998년 이후 연평균 1%~1.5%의 지속적인

고용증가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전도 건설업의 상황 악화시에는 주춤해지기도 했다. 2004년 신연방주(베를린 포함) 등록 실업자 수는 연평균 160만명으로 실업률은 18.4%에 달했다(3장의 표 1.2 및 표 3.2 참고).

1.3 인프라 구축 및 도시 개발

1990년 이후 특히 역점을 둔 부문은 현대적 인프라를 재건하고 구축하는 것이었다. 동독재건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것도 바로 이 부문이다.

통일 당시 동독의 교통 인프라는 황폐한 수준이었다. 기업투자분야와 마찬가지로 통일전 동독의 교통시설은 재건은 커녕, 유지관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 철도 구간 중 5분의 1에 가까운 구간은 감속운행할 수 밖에 없었으며, 고속도로 총면적의 45%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수로의 경우에도 구동독 시절 투자가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9년 당시 수문과 댐 시설의 80% 이상은 50년 이상이 된 낡은 상태였고, 심지어 50%는 80년 이상 된 것이었다.

통일과 함께 독일은 이중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나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동서독 간의 최신 교통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독 인프라의 상당부분을 급히 현대화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통일 전 1990년 5월 3일, 동서독 교통부 장관 사이에 1997년까지 우선 단절된 교통망의 신속한 재건과 확장에 역점을 둔, 100억 마르크 투자규모의 '격차해소 프로그램'이 수립·체결되었다. 이어 1991년 4월 연방정부는 신·구연방주 간의 주요 교통망 구축을 위해 17개 '독일통일 교통 프로젝트(VDE)'를 추진할 것을 계획했다. 총 투자 규모는 360억 유로를 상회하며, 여기에는 총 9개의 철도 건설 사업, 7개의 도로건설 및 수로 재건 사업이 포함되었다. 이 모든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료된 상태다.

「독일통일 교통프로젝트(VDE)」는 1992년 시행된 첫 전독일 연방교통망계획의 일환으로, 총 투자액의 3분의 1이상이 신연방주에 투입되었다. 2003년의 연방교통망계획 역시 분단 기간 동안 생겨난 낙후성을 극복하고,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총 투자금의 상당한 부분이 신연방주에 할당됐다. 정부는 이 같은 투자 조치와 병행하여 1991년 12월 19일, 「교통망 계획 촉진법(VerkPBG)」을 제정하여, 원활한 인

프라 투자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법이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자 독일 정부는 본 계획을 2005년 말까지 연장 시행했다. 현재 전국 규모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촉진시키기 위한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그리고 2006년 1월 1일부터는 본 법에 따라 신연방주가 전국 차원에서 개선·통합된 지역건설 계획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연방정부 예산 중 총 600억 유로 이상이 철도와 고속국도 및 수로의 재건과 현대화에 투입되었다.

급진전을 보인 부문은 통신 인프라였다. 신연방주는 우수하고 현대적인 통신시설을 신속히 구축하여 국민과 기업에 제공했다. 1990년 당시 구 동독에서 전화를 보유한 가정은 전체 5분의 1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서독과 마찬가지로 99% 이상의 가구에 전화선이 깔려 있다. 동시에 최첨단 통신망도 구축됨으로써 구동독지역의 산업입지 조건을 크게 개선했다.

구동독하의 주택 및 도시건설은 사회주의 국가의 주거환경이 어땠는지를 잘 나타낸다. 구동독 당시 주택건설사업은 산업적 용도로 미리 제작해 놓은 대형주택단지를 조립하여 설치하는 데 집중되었다. 기존주택의 유지보수를 위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택임대료가 유지보수비용에 미달했던 것도 투자부진의 한 요인이었다. 민간소유였던 도심주택들은 상당부분 바로 이 때문에 현대화와는 거리가 먼 1949년 수준의 노후한 황폐 상태에 있었다. 동독의 7백만 주택 중 약 24%가 실내 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했으며, 약 18%는 샤워시설도 욕조도 없는 상태였다. 심지어 약 백만여 채는 더 이상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히 훼손되어 있었다.

신규주택건축에 역점을 둔 결과 많은 도시들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었다. 비록 많은 서독도시에서 볼 수 있는 교외지역의 현대화까지는 이루지 못했지만 구동독지역에는 오래되어 황폐한 도심지역과 현대화된 주거시설과 새로운 인프라 시설의 새로운 대규모 주거지를 갖춘 '이중도시'가 생겨나게 되었다.

통일 첫 해에는 우선 주택을 공급하고, 급증하는 도심지역의 쇠락을 방지하는 데 주택 및 도시건설 정책의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은 1993년 제정한 「지역육성법」이었다. 「지역육성법」의 핵심은 기존 및 신규 주택 투자에 대한 높은 비율의 감가상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조세정책에 있었다. 돌이켜 보면 이와 같은 특별 감세조치가 투자동반효과를 유발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신축에 투자가 집

중되는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인구 변동 및 이탈 현상까지 작용함으로써 신연방주는 주택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1990년대 말 현재 약 100만 채의 주택이 빈집 상태로 추정되었다.

주택시장 및 건설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2001년 구동독 지역의 도시개혁 사업을 발의했다. 이 사업은 종합적 도시건축 개발계획을 토대로 오랜 기간 미사용 주택을 철거하는 한편, 도심지역의 환경개선을 통해 주택이 과잉공급되는데 역점을 두었다.

주택 및 도시건설은 동독재건 사업 가운데 재건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부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황폐화된 구 시가지들이 다시금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도심지로 탈바꿈했으며, 새로 지은 많은 주택들은 최신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동독재건의 지속적 성공을 위해서는 인구변동과 도시위축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적극적이며 미래도전적 자세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식·기술·혁신 지향적으로 나날이 변모하는 사회 및 경제체제 하에서는 경직성 인프라 구축 외에도 대학 및 연구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종합대학과 전문대학 및 학교 밖의 일류 연구센터 등은 지역의 성장동력과 역량 제고에 핵심축을 형성한다.

구조전환의 중점 과제는 학문체계를 국가적 통제로부터 독립시키고 발전 잠재력이 있는 구동독의 연구분야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었다. 대학을 관할하는 책임은 주정부로 이전되었으며, 교수에게는 연구의 자율과 학문적 자유가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은 1990년에서 1994년 사이 특히 학문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대학 교직원에 대한 광범위한 인사교체와 함께 진행되었다. 보다 큰 변화는 직업학교와 공과대학, 의료원 및 교육대학 등에서 일어났다. 동독 시절에는 어디서나 보편적이었던 이와 같은 학문 기관들은 전문대학으로 전환되거나 통폐합되었다.

오늘날 동독의 대학은 지역별, 분야별 그리고 제도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공분야를 다양화함으로써 최근 몇 년 간 이 대학들은 구연방주 출신학생의 비중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2005년 현재 신연방주에는 총 23개의 종합대학과 35개의 전문대학 및 17개의 예술 및 음악대학이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공동대학건립사업’의 일환으로 1991년에서 2004년까지 베를린을 제외한 신연방주에 동독대학의 재건 및 확충을 위해 29억 유로 이상을 지원했다.

구동독의 3개 대학 외 연구기관들은 그 잠재력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새롭게 편성, 구조조정을 거친 뒤 구연방주의 연구기관에 통합되었다. 신규 건립된 신연방주의 대학의 연구기관은 연방·주정부 연구기관 (Gottfried Wilhelm Leibnitz 학회)의 '블루 리스트(Blaue Liste)'에 다수 등록되어 있는 바, 이를 구연방주의 연구기관과 비교할 경우,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신연방주의 대학의 연구소의 연구성과는 국내외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우수한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2장의 3.2절 참고).

응용지향적인 **동독의 산업연구**는 1990년대 초반 콤비나트의 민영화 또는 해체로 거의 황폐화되다시피 됨으로써 새로운 연구 인프라 구축은 더디기만 했다. 이런 점에서 신연방주의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과 연구활동은 큰 의미를 갖는다(2장의 2절 참고).

독일 연방군 또한 신연방주의 경제를 촉진하는 중요 경제단위다. 105개 연방군부대에는 현재 총 4만 5천명의 군인이 복무 중이며, 약 1만 7천명의 군무원이 종사하고 있다. 연방군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각 지역 소재 기업들에 대해 군관련사업을 발주함으로써 고용주로서도 큰 역할을 한다. 1991년에서 2004년 사이 독일연방군은 신연방주에 43억 유로가 넘는 규모의 사업을 발주했다. 주요 영역은 서비스업, 조선, 석유화학, 무기 및 군수품, 정보처리 및 전자 제품과 자동차 산업 등이다. 2004년 신연방주 군행정체가 역대 업체로부터 주문공급 받은 식자재는 약 1천 7백만 유로에 달한다. 그 밖에 2005년 독일연방군수청은 건축 및 유지보수를 위해 약 2억 6천만 유로에 달하는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1.4 1991년에서 2004년까지의 생활 및 소득상황

신연방주의 발전은 생활수준 및 소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복지와 소득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 지표는 1인당 가처분 소득이다. 베를린을 제외한 신연방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991년 이후 급등, 2003년 14,297 유로를 기록함으로써 1991년의 두 배 가까이 치솟았으며, 전 독일 평균의 84.9% 수준까지 올라섰다. 특히, 동독 연금생활자의 생활은 통일 직후에 비해 대폭 개선되었다. 직장생활의 연한

이 길어졌고 맞벌이인 경우도 많아, 신연방주 주민의 평균 연금수령액은 서독의 일부 지역보다 높은 경우도 있다.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또 하나의 지표인 내구 소비재 구비율도 지난 15년간 대폭 개선되었다. 이 부문에서는 현재 서독과 격차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같은 발전은 신연방주의 주거환경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1인당 주거면적 증가(1990년: 26.67m², 2003년: 37.28m²)와 1인당 평균 방 개수 증가(1990년: 1.23, 2003년: 1.57) 및 주택 여건 개선 등, 주관적인 주거 만족도도 상승하여 구연방주와 비슷한 수준이다.

보건부문 현대화도 신연방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응급 및 입원치료 부문이 상당부분 개선되어 구연방주와 더 이상 격차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보건 부문 개선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는 서독에 비해 **평균수명**이 뚜렷하게 높아진 것을 들 수 있다.

1.5 내적 통일의 과정

두 개의 국가와 두 개의 정치 체제로 40년 간 분단되었던 동서독은 엄청난 경제적 격차를 키워왔으며, 주민들도 서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1990년 통일이 되었을 때 독일 정부는 경제적 격차를 해소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동서독 주민들의 통합을 이뤄 **‘내적 통일’**을 달성해야만 했다.

변혁기 이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은 동서독 간에 깊은 골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보여주었으며, 상호 간의 공통점을 찾으려는 노력과 내적 통일의 진전을 방해했다. 그러나 이제는 인생계획이나 가치관 등에서 상당 부분 서로 닮아가고 있는 중이다.

1999년에 이어 연방정부는 2004년 두번째로 14살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신·구연방주 주민들의 삶이 더욱 유사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현재 양 지역 주민의 약 3분의 1(31%)이 스포츠, 유치원 및 학교,

¹ DIW (2004): SOEP 가정 모니터 1984-2003, 베를린

문화, 종교와 기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차이는 존재한다. 자주 언급되는 차이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에 대한 상반된 태도를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차이는 체제에 대한 순응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여전히 어려운 신연방주의 경제상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서독 간에는 종종 내적 통일을 평등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 다원화 사회에서 사회의 민주적 기본합의를 해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차이는 생산적 논의의 원천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내적 통일은 시민사회적인 과제로 정치적인 자극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국민들 스스로 구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연방정부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4만 유로의 상금을 걸어 **‘독일통일 공헌 시민상’**을 매년 수여하고 있다. 2004년에도 내적 통일을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한 시민들과 프로젝트를 표창했다.

하지만 내적 통일을 위해 중요한 것은 동서독 간의 교류뿐만이 아니다. 사회주의유일당(SED)의 독재 및 동독 과거사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2004년 말까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SED **독재정권 희생자의 복권 및 보상**의 일환으로 형사보상법에 따라 총 6억6천만 유로에 달하는 금전보상과 지원활동을 시행했다. 또 직업복권법에 따라 2004년까지 총 1,730만 유로를 근로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연방정부는 SED 독재를 청산하기 위해 ‘과거사청산재단’을 만들어 동독 과거사 및 독일 분단의 역사를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동독의 역사는 특히, 젊은 층에 있어 실질적인 체험의 역사가 아닌 것이 된다. 이것이 재단에게는 상당한 도전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독일 역사상 두번째 독재에 대한 과거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오스탈기(Ostalgie: 옛 동독시절에 대한 향수)’경향에 본 재단이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SED 독재와 관련된 논쟁은 결코 동독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단의 또 다른 과제는 주요기관들, 예컨대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연방 및 주정부 단위의 센터, 슈타지 문서관리부, 라이프치히 시사포럼 등과 함께 차별화되고 흥미있는 서비스와 행사 등을 추진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층으로 하여금 현대 독일사와 그것이 독일과 나아가 유럽에 미칠 영향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과거사청산재단은 독일분단, 소련 점령지(SBZ)와 동독에서의 독재와 그 영향을 다

루는 독일 전역의 1,200개 프로젝트를 지난 6년 이상 추진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총 1,700만 유로가 투입되었다. 프로젝트의 약 5분의 1은 구연방주에서 실시되었다.

연방정치교육센터(bpb)는 이미 수십 년째 지속적으로 독일분단과 독일통일이라는 주제로 민주시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출판, 각종 행사 및 온라인 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동독 및 소련 점령지, 독일 분단 및 통일의 역사, SED 체제에 대한 논쟁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문화적이고 일상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최신 매체를 통한 전달방식으로 주제에 대한 국제적·시사적 관련성을 부각, 독일분단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젊은 층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고 있어,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연방정치교육센터는 다양성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동독 역사에 대한 인식과 역사적 사건의 배경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고 있으며, 이를 궁극적으로 학문적 논의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구동독 국가안전청인 슈타지(Staatssicherheitsdienst)의 비밀문서를 관리하는 **슈타지 문서관리부(BStU)**는 슈타지 문서법에 따라 옛 국가안전부(MfS) 문서를 공개 및 보존하고 있으며, 과거 슈타지 활동의 광범위한 청산작업을 맡고 있다. 슈타지에 관한 정보제공은 구동독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부분이다. 과거사를 미화하려는 움직임을 저지하는 중요 역할을 한다. 슈타지 문서관리부는 독일의 두 번째 독재사(史)를 청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강연 및 각종 행사에 대해 대중의 관심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 슈타지 개인 문서 열람요청이 9만 3천 건에 달한 것을 보면 문서관리부의 업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과거사 청산작업이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을 의미한다. 아직도 많은 희생자들은 보상 및 복권을 위해 문서를 열람하고자 한다. 공무원과 의회 의원의 자격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8만 5천 건의 문서 열람이 신청되었다. 슈타지의 과거청산은 동독만의 문제가 아닌 전독일에 해당되는 문제이다. 동독의 국가안전부는 과거 서독지역에서도 활동했으며, 슈타지 독재정권 희생자의 상당수가 오늘날 구연방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경제동향

2.1 경기회복

2004년 신연방주는 구연방주와 마찬가지로 뚜렷한 경기 회복세를 나타냈다. 베를린을 제외한 신연방주의 GDP는 1.5%(2003년 0.2%) 성장했고, 2005년에도 이와 같은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독 제조업에서 생산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이 같은 예측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상반기의 수주실적도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2004년 하반기보다 약 7%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국내외 수주 비율은 거의 같은 규모로 증가했다.

최근 국내 경기에 큰 활력을 준 것은 국제시장이다. 그러나 동독 경제에서 건설업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위기가 계속될 경우, 통독 직후 나타났던 평균 이상의 성장세는 기대하기 힘들다. 지난 3년간 동독 지역의 총생산은 서독 지역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2004년 서독의 노동생산성이 1.2% 증가한 데 비해 베를린을 제외한 신연방주는 1.6% 증가하여 신구연방주 간의 생산성(취업자 1인당 GDP) 격차는 다소 감소했다. 베를린을 제외한 신연방주의 작년도 노동생산성은 서독의 71.6%, 베를린을 포함한 경우에는 74.2%에 달했는데, 이와 같은 수치는 1991년 이후의 경제발전상을 보여주는 것이

다. 1990년 당시 베를린을 제외한 동독의 경제력은 서독의 42.3%(베를린 포함 시 51.2%) 수준에 불과했었다.

2.2 구조조정의 지속

신연방주의 경제를 산업분야별로 살펴보면 거시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산업부문의 성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제조업은 2003년의 5.9%에 비해 2004년에는 8.8%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는 신연방주 경제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연방주의 산업성장에는 세계경제의 성장도 한 몫을 했다. 2004년 동독지역 제조업분야의 생산액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5.5% 정도로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동독지역의 제조업 분야 생산성은 서독지역에 비해 매 약 2%이상 더 빠른 속도로 증가, 2004년 이미 서독의 80% 수준에 도달했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시작된 동독지역의 재산업화가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으며,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계속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1 신연방주 산업부문별 총부가가치생산 성장률 (%)

	1995년 물가로 산출 ¹⁾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경제전반 총부 가가치 총계	7.8	12.1	11.3	4.9	3.6	2.1	0.8	2.8	1.9	0.1	0.9	0.4	1.8
농업, 임업, 어업	-19.9	35.7	-12.4	13.1	3.4	6.5	9.2	6.7	-5.3	4.2	-4.0	-3.6	9.2
생산업 (건설업 제외)	-5.8	14.7	12.3	6.3	9.2	4.0	.8	3.6	9.0	0.3	4.4	5.4	7.4
*제조업 포함	1.2	19.5	20.8	8.5	7.6	9.4	6.0	3.4	12.3	1.1	4.3	5.9	8.8
건설업	31.5	17.1	22.2	2.7	-1.5	-3.8	-11.0	-8.1	-11.3	-14.2	-11.5	-6.5	-3.7
상업, 요식숙박 업, 교통업	16.6	13.1	10.8	2.4	2.0	0.8	3.5	10.2	4.3	5.7	5.8	1.6	1.5
금융업, 임대업, 서비스업	9.6	16.9	13.6	10.8	8.0	6.7	6.3	3.7	3.5	3.1	0.6	0.2	1.4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업	3.5	3.9	6.0	2.4	1.4	1.5	-1.1	2.1	1.0	-1.2	-0.2	-1.4	-1.1

자료: 연방주 통계청 거시경제지표 연구분과

1) 1995년 유럽 거시경제지표(ESVG) 산출기준. 베를린을 제외한 신연방주 지역. 2005년 2월 / 2004년 8월 현황.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근로자수 20명 이상의 제조업체 **수익률**이 과거 수년 동안 뚜렷이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매출 대비 수익률은 2002년 처음으로 1.5%를 기록, 1.3%를 기록한 구연방주보다도 높았다².

동서독 제조업체의 장기간 성장추이를 비교해 보면, 현재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동독 제조업은 56%가 성장, 11.6%의 성장세를 나타낸 구연방주를 훨씬 앞질렀다.
- 기업의 생산성은 매년 서독보다 빠르게 증가한 반면, 인건비는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했다.
- 그 결과 이미 1998년 동독 제조업체들의 평균 단위임금비용은 서독보다 낮게 나타났다(2004년 단위임금비용은 서독보다 9.4% 적은 수준이었다).
- 1998년 이후 4년이 경과한 2002년에는 동독 제조업의 수익률도 서독을 앞질렀다.
- 또한 동독 기업의 근로자 수는 7.3% 증가했으나, 같은 시기 구연방주에서는 5.7%가 감소했다.

이와 같은 성장세를 발판으로 지난 수년간 동독지역에 유럽의 기타 유수의 투자지역들을 제치고 BMW, Mercer Zellstoff, DHL, Lufthansa/Rolls Royce 사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산업입지선정**에 있어 신연방주는 잠재력을 갖춘 숙련 노동력, 임금협상 대상자의 유연성, 현대적 인프라, 목표지향적 투자 진흥책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이렇듯 **동독 산업은 동독의 전반적인 발전에 있어서 견인차적 역할**을 했다. 통일 초기와는 달리, 동독 산업에서 건설업의 비중은 대폭 감소하여 1998년에는 제조업 분야와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1998년 제조업은 전체 경제(총 부가가치 기준)의 13.4%를 차지, 13.3%를 기록한 건설업을 1991년 이래 처음으로 근소하지만 앞서게 됐다. 그림 A 2.1에서 보듯이 이후 격차는 더욱 급격하게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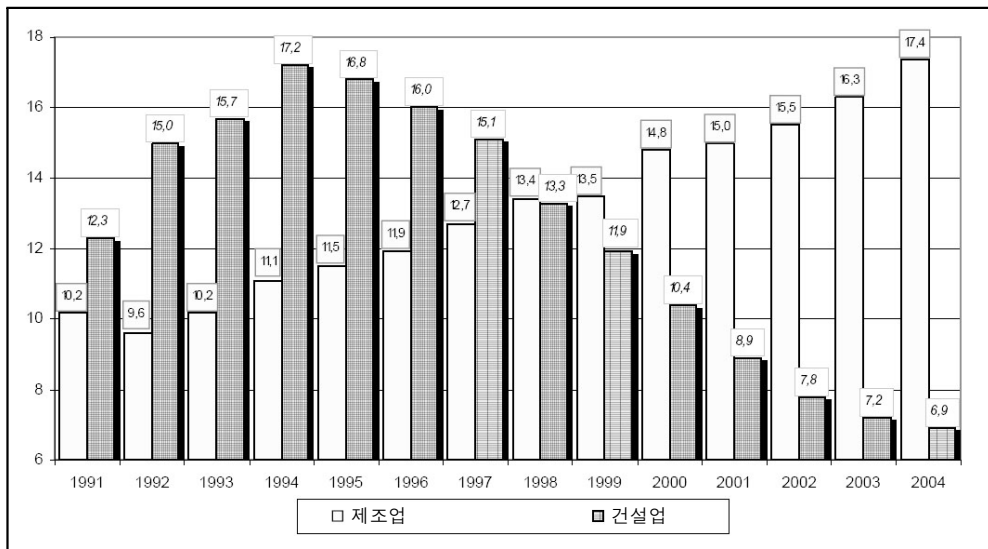
그러나 **건설업**은 2004년 과거와 마찬가지로 거시경제 성장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다.

² 출처: 2005년 3월 발간된 Brautzsch, H.-U.; Ludwig, U.의 <경제 개혁> 중 '회복 과정의 동독경제에서 기업의 수익'

물론 중기적으로는 건설업 분야가 안정되고 있는 형편이다. 2004년 신연방주의 건설부문 규모는 418억 유로로 전년대비 4.2%정도 줄어들었다. 전체 건설업 중 가장 크게 줄어든 분야는 토목공사 부문으로 약 6%가 감소해 평균치를 웃돌았다. 건축업은 4.1% 감소하여 평균을 조금 밑돌았고, 기타 생산부문(부품 및 완성품 조립공사, 건축설계 분야 등)은 2.1%가 감소해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그림 21 신연방주 제조업 및 건설업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1995년 물가 기준,¹⁾ %



1) 1995년 유럽 거시경제지표(ESVG) 산출기준. 베를린을 제외한 신연방주 지역. 2005년 2월 / 2004년 8월 현황.

신연방주에서 건설부문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건설분야의 구조조정 때문이다. 90년대 전반기 정부의 과도한 지원책은 공장과 주택을 지나치게 많이 짓게함으로써 결국 임대료가 다 되지 않는 사태를 초래했다. 동독 지역 건설업은 공급과잉인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장기적 수요에 부응하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건설업의 수주규모는 2004년 전년 대비 -6.8%로 하향세를 보였다. 지상건물 공사 및 지하공사 분야의 수주만이 각각 4.1%와 0.8% 증가하며 상승세를 나타냈다.

‘건설분야 주민 1인당 투자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건설업이 향후 계속 위축될 것이라

는 예상을 하게 한다. 1995년 신연방주 1인당 건설분야 투자액은 신규수요와 함께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서독 수준보다 75%나 높았다. 그 이후부터는 투자가 계속 위축되었다. 아직도 인프라 분야의 투자수요는 상대적으로 높게 존재하고는 있지만, 2003년 서독에 비해 실제 불과 4%정도(1995년 물가 기준) 밖에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는 건설분야의 안정화를 위해 투자를 촉진하고 광범위한 육성책을 고려하는 한편, 건설업 분야의 제반 여건을 개선(공공분야 건설용찰법 개정, 건설업 선(先)자격제 도입, 민관협력 강화, 건설계획과정 및 건설허가절차 간소화 등)하고 있다.

2.3 노동시장

동독지역 실업자수는 2004년 평균 24,000명 정도 줄었지만 실업률은 연평균 18.4%를 기록(전년 18.5%), 8.5%를 나타낸 서독보다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실업자수의 감소 규모인 24,000명 만큼 취업자수가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특히 1인 기업(Ich-AG)의 증가와 함께 적은 규모의 취업자수가 증가된 데 따른 것이었다. 반면, 사회보장의 수급 대상이 되는 취업자수는 줄어들어 2003년 대비 15만1천명이 감소, 2004년 12월 말 현재 503만 9천명을 기록했다.

한편 취업자수의 변화에서도 건설업과 제조업은 큰 차이를 보였다. 건설분야에서의 취업자수는 8.2%감소했으며, 실제 노동시간은 8.6%가 감소했다. 반면, 제조업은 2004년 취업자수는 1%가량 증가, 총 64만 명에 달했다.

지난 수년간 신연방주 노동시장이 건설업에 의해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지는 건설업의 취업자수 변화를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난다. 1996년 이후 건축 부문의 취업자수는 41만 8천명에서 2004년 19만 4천명으로 줄어들었다³. 토목건설 부문에서도 취업자수도 비슷하게 감소했다. 신연방주 건설업은 지난 9년 동안 40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잃었다. 동 기간 동안 건설업의 총 일자리 중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이것이 현재 신연방주에 높은 실업율을 초래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이상과 같이 노동시장은 각 산업분야별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시장의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현재 건설업이 겪고 있는 구조조정이 완료되어야 할 것이다.

³ 출처: 연방 통계청. 토목건축 전 분야에 걸친 취업자 수.

3

동독재건 촉진정책

독일 연방정부는 다음 두 원칙에 따라 신연방주 재건책을 추진하고 있다.

- 첫째, 신연방주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독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제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어젠더 2010(Agenda 2010)상의 노동시장 개혁, 사회보장제 개혁, 전문 수공업규정 개혁, 세제 개혁, 특히 관료주의 철폐 등을 동원, 연방정부는 늦게나마 개혁작업에 착수했으며, 성장과 고용을 위한 제반여건을 대폭 개선했다.
- 둘째, 신연방주만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신연방주의 취약점은 통일 이후 동독이 직면했던 문제점으로 예컨대 기업의 자기자본이 취약하고, 산업연구에의 참여율이 낮고, 일부 인프라의 미비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동독 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투자육성, 혁신지원 및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둔 특별 진흥책**을 개발했다. 이밖에도 주민의 근로기회와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구조조정의 부정적 여파를 줄이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펴고 있다.

이와 같은 특별 진흥책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연대협약-Ⅱ가 본 진흥책의 재정적 문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개별정책의 내용은 본 백서 제2부에 제시했다.

연방정부는 지난 해 위의 진흥책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중점산업 및 클러스터 육성책을 내놓았다. 이는 진흥책을 목표에 맞게 보다 구체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성장과 고용을 증진하기 위해서이다. 중요한 것은 진흥책들을 분별없이, ‘물뿌리개식’으로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다. 잠재하는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클러스터 진흥책은 해당 지역의 산업입지적 여건-그것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든, 아니면 특정 산업과 연계된 생산을 강화하는 것이든-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대책(경제진흥·교육·연구·노동시장 정책 등 각종 정책)을 통합, 포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기업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핵심성장 분야 및 중점 개발 부문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각 주정부와 산업 간의 긴밀한 대화통로를 유지하고 있다.

3.1 성장과 고용을 위한 개혁작업

신연방주는 물론, 독일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과거와 변함이 없는 **고(高)실업 현상**이다. 신연방주의 실업률을 특별히 낮추기 위해서는 동독 지역의 경제 재건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독일 지역 전반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창출하는 것이다.

독일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개혁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어젠다 2010을 통해 연방정부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내외적인 도전, 다시 말해 실업률의 지속적 감소와 함께 국제분업을 심화시키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미래지향적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고 세계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추어 자기 책임과 연대 의식을 새롭게 재정립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과 관련, 실업자 지원이 재정지원이 아닌 일자리를 (재)중개를 우선하는 원칙을 세웠다. 어젠다 2010은 현대적인 사회구조를 지속적으로 확립하면서도 사회적 균등화를 소홀히 하지 않는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여전히 높은 동독 지역의 실업률에 따라 정부는 실업수당-Ⅱ의 수혜자들이 사회적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통합에 주력하고 있다. 2005년 정부는 65억 5천만 유로의 실업수당을 지출, 이 중 42%를 신연방주에 투입했다. 이와 함께 실업수당 및 사회부조금을 새로운 실업수당-Ⅱ로 통합하고, 취업센터의 취업지원 및 일자리 중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기실업자와 경제활동력이 있는 사회부조금 수령자들이 부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탈피하고, 취업중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관료주의를 타파하자는 움직임이 독일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2005년 초 연방정부는 이와 같은 운동의 2차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본 운동과 관련이 있는 75개 프로젝트 중 29개가 이미 완료된 것을 알 수 있다. 관료주의 타파는 투자 대상지로서의 독일, 더 나아가 신연방주의 산업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3.2 신연방주 경제지원책

동독재건 계획의 두번째 축은 전반적인 경제여건 개선 외에도 투자, 혁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신연방주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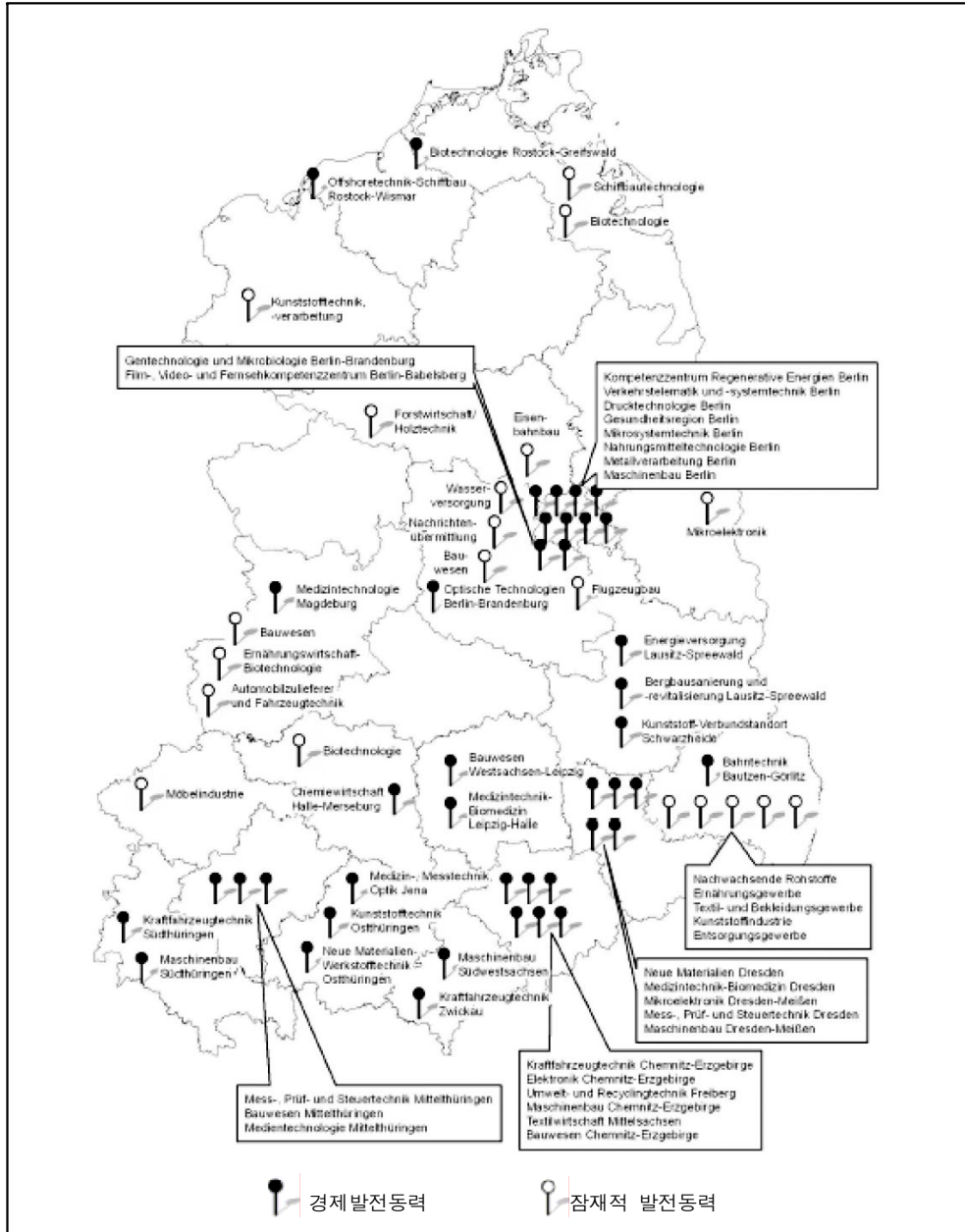
이와 같은 방안은 앞으로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지난 몇 년간 형성된 산업 및 혁신 동력 구축과 산업클러스터에 적용될 것이다. 산업클러스터 육성 및 성장동력 구축은 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국내외적으로 이미 여러 성공사례가 있다. 쾰른의 독일경제연구소(DIW)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금속 및 전자산업 클러스터에서 특히 좋은 성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즉,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사회보험에 가입된 취업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 클러스터에서는 1.9%~2.3% 증가한 반면, 클러스터 외 기업에서는 오히려 4.4%~7% 정도 감소했다.

신연방주 경제부흥 정책의 목표는 기존산업의 장점과 강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보완과 육성책을 기존의 생산 연계고리와 생산조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신연방주에서는 이미 여러 개의 산업 발전동력이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할레 경제연구소(IWH)가 신연방주를 대상으로 최초로 시도한 산업 및 기술의 발전잠재력의 구체적 연구⁴에서 알 수 있다. 신연방주에는 총 42개의 지역별 발전동력이 존재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⁴ IWH 연구: '동독 경제의 혁신적 전문분야와 생산네트워크 및 산업중점' (2004)

그림 3.1 동독 개발 대상 지역 경제발전동력 및 잠재적 발전동력⁵



출처: 할레 경제연구소(IWH)

⁵ 경제발전동력이 한 개 미만인 지역개발 대상 지역은 잠재적 성장동력 선정에 있어서 제외되었음.

지역별 발전동력은 고용통계와 특허출원통계를 바탕으로, 핵심산업부문과 생산네트워크 및 전문혁신부문의 존재여부와 상호작용을 기준으로 파악됐다. 메르제부르크의 화학공업, 드레스덴의 마이크로 전자산업, 아이제나흐를 비롯한 기타 지역의 자동차 산업, 베를린이나 그라이프스발트의 의학 및 생명공학과 해안지역의 조선업 외에도 제지, 목재 또는 원자재 산업을 비롯한 전통 산업부문과 농업 지역에서도 이른바 성장동력이 확인되었다. 그 밖에도 성장동력 지역으로 간주할 수 있는 최소 두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잠재적 성장동력 지역도 60개 정도로 파악되었다(그림 A 3.1 참고).

이와 같은 지역들은 성장동력과 전문분야들을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구체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성장동력 육성은 시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시장의 역할은 기업의 이해(利害)와 개별 주정부가 우선시 하는 정책에 달려있다. 이와 같은 시장과정을 통해 지역별 성장동력이 뿌리내릴 수 있으며, 주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역량도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강점 강화와 역점부문 집중’이라는 원칙하에 성장동력과 지역별 특수 잠재력이 보다 구체적으로 공동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육성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특히 협업과 재원의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

2004년 초 연방정부는 ‘통합적 투입’이라는 내용의 육성방안을 발의했다. 본 육성방안에는 투자, 연구, 인프라 육성에서 노동시장, 교육정책, 규제완화와 관료주의 철폐까지 아우르고 있다. 본 방안의 실천을 위해 정부와 연방주가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연방주 간 협력을 통해 얻은 첫 중요 결실은 ‘지역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GA)’의 형태로 새롭게 제시된 **클러스터 경영(Clustermanagement)**이라는 육성방안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협력네트워크와 클러스터 경영이라는 새로운 공동과제(GA) 진흥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진흥책의 목적은 기존의 지역 및 부문별 잠재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경제유관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3.2.1 정부와 주정부간의 대화

연방정부와 동독지역 주정부들은 지난 해 실무급 합동 회담을 열어 지원책의 핵심사안에 합의했다. 2005년 1월 31일 동독 지역 주정부 총리 회담(MPK-Ost)에서 이와 같

은 합의사항을 재차 확인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통해, 현재의 지원책을 합의된 핵심사안에 따라 발전시켜 나갈 것에 합의했다.

- EU 차원의 필수 구조조정기금의 확보 등 강력한 투자지원책 유지
- 혁신지원책의 활용 극대화
- 지역별·부문별 성장부문 집중지원책 수립, 여기에는 각 주정부별 향후 성장전략의 자율적 결정 및 수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 범주정부 차원의 산업부문별 회담 개최
- EU의 공동과제인 ‘농업구조 및 해안보호 개선(GAK)’과 ‘공동 농업정책(GAP)’의 틀 안에서 보다 강력하고 현실적인 지역별 중점산업 구축과 지역 발전정책의 지속적 추진
- 규제완화와 관료주의 철폐를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 추진

연대협약-Ⅱ를 기초로 정책을 추진하고 신연방주가 이를 실천하는 것이 동독재건의 안정적 기초가 된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산업과 지역에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 외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조직, 혁신 네트워크, 근로자를 위한 특별 직업교육을 포괄하는 통합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지원정책의 새로운 구축과 관련하여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주정부가 바로 브란덴부르크 주다. 브란덴부르크 주정부는 16개의 중점부문을 선정하고, 지원대상을 산업입지와 종속적인 부문과 독립적인 부문으로 구분했다. 이를 통해 물뿌리개식의 무차별적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적 특성을 중시하면서도 구체적이며 미래지향적 방식의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브란덴부르크 주는 역내 모든 산업부문의 성장 잠재력을 분석, 현재의 산업구조는 물론, 미래의 발전 전망까지 고려했다. 이를 통해 베를린과의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면서도 범지역적 16개의 유망업종이 선정되었다.

3.2.2 정부와 산업간 대화: 산업분야별 회의

지원책의 보다 효율적인 재정비를 위해 연방정부는 **산업계와 긴밀한 대화**에 힘쓰고 있다. 산업부문별 회의가 그 시초 형태다. 산업부문별 회의에는 다양한 주제와 주제별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동독의 각 산업 부문이 갖는 의미, 앞으로의 도전과제와 기회를 비롯하여 각 산업부문의 계획과 목표, 정책과 지원에 따른 구체적인 기대효과 등이 이에 해당된다.

2005년 3월 31일 동독재건 혁신회의를 시작으로 산업분야별 회의가 추진되었는데, 5월 9일 바이마르에서는 관광을 주제로 한 회의, 7월 11일과 12일 드레스덴에서는 자동차 산업발전 회의, 9월 6일 코트부스에서는 항공우주산업 회의가 개최되었다. 2006년에는 보건산업과 재정지원을 주제로 하는 회의가 열린다. 각종 회의는 경제단체와 주정부 간 긴밀한 협의 하에 계획, 진행된다. 지금까지 모든 회의에서는 산업핵심분야 구축, 클러스터 형성, 네트워크 발전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3.2.3 연대협약

연대협약-Ⅱ라는 견고한 재정적 바탕 위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동독재건의 제 2라운드를 추진하게 되었다. 연대협약-Ⅱ는 2004년 말 만료된 연대협약-Ⅰ을 계승하고 있다. 연대협약-Ⅱ에 따라 신연방주는 현재 일시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특별수요 연방지원금(SoBez)을 2019년까지 총 1050억 유로를 지원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지원은 신연방주로 하여금 동독재건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한다. 신연방주는 본 지원금을 규정에 따라 투자지원하는 동시에 재정능력이 저하된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도출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이상의 지원금 외 연방정부는 상기 기간 동안 총 목표금액 약 510억 유로를 재정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신연방주는 본 지원금을 동독 지역 재건 관련 프로그램과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동독 지역 재건을 위한 기본적인 구상은 동독지역 사회 전반에 걸친 단호한 개혁을 추진하고, 연대협약-Ⅱ와 같은 신연방주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있다.

4

인구구조의 변화: 신연방주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제

4.1 인구변화

독일 사회는 지난 수년간 저출산 및 고령화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인구구조상의 변화 발생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독일 연방통계청의 추정에 따르면, 독일 거주인구는 현재 8,240만에서 25년 후에는 8120만 명, 2050년에는 7,51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인구의 연령구조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취업가능 연령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25년 후에는 50%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 보인다. 인구변화의 정도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신연방주의 인구구조의 변화는 1990년 이후 경제구조의 붕괴, 이에 따라 야기된 높은 실업률과 신연방주 주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따른 서독지역으로의 이주에 기인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첫번째는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의 이주다. 그러나 그 반대로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의 규모 또한 적은 편이 아니다.

표 4.1 신연방주(베를린 포함)와 구연방주 간 인구이동 추세

	동독 총계	동독 -> 서독	서독 -> 동독
1991	-171376	269071	97695
1992	-95636	215221	119585
1993	-59846	179758	119912
1994	-33852	163958	130106
1995	-31338	164129	132791
1996	-26259	160085	133826
1997	-28520	159330	130810
1998	-41728	171509	129781
1999	-51464	183946	132482
2000	-68766	204283	135517
2001	-83181	208379	125198
2002	-76793	216168	139412
2003	-57699	195216	137517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두번째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신연방주 지역의 출산율 저하다. 1990년 이후 신연방주의 여성 1인당 자녀 수는 사상 최저치인 1.0명으로 추락했다. 반면, 구연방주는 1.4명을 나타냈다. 다행히 1994년 이후, 동독에서 출산율이 다소 늘어나 출산율은 현재 여성 1명 당 1.2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2002년~2010년에는 신연방주의 출산 증가율은 5%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동서독 간의 출산율 격차는 사실상 해소될 것이다.

출산율 저하는 연령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지난 수 년 동안 신연방주에서는 청소년의 비중이 이미 크게 줄어들었다. 아동 및 청소년이 동독지역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1년 40.1%에서 2004년 28.1%로 줄어들었다. 반면, 노년층 비율은 같은 기간 22.8%에서 32.4%로 증가했다.⁶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독지역의 5세~29세 인구비중은 현재 26%에서 2020년 약 18%로 감소하는 반면,

⁶ 아동 및 청소년 비율은 20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 중 20세 미만인 인구비율을 의미함. 노인 비율은 20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의미함.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18%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 약 27%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연령구조의 변화는 동독 노동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어 실업률 감소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동독 지역 인구구조 변화의 세번째 양상은 **동독지역 내 이주다**.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지역은 특히 도시지역 근교, 예컨대 베를린 지역 근교 등이다. 반면, 외곽의 농촌 지역과 중간 규모의 도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동독 지역 내에서의 인구이동은 지역별 경제발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신연방주에서는 제조업이 급격히 성장했고 현대적 서비스 기업이 정착한 덕분에 발전가능성이 높은 다수의 경제 성장 거점지역이 나타나기도 했다.

4.2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인구구조 변화는 거대한 도전으로 지금부터라도 책임감 있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구구조 변화는 교통 및 주거 인프라 구축을 비롯하여, 보건 및 교육제도와 사회·문화적 시설관리 및 공공재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공현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노동력 수급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현재는 노동력의 공급과잉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십 년 이내 전문분야에서의 노동력 부족 사태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신연방주의 성장 잠재력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공공재정 분야 역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어 지금부터라도 변화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재정의 안정화를 기하려면 주정부의 재정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삭감과 공공재정의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신연방주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는 대책은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이 되는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이주물결과 저출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개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나 생활계획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부드러운 입지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이주결정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가족친화적인 주거환경 및 근로 환경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의 사회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불가피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혁신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방 정부는 독일 전체 지역에 걸쳐 이와 같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 6월 시작한 ‘경험이 미래이다’라는 이니셔티브(www.erfahrung-ist-zukunft.de)를 통해 고령자의 능력과 잠재력을 경제분야와 사회분야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동독은 구연방주에 비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각종 변화 현상을 상대적으로 일찍, 깊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의 사회적 활동 촉진에 있어 선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4.3 아이디어 발상지로서의 동독

동독지역의 **도시재건** 사업은 수요감소에 따라 주택수급을 조정하기 위한 모델로 발전했다. 특히, 신규건설을 축소하는 대신 도심주거지 및 중심지를 재건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여건을 크게 개선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동독 도시재건에서 얻은 경험은 구연방주가 시행하는 비슷한 프로젝트인 서독 도시개혁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해답을 제시해주었다.

신연방주는 보건부문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큰 변화는 응급 및 입원 치료의 엄격한 경계를 허문 것이다. 두 종류의 치료를 밀접히 연계하여, 예를 들어 일반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가능케 함으로써, 지역별로 보다 높은 수준의 보건제도를 갖출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의료보험 의무가입을 개선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보건분야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하였는데, 이 역시 수준 높은 보건제도라는 목표에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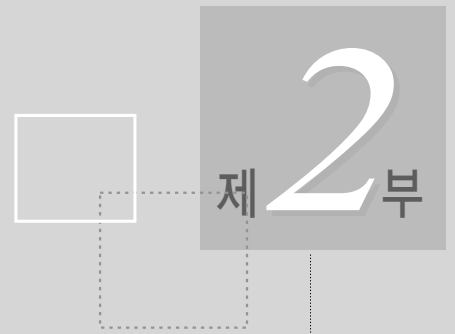
보건 중심지 구축은 동독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종합진료(polikliniken)를 토대로 하고 있다. 종합진료는 원스톱 응급치료, 의료시설의 공동이용, 이종진료 방식을 가능케 한다. 또 의료진을 행정업무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시켜 높은 효율성을 보장해 준다.

한편 학교교육과 관련, 교육적 측면에서나 학생과 학부모의 일상적 편리를 위해서나 **학교**의 지리적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학생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매력적이면서도 주거지와 최대한 가까운 학교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에서 선별된 학교에서는 학년별 차이를 두지 않는 통합수업을 하고 중앙식 행정체계를 갖춘 학교연합을 설치하며, 또 학생수의 감소 추세 속에서 학교입지로 여러 개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인구감소, 특히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는 **행정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지방정부가 효율적이고 현대적이며 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주는 지속 가능한 지자체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관청 및 여러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새로운 거대행정구역이 생겨 주정부로부터 다양한 업무를 인계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행정이 보다 주민들과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결국 중요한 의사결정이 각 주의 행정구역 내에서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전혀 새로운 형태의 행정시스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작센 주에서는 ‘굴러가는 행정’이라는 개념이 있다. 행정이 지역마다 국민들을 향해 간다는 의미이다. 더 이상 거꾸로가 아닌 것이다.

인구수의 감소세 속에서 농촌지역을 근거리 대중교통망에 통합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기존의 재래식 시설로는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이동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독일 교육연구부에서 추진하는 시범프로젝트인 ‘임펄스 2005(IMPULS 2005)’의 일환으로 농촌지역에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시범프로젝트가 추진된 지역은 브란덴부르크 주 동북부로 여기서는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운행하는 콜버스나 대중버스인 그란제(Gransee)를 운영한다. 그란제는 명예 퇴직한 운전수들을 투입하는데, 이로써 주민들에게 이동성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사회참여 유도에도 기여하고 있다⁷.

⁷ www.impuls-2005.de



동독지역 재건 프로그램과 정책지원



독일통일백서 2005

1

경제지원

건실하고 역동적인 기업이 많이 존재해야 신연방주가 바람직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 동독 발전의 핵심전략은 바로 경제재건이다.

1.1 투자활동지원

투자촉진의 기본 축은 지역경제구조개선을 위한 공동과제(GA)와 투자보조금이다. 또한 이에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재건은행(KfW)의 저이자 대출과 참여프로그램이다.

1.1.1 신연방주 생산경제를 위한 투자보조금

투자보조금은 법적 조세수단으로 신연방주의 제조업과 생산형 서비스 부문의 초기투자에 투자액의 최대 25%(국경 인접지역에는 2.5% 추가로)까지 지원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유럽통합구상(EU-Konform)에 따라 지원기간을 2004년에서 2006년까지 2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이를 통해 동독경제의 재건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조업 분야에서 투자 및 성장을 촉진함과 동시에 고용창출을 도모한다.

1.1.2 연방 및 주정부의 ‘지역경제 구조개선을 위한 공동과제’

지역경제구조개선을 위한 공동과제(GA) 프로젝트는 제조업 부문에서의 투자와 경제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신연방주에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예산을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투자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2년~2004년까지 지난 3년간 공동과제(GA) 프로젝트를 통해 신연방주와 베를린에 63억 유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약 264억 유로의 투자가 이뤄졌다. 또한 제조업 부문에서 6만 6천건의 신규 정규직(이 중 2만 1천건이 여성취업)이 창출되었고, 기존의 계약직 21만 2천건이 정규직(이 중 5만 9천건이 여성취업)으로 전환되었다.

2005년 6억 5,000만 유로의 정부예산이 신연방주와 베를린의 프로젝트 지원금으로 책정되었다. 게다가 정부지원 사업에서 발생한 정부 몫의 이익금이 2005년 처음으로 새로운 공동과제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신규 채용 의무가 있는 기업이 신규투자를 계획할 경우, 각각 5억 8,900만 유로를 지원하고 그 밖에도 각 주정부가 유럽지역발전기금(EFRE)을 지원 받아 신규투자에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총 16억 유로가 기업의 신규 투자와 신연방주의 경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마련되었다.

지역경제구조개선을 위한 공동과제(GA) 프로젝트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주(州) 단위의 프로그램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를 위해 2001년에서 2004년까지 경영 컨설팅, 교육, 인재양성, FuE-계획에 이미 1억 4,200만 유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다.

현재 신연방주에서는 공동과제(GA)의 일환으로 32개의 지역경영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각 지역의 기업이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하고 있는 본 프로젝트는 지역의 통합발전안의 개발과 실행, 지역의 네트워크 및 커뮤니케이션 구축, 특화산업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지역경제의 역량발휘와 지역 마케팅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2006년 말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신연방주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개발되어 시행될 것이다.

협력 네트워크와 클러스터 경영

2005년 1월 1일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협력 네트워크와 클러스터 육성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경제구조개선을 위한 공동과제(GA) 프로그램을 확대시켰다. 이 새로운 지원책의 목적은 기업과 경제관련기관 간의 지역적, 범지역적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다양한 관련 주체들 간의 협력은 기존의 잠재력과 지역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지원책은 다음 사항에 초점을 두고 있다.

- 기업, 기관, 지역 사회 간의 협력체제 개선을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 추진
- 기업간 정보망 구축
- 기업과 경제관련 기관 간의 기술이전 강화
- 기업의 혁신과정에 외부 지식 도입
- 기업 간 노하우의 용이한 교환

협력 네트워크와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공동과제(GA) 프로젝트의 시험기간은 최대 3년이며, 투입액은 총 30만 유로이다. 규모가 큰 프로젝트의 경우, 50만 유로까지 지원된다. 본 프로젝트의 지속을 위해서는 참여 단체 자체적으로 적절한 재정조달이 필요하다(자체조달이 최소한 30%는 되어야 한다).

1.2 산업투자위원회(Industrial Investment Council, IIC)를 통한 투자자 유치

외국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이 향후 신연방주의 중요 과제다. 연방정부와 신연방주정부가 약 절반씩 재정지원을 하여 운영되는 산업투자위원회는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 기업을 위해 산업입지분석과 투자 결정 및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투자위원회에는 전망이 밝은 선별된 산업부문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외국투자자들을 위해 자문을 제공한다. 이들은 외국투자자들을 위해 시장, 하청구조, 비용 등을 분석하고, 투자안을 기획해주고, 적합한 산업입지를 찾아준다. 또 필요할 경우, 동독에서 적합한 협력 파트너

나 참여자를 찾아주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업투자위원회는 신연방주에 현재까지 43억 유로에 달하는 100건의 투자를 유치했고, 이를 통해 1만 7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신연방주의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유치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와 같은 활동을 위해 산업투자위원회는 그 활동기간을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연장했다. 연방정부는 현재 산업투자위원회가 지출하는 금액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

1.3 EU 차원의 구조조정지원

EU는 구조조정 지원의 일환으로 1991년부터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의 경제재건을 돕고 있다. EU의 구조조정 지원기금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주관하는 프로젝트들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2000년에서 2006년 사이 독일에 지원되는 유럽 구조조정지원기금은 330억 유로에 달한다(2004년 물가 기준). 이 기금은 여전히 낙후된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들의 동일한 구매력을 기준으로 1인당 GDP는 유럽 평균의 75%를 밑돌기 때문에 유럽구조조정지원 기금은 이 지역들을 우선 지원지역 즉, 지원의 제1 목표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동베를린은 이 범주에 들지는 않지만 제1 목표 해당지역으로 간주, 과도기 지원금을 받는다. 2005년까지는 유럽지역발전기금(EFRE)으로부터 2006년까지는 기타 구조조정지원기금-유럽사회기금(ESF), 유럽지역농업발전기금(EAGF-A)으로부터 지원받는다. 독일의 제1목표 지원은 3개의 연방프로그램과 6개의 주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공동지원구상을 토대로 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신연방주에 약 220억 유로가 지원된다. 여기에다 공동 이니셔티브 명목으로 신연방주와 구연방주에 총 18억 유로가 추가 지원된다.

EU의 지원금은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인프라 확충, 환경보호 및 개선, 노동시장의 정책적 지원, 기회균등 지원, 남녀평등, 농어촌 발전을 위해 투입된다.

1.3.1 유럽 구조조정지원 전망

2004년 7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07년부터 추진되는 구조조정지원 계획안을 제

출했다. 본 계획안은 2007년에서 2013년까지 1천억 유로를 지원하고 내용적으로나 지리적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EU의 전 지역, 비교적 경제구조가 탄탄한 지역까지도 지원 가능토록 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지금까지 경제구조가 취약한 지역과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지역에만 제한되었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집행위원회는 EU의 기존 회원국들에 비해 경제력이 약한 10개, 2007년부터는 12개 국가가 유럽연합에 가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적, 내용적 문제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독일 연방정부는 빠듯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정책을 실현해야 하는 여건을 감안하여, 확대된 EU에서는 지원이 절실한 지역에 구조조정지원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신연방주들도 포함된다.

연방정부는 지원이 필요한 제1목표지역 선정 기준으로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유럽연합 평균의 75% 이하인 지역으로 하자는 유럽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국가 간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을 공평하게 다루도록 힘쓰고 있다. 새로 지정될 제1 목표지역들에 대해 해당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신연방주의 대부분이 기준치 75%를 넘지 못해 제1 목표지역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브란덴부르크 남서부 지역, 라이프치히, 할레만이 75% 문턱을 넘고 있다. 연방정부는 GDP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회 및 경제적 발전상태에 따라 차별화된 과도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4 중소기업의 신용보장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신용대출 확대를 위해 재건은행과 창업투자보조대출(이하 ERP)-특별기금은 2005년 4월 1일자로 각 기업의 상황에 알맞은 이자조건을 지원 프로그램에 도입했다. 이를 통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은 신용상태를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는 주거은행의 위험부담비용이 대출이자보다 높아 은행의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신용등급도 낮고 안정성도 떨어지는 기업들도 이제는 신용 하락의 위험을 감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본 제도를 통해 기업들

은 자기자본율을 증대하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게 된다. 신용등급이 높고 안정성 있는 기업이 저금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제도는 도입된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효과에 대한 보고는 아직 없다. 하지만 은행연합이 위험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방식을 재조정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있고, 시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공언하였기 때문에 신연방주에서의 지원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도 현재 ERP-혁신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이 혁신적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재원확보를 더 수월하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으로 재정비되고 있는 중이다. 금리는 앞으로 더 내려가 시장여건에 따라서는 약 2%대가 될 것이다. 재정비될 혁신프로그램은 외자유치와 후순위대출이 복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적 기업에게는 ‘자본-노동 혁신을 위한 자본’과 유사한, 반(半) 자기자본이 제공될 것이다. 이를 통해 신연방주들이 이득을 보게 될 것인 바, 이는 재정비된 프로그램을 통한 추가적인 금리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5 창업육성

중소기업정책의 핵심은 창업자들과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문과 교육이다. 창업자들은 창업 구상안의 실천단계에서 지원을 받는다. 2004년에는 창업기업과 기존 기업을 위한 자문에 3천5백만 유로가 사용되었으며, 이 중 35%가 신연방주에 투입되었다. 신연방주에서 총 2만 5천여개 창업 및 기존기업에 대한 자문이 이뤄졌고, 4만 9천명의 창업자와 기업가, 기업경영진이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또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을 받은 상공회의소와 협회에 의해 약 5만 7천 건의 자문이 이뤄졌다. 이중 1만 6천5백 건은 신연방주에서 이뤄졌는데, 이 중 창업자문은 6천5백건에 달했다.

연방정부의 목표는 ‘독일 창업자서비스’를 통해 창업자들과 신생 기업에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공회의소와 KfW-은행그룹, 연방직업소개소, 경제육성협회와 같은 기타 단체들은 하나의 연합체를 결성했다. 또한 포털사이트 www.existenzgruender.de와 정보 핫라인(Info-Hotline)을 통해 창업자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다.

나아가 창업자의 날과 같은 행사를 열어 창업자들에게 독일 창업자서비스의 대표들 앞에서 자신들이 구상하는 창업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창업안을 검토한 후, 실행에 필요한 부분을 자문해준다. 뿐만 아니라 창업 준비자들은 창업안 실행시, 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Coach)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창업자 코칭제도를 통해 창업과정과 시간을 단축하고 창업 구상안의 세부사항을 재조정하는 한편, 사업에 적합한 상담을 받도록 함으로써 창업자들의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신연방주에서 정보 및 자문 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컸기 때문에 정부는 2003년 7월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노이브란덴부르크), 작센(라이프치히), 베를린에서 '독일 창업자서비스'를 시범 실시했고, 현재는 이 서비스가 12개의 연방주(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 등)로 확대된 상태다.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협력하여 이 서비스를 독일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창업자 코칭제도는 유럽사회기금(ESF)과 재건은행에서 재원을 지원 받는다.

연방정부는 재건은행과 재계의 협조를 얻어, 신연방주의 전문대학이 창업스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오늘날 독일에는 56개의 창업스쿨이 있는데, 그 중 45개는 정원을 다 채운 상태에서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 작센, 튀링엔 등 총 15개 주에서는 일반 인문계 학교에서 프로젝트-JUNIOR를 운영, 기업가적 능력을 키우고 있다. 작년엔 4천명의 학생이 수강했고 300개의 기업이 설립되었다. 이러한 학생기업은 주(州)대회에서 심사를 통과하면 연방 대회에 출전, 경합을 벌여 '올해의 JUNIOR-기업'에 선정될 수 있다.

1.5.1 신생 혁신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기술적으로 위험부담을 안고 있고,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신 투자프로젝트는 자금조달에 난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충분한 제품 판매실적이 없어 혁신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에 자체자금력이 없는 젊은 벤처기업들이 그러하다. 이처럼 위험부담이 높은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에 은행을 통한 벤처자본(Venture Capital)의 지원은 큰 의미를 갖는다.

벤처자본 시장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2004년 초기투자는 3억 5천4백만 유로로 1998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해외 시장과 비교했을 때 독일은 붕괴의 여파가 특히 심각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고 있다. 기술부문에 대한 창업투자는 지난 해 중단됨으로써 신연방주들은 이 때문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2001년에는 베를린을 제외한 신연방주 22개의 벤처투자회사에서 자금을 조달받은 반면, 2004년에는 단 4건만이 성공했을 뿐이다. 다만 공공기금의 지원은 여전히 안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부족한 벤처자본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지원체계를 만들었다. 지난해 초부터 유럽투자기금(EIF)과 특별성장자본금(창업, 투자지원 대출 프로그램-ERP)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5억 유로 규모의 새로운 공동참여기금이 그것이다. 이 기금은 초기지원에 중점을 두고 이후의 기술이전과 후속 자금지원을 도모한다. 그 밖에 2004년 11월부터 2억 5천만 유로 규모의 ERP-착수기금이 시장에 투입된 상태다. ERP-착수기금은 금융시장의 '선 투자자(Lead-Investor)'같은 역할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동등한 조건으로 각 기업에 여러 단계에 걸쳐 3백만 유로씩 지원한다.

새로운 지원체계의 세 번째 축은 연구관련 창업에 대한 지원이다. 연방총리의 혁신이니셔티브 '혁신을 위한 파트너(Partner for Innovation)'의 일환으로 연방정부, 재계, 재건은행은 새로운 하이테크 창업기금을 출연했다. 이 기금의 지원대상은 주로 2003년 말 종료된 신연방주를 위한 프로그램(FUTOUR)의 참가업체들이다. 하이테크 창업기금은 기업 당 평균 50만 유로, 예외적으로 100만 유로까지 지원한다. 이로써 신연방주에서는 창업시의 자기자본요건이 완화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지원받은 기업들이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연구지원프로그램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 두었다.

1.5.2 EXIST - 고등교육기관 출신자의 창업

현재 EXIST 프로그램에는 28개의 EXIST 지역이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성은 이 중 15개 지역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는 5천3백만 유로 이상이 지원된다. 이 중 3천4백만 유로는 기존에 선발된 5개의 EXIST-시범지역(1998년~2005년)에, 천만 유로는 추가로 선발된 10개의 EXIST-이전(Transfer)지역(2002년부터 2005년까지 네트워크 1개당 1백만 유로)에 투입된다.

EXIST-Seed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99년 12월부터 600만 유로 이상을 투입하여, 선별된 EXIST-지역 내 전문대학의 230여 개의 창업계획을 지원했다. 이 계획들은 모두 실행 전 초기단계 것들이었다. 또한 대학원 후속프로그램(EXIST-HighTEPP)의 일환으로, 160만 유로를 투입하여 기업가정신을 가진 학문적 후진과, 하이테크 기업의 후진 경영자를 양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시책들은 지금까지 큰 성공을 거두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5곳의 EXIST 지역에서 그 동안 1천 6백여 개의 혁신기업이 설립되었다. EXIST-Seed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 중 90%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졌고, 평균 4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또한 재계, 금융계, 전문교육기관과 학계의 대표로 구성된 EXIST-전문위원회가 EXIST 지역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1.5.3 여성창업자들을 위한 연방 에이전시

창업은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다. 이들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조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혁신을 꾀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높아져 오늘날 전체 노동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자영업자는 전체 근로여성인구의 7%를 밑돌아 남성의 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연방정부는 여성창업자를 위한 연방 에이전시(bga)를 설립해 창업의 전 부문에서 그리고 전 단계에서 여성들에게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1.6 판매와 수출 촉진

지난 해 동독 이외의 지역에서 동독제품의 판매가 증가하여, 제조업의 수출비중이 24.5%에서 25.5%로 상승했다. 하지만 이는 서독의 40.9%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신연방주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제품 경쟁력의 향상과 이에 따른 성과를 거두고는 있지만,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그 원인으로는 뭐니 뭐니해도 경영능력의 부족과 해외시장에서의 경험부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연방정부는 2005년 시장지원프로그램을 수립, 해외시장 진출을 특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동

독의 서비스분야의 수출을 위해 2003년 연방정부는 국제금융공사(이하 IFC)와 '독일/IFC-동독 컨설턴트 신용기금(CTF)'을 출연기로 합의했다. 그 첫 지원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1.7 관료주의 철폐

2005년 6월 21일 결의된 「지역 관료주의 철폐와 규제완화 이행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지역 관료주의 철폐와 규제완화'프로젝트의 제1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연방경제노동성은 본 프로젝트를 연방정부의 관료주의 철폐 이니셔티브의 일부로서 시행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의 제1단계에서 브레멘, 동(東)베스트팔렌-리페, 서(西)메클린부르크 지역이 내놓았던 제안들이 상기 법률을 통해 시행되었다. 중개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연방주에서는 계속해서 건의를 제출했다. 매우 다양한 법률분야가 거론되었다. 이를 통해 환경법과 상법상의 관료주의적 규제가 철폐될 수 있었다.

연방주들이 건의한 수많은 제안들은 입법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실천되기도 했다. 그 중 한 예가 연 매출이 50만 유로 이하인 신연방주의 기업에 대해 영업세 부과를 연장해준 것이다.

프로젝트의 제2단계도 지역 관료주의 철폐와 규제완화에 대한 건의를 모아 실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신고마감일인 2005년 4월 30일까지 프로젝트의 참여의사를 밝힌 지역은 모두 28곳이며, 이 중 상당수가 신연방주 지역에 속해 있다. 각 지역은 2005년 7월 31일까지 관료주의 철폐를 위한 방안을 최대 10개까지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혁신지원

연방정부가 혁신력 강화를 지원책의 제2과제로 설정,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지난 수 년간 크게 확대되었다. 연방정부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수립, 당면한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맞서고 있다. 그 중 특히 중요한 것이 혁신구조를 네트워크화하고 지역별 장점을 개발하는 것이다.

2.1 기업의 연구 지원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의 혁신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1월 1일부로 '낙후지역 성장동력의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 (INNO-WATT)'이 도입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2003년 말 성공적으로 마친 동독 연구개발 특별 프로그램(FuE)을 계승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름아닌 낙후지역의 경제회복을 촉진하는 것이다. 동독지역 주정부 전체와 동서 베를린 전체 지역도 본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지역이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부문의 중소기업(근로자 수 250명 이하인 기업)과 연구개발의 결과를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적용하거나 중소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기업 외부 산업연구

기관이다. 이들 기업이나 기관들은 해당지역의 성장동력이라고 입증되어야만 지원 대상이 된다.

이미 시행 첫 해부터 본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으며 효과를 보았다. 프로그램 신청의 60%가 처음 참여하는 단체들이었다. 2004년 동독 연구개발 프로그램(FuE)관련 중소기업의 약 35%가 '신연방주 중소기업과 외부연구기관의 연구, 개발, 혁신 특별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다. 이를 통해 신연방주에서 주류를 이루는 기업형태인 중소기업들이 크게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4년 '연구개발 특별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결과는 이러한 방식의 기업 지원책의 성과와 효율성을 입증해주었다. 2001년에서 2004년 사이 지원을 받은 제조업체의 매출과 고용이 각각 평균 30%, 2.7% 증가했다. 1 유로의 지원금 1 유로 당 판매는 약 14 유로 증가한 것이다.

2.2 네트워크 강화: 기업과 과학의 기술역량 접목

2.2.1 기술역량 네트워크

기술역량 강화는 연방정부의 연구·혁신정책의 핵심이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고려에서 비롯된다.

신기술 없이 기업이 혁신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우수한 과학기술적 인프라 구축은 중요한 산업입지요소가 된다. 산학 간 연구가 훌륭한 파트너십을 통해 공공 연구의 잠재력을 개발하느냐에 따라 혁신에 대한 성공이 좌우된다.

표 2.1 기술역량 네트워크 I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지역

기술역량 네트워크 수: 9

예: '교통체계기법의 연구 및 응용 단체 간의 산연(産研) 네트워크'(FAV). FAV는 대서양에서부터 우랄산맥에 걸쳐 유럽의 여러 지역과 협력하며, 국제적인 교통요지가 되는데 기여했다.

가티스레벤-막데부르크 지역

기술역량 네트워크 수: 1

예: 'Innoplanta'. 노르트하르츠/뵘르데 지역이 전통적으로 '식물재배의 기원'임을 연관지은 이 기술역량 네트워크는 연방정부의 지역혁신(InnoRegio)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고, 식물 생명공학 분야의 총 34개 개발프로젝트 중 60명의 파트너를 네트워크로 묶었다.

그라이스발트-로슈토크-비스마르크 지역

기술역량 네트워크 수: 4

예: 'BioCon-Valley'는 생명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지역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집결시켰다. BioCon-Valley는 발트해 연안국가의 기술역량을 모아, 발트해 지역을 세계적인 생태지역으로 발전시킨 ScanBalt-이니셔티브의 일환이다.

국제적인 혁신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동독에서는 특히 이와 같은 네트워크가 지역의 역량강화,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관련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동독에 있어 통일은 기존의 혁신시스템 구조가 붕괴되고, 서서히 새로운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했다. 기술역량 네트워크 구축은 혁신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우수한 혁신환경을 동독지역에 조성함으로써 시장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기술역량 네트워크의 구축은 지역성장의 발판이자 우수한 젊은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인적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현재 동독의 인구구조의 변화

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기술역량 네트워크의 구축이 신연방주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급인력이 해당지역을 떠나는 것을 막아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기술역량 네트워크는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평판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기술역량 네트워크를 통해 동독 지역이 국제적인 입지경쟁 역량을 축적, 국내외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는 매력적 옵션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 마지막으로 동독은 유럽연합 신생 회원국들과 연결되는 지역적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신연방주의 기술역량 네트워크는 바로 국제적 네트워크(예: 발트해 지역 기술역량 네트워크)의 연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독 신연방주들은 서독과 서유럽 기업가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이 된다.

“독일 기술역량 네트워크 이니셔티브(kompetenznetz.de)”는 고도의 경쟁과정을 거친 네트워크 단체로서 해당지역이 네트워크 경영을 하게 함으로써 독일은 물론, 국제적으로 훌륭한 네트워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kompetenznetz.de 이니셔티브의 122개 회원 가운데, 21개는 동독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거점지역은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그라이스발트-로슈토크-비스마르크, 가터스레벤-막데부르크, 드레스덴, 쾰른, 예나-일메나우-에어푸르트 등이다. 이 지역들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생동감 넘치는 혁신지역으로 발돋움했다(표 2.1과 2.2 비교).

표 2.2 기술역량 네트워크 II

드레스덴 지역

기술역량 네트워크 수: 2

예: 'Silicon Saxony': 반도체산업과 마이크로 전자공학의 기술역량 네트워크. 129개의 회원들은 칩 생산업체 AMD, Infineon, ZMD, Wacker Siltronic AG, TU-Dresden, Fraunhofer-연구소 8개, 중소 마이크로 전자업체들 등이다. 이 중 가장 비중있는 협력 프로젝트로는 AMD, Du Pont Photomasks, Infineon사가 조인트 벤처로 설립한 AMTC(Advanced Mask Technology Center)가 있다.

기술삼각편대 예나-일메나우-에어푸르트

기술역량 네트워크 수: 4

예: BioRegio-경합에서 탄생한 'Kompetenznetz BioInstrumente Jena(예나 바이오 기술역량 네트워크)'는 31개의 신생 바이오 테크놀러지 기업을 탄생시켰고, 또 기존기업이 'BioInstrument'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케 하여, 지금까지 이 부문에 엄청난 규모의 개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 기여했다.

2.2.2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증대 프로그램, PRO INNO II

연방정부는 2004년 중반 새로 도입된 연방차원의 중소기업혁신역량증대 프로그램(이하 PRO INNO II)을 통해 기업과 연구기관간의 연구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연구성과를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PRO INNO II는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기술분야, 협력형태, 국내외 협력 파트너를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촉진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독일 내 5만 개 혁신적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신연방주에서 크게 활용되고 있다. 독일 전체에서 허가된 프로젝트와 자금 중 거의 60%가 신연방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PRO INNO I 과 II를 통해 신연방주에서만 4,246건, 총 약 4억 천4백만 유로가 지원되었다. 이로써 동독 연구개발 프로그램 (FuE)의 규모는 약 12억 7천만

유로에 달했고, 2,920개의 기업과 330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시장중심적인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지원 중인 연구개발(FuE) 프로그램에만 매년 4천여명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종료되고 개발 신상품이 시장진입에 성공한 후 2년이 지난 생산단계에서 새로 창출된 일자리나 기존에 유지되는 일자리가 평균 8단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PRO INNO I의 후속프로그램으로서 PRO INNO II는 자금지원 신청기회를 보다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 세계적인 연구개발·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2.3 동독지역 네트워크경영(NEMO)

2002년 이래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독지역 네트워크경영 지원대회는 신연방 주에서 혁신적 경제 네트워크가 형성·발전하도록 촉진하고 있다. 외부의 전문 기술 및 경영 능력을 육성·장려함으로써, 구서독 지역에서는 이미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네트워크를 신연방주에도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독에 소재한 기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더 큰 기술역량을 가지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미 중요한 기술 분야에서 이같은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323건의 지원신청 가운데, 95개 프로젝트가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총 천8백만 유로가 투입되었다. 현재 총 750개의 중소기업들과 1만 3천 여명의 종사자(이 중 3,160명은 연구개발 분야 종사자들임)가 네트워크에 편입되어 있으며, 매출액은 약 17억 8천만 유로에 달한다. 여러 연구기관, 특히 실기중심인 동독의 여러 종합대학(Universität)과 전문대학(Hochschule)들도 이 네트워크의 일원이다. 이들 네트워크 기업들은 2~3년 내, 평균성장률 10%에 해당하는 1,3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그 밖에 전국적 규모의 네트워크들이 일부 있는데, 모든 신연방 주가 이에 포함된 상태이다. 지원대상이 되는 네트워크는 정보통신과 같은 미래기술 분야에서부터 재생에너지, 환경보호나 안전한 식량 확보 기술같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테크놀러지의 전(全)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2.3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지역 혁신기업

연방정부가 지난 1998년부터 신연방주를 위해 혁신정책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지역중심적인 혁신 이니셔티브인 ‘지역 혁신기업’이 탄생했다. ‘지역 혁신기업’은 현재 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되는 모든 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의 혁신잠재력을 찾아내어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략적 중요성은 산학협력과 기업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있다.

현재까지 중소기업과 연구교육 기관이 모인 112개 지역혁신조직이 제안한 1,500여 개 혁신사업에 지원이 이뤄졌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지원방식인 지역중심의 혁신 이니셔티브 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성공은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의 시장지향적인 혁신전략이 일개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차원을 넘어 지역 클러스터의 강화를 촉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증거로서 50개의 기업이 신규 설립되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특허신청이 쇄도하고 지역경제의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학과와 직업훈련이 도입된 것을 들 수 있다.

지역 혁신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1999년 2억5,600만 유로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지역 혁신(InnoRegio) 프로그램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5개 지역 혁신기업 프로그램에서는 이보다 두 배 이상의 지원금이 투입되고 있다. 5개의 혁신기업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2.3.1 지역혁신(InnoRegio) (1999년~2006년)

공동 혁신구상안을 가진 교육기관과 연구기관 간, 기업과 행정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23개의 InnoRegio 프로그램, 총 1,100개의 개별기획안이 승인되었으며, 2억 유로 이상 지원되었다. 이와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각 해당 지역에서는 경제성장과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주요 전제조건인 산·학 협력 체계가 형성되었다.

표 2.3 InnoRegio 지원 예

‘InnTex’

중부 작센의 섬유공업지대에서 형성된 InnoRegio의 독일의 최대 섬유기술연구계획 ‘InnTex’의 일환으로, 11개 기업이 설립되었다. 이로써 272개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됐고, 기존의 950개의 일자리가 보전되었다. 현재 140여 개 파트너업체를 보유한 이 혁신 프로젝트는 수많은 혁신적 제품을 생산하여 자동차, 건설, 의료기관에 투입하고 있다.

‘MAHREG’

InnoRegio의 ‘MAHREG’프로젝트로 작센-안할트에서는 150여 개의 파트너 업체가 등록된 자동차부품 하청업 클러스트가 조직되었다. 1999년 이래 본 프로젝트를 통해 12개의 기업이 설립됐고, 근로자 수는 5,000명 이상 증가했다. 현재 이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다.

독일경제연구소(DIW)의 연구 결과, ‘지역 혁신기업’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음이 입증되었다. 즉, InnoRegio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연구·교육 프로젝트가 지역 혁신-네트워크를 통해 현실화된 것이다.

또한 InnoRegio의 지원을 받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난 수 년간 신상품을 시장에 출시했다고 연구결과는 말해주고 있다. 또 이 중 30%의 기업이 이미 특허를 취득했거나 취득할 예정이다.

독일경제연구소(DIW)는 지역 혁신기업 이니셔티브가 기업의 혁신력을 강화, 신연방주의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2000년~2004년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역 혁신기업의 근로자 수가 11% 이상 상승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

2.3.2 혁신적 지역성장 거점(2001년 이후)

InnoRegio은 2001년 시작된 ‘혁신적 지역성장 거점’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다. 본 프로그램의 핵심은 경제적 측면에서 단기적 이행의 잠재력이 높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의 전제조건은 비즈니스 기획 성격의 지역혁신 전략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총 17개의 성장거점 지역에 각각 연간 약 150만 유로를 지원했다.

표 2.4 혁신 지역 성장거점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혁신 지역 성장거점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사례:

2004년부터 지원된 혁신 지역 성장거점 프로그램 ‘Reactive WetCoating’을 통해 ‘비터펠드 - 볼펜지역 화학연구단지’에서는 특수기기제작 부문에서 혁신 네트워크가 조직되었다. 이 이니셔티브는 여러 가지 물질로 된 무색/유기 상의 초박막을 다양한 이동체에 접합하는 제조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는 ORWO-박막제조사의 전수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비터펠드-볼펜지역의 이 분야 연구개발 잠재력이 접목되고 있다.

성장거점 로스톡-바르네빈데의 ‘Maritime Safety Assistance’는 안전한 선박운항을 위한 연구, 개발, 교육 분야에서 지역 잠재력을 결합시켰다. 시스템 제공자로서,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운항계의 세계적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성장거점 프로젝트를 통해 총 128개의 일자리가 보전되었고, 많은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었다.

2.3.3 혁신역량개발센터(2002년~2009년)

‘혁신역량 중심지, 인재를 찾아, 재능을 키운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정부는 동독지역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첨단연구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국내외 신진학자를 양성함으로써 연구성과가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우선 일년 간의 전략구상 단계 기간 동안 12개 프로젝트가 재정적 지원과 전문적 자문 지원을 받고 있다.

연방정부는 2004년 3월부터 12개 프로젝트 중,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전문위원회가 선정한 6개 프로젝트의 시행을 지원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들은 국내외 기술경쟁 또는 시장경쟁에서 해당분야의 최고연구센터로서의 입지를 성공적으로 다지게 되었다.

6개 연구센터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의 핵심은 각 센터마다 국제적 명성을 지닌 신진 학자로 구성된 2개 연구그룹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본 지원을 통해 신진학자 그룹을 이끌어 나갈 학자들을 미국, 영국, 중국으로부터 유치할 수 있었다.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Innovation Center Computer Assisted Surgery(ICCAS)’는 이와 같은 센터 중의 하나다. 본 연구센터는 연방정부 지원으로 발전전략을 수립, 로봇과 컴퓨터를 이용한 외과 의술분야에서 유일하게 학제간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진단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치료법 적용을 연구목표로 삼고 있다. 외과전문의, 전산가, 기술자가 함께 외과와 공학의 ‘공통언어’를 만들고 의료 사진자료와 기타 생체 신호를 표준화된 포맷으로 통일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혁신력 강화를 위한 이러한 연구센터들은 연방정부로부터 약 6천만 유로를 지원받고 있다. 이 지원금에는 2009년까지 신진학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 이외에도 전략적 투자를 위한 지원이 포함된다.

2.3.4 미래시장을 위한 지역 간 연합 (혁신포럼)

‘지역간 연합이니셔티브’의 목표는 기업, 연구기관, 기타 주체들이 주축이 되는 혁신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이 지원의 중심에는 ‘혁신포럼’이 자리잡고 있다. 네트워크형성 초기단계나 사업 추진단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본 포럼은 전문가 회의와 유사하며, 지식전달, 혁신전략 개발, 경쟁기술, 인맥형성에 기여한다.

상기 전문가 회의 중 하나가 바로 2004년 12월 브란덴부르크에서 개최된 ‘항공기엔진공학’ 혁신포럼이었다. 브란덴부르크에 소재한 유수의 엔진제조사회사인 MTU, 독일 롤스로이스사의 85여 명의 전문가와 중소기업 대표, 연구원들과 정계 인사들이 코트부스에 모였다. 본 혁신포럼은 브란덴부르크 코트부스 공과대학(BTU) 교통공학 연구소가 주관하고 연방정부가 후원했다. 브란덴부르크 주는 항공분야, 특히 항공엔진공학분야에서 기존의 기술역량을 강화, 확대시킨다는 목표를 선언했다. 재계, 중소기업, 대학, 외부 연구기관, 지역 당국과 협회 등이 중심이 된 네트워크가 이를 지원함으로써 브란덴부르크/베를린, 노르드작센/드레스덴 지역 항공기엔진공학이 지속적인 첨단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닦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뒤따를 것이다.

2001년부터 약 60개의 혁신포럼이 열렸으며, 포럼의 운영비로 연간 약 100만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2.3.5 혁신역량(InnoProfile) (2005년~2012년)

‘InnoProfile’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혁신과제를 제시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기초기술을 연구하는 신연방주의 대학과 외부 연구기관의 신진연구자그룹을 지원한다.

기술개발에 종사하는 신진연구자그룹을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와 기술을 발전시킬 연구잠재력을 조기에 개발하는 동기를 유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InnoProfile를 통해 혁신적인 새 지원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데, 바로 기술수요에 초점을 맞춰 지역 혁신화를 꾀함으로써 공공연구 인프라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InnoProfile’ 프로그램으로 약 5년간 신진연구자 그룹이 지원받게 되며, 여기에는 해외체류 지원과 기업간 인적 교류도 포함된다. 프로젝트 시행 첫 해에는 투자지원도 가능하다. 2005년에서 2012년까지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약 1억 5천만 유로가 투입될 예정이다.

3

교육·연구 중심지로서 동독

오늘날의 지식기반 사회에서 대학과 대학의 연구기관들은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그 지역의 경제입지를 개선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과 연구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다. 대학은 학문적 토대 위에서 응용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참여함으로써 기술력을 가진 혁신기업을 발전시키게 된다. 연구가 성공할 경우 막대한 파급효과가 발생하며 그 해당지역은 국제입지경쟁에서 우뚝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3.1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려

신연방주의 교육·연구는 연방정부가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부문이다. 2004년 정부가 이 부문에 투입한 예산은 19억 6천만 유로다. 1998년 17억 2천만 유로이던 것에 비하면 14%의 증가한 금액이다. 2005년 베를린을 제외한 신연방주의 교육·연구 예산으로 14억 8천만 유로 이상이 책정되어 있다. 이는 1998년도에 비해 23.5% 증가한 것이다.

대학발전센터(CHE)의 2004년 대학순위를 보면, 동독 지역 대학들이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위에서 7위까지의 7개의 연방주

가운데 4개 주가 신연방주이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튀링엔, 작센 주가 3위에서 5위를 차지했으며 작센-안할트 주는 7위를 차지했다. 학교등급 순위는 학과별로 4개의 척도(학생 만족도/전체평가, 평판, 수학기간과 연구실적)로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인문학과 공학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짧은 수학기간을 들어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으로는 튀링엔,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대학이 선정되었다. 작센과 작센-안할트 대학은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이 곳 대학에서는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 1인당 지도 학생 수도 타 지역에 비해 훨씬 적다.

이 CHE대학순위에서 연구실적이 뛰어난 최고학과가 7개인 베를린의 훔볼트 대학이 최우수대학에 선정되었다. 이 대학에 개설된 학과 중 2/3 이상, 특히 생물학, 교육학, 역사학, 법학, 물리학, 사회학, 경제학의 연구성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실적 10위 안에 베를린 자유대학(FU)이 포함된 것도 고무적이다.

대학발명품 실용 부문에서는 베를린 전문대학의 교내발명품의 상품화를 맡고 있는 Berliner Ipal GmbH(‘혁신 특허 라이선스’)가 20개의 특허출원 에이전시들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연방정부의 위임 하에 킨바움(Kienbaum) 자문협회가 실시한 조사결과이다.

연방군 역시 연구사업에 기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슈트라우스베르크에 위치한 연방군 사회과학연구소(SWInstBw)는 ‘학문거점 베를린’ 사업에 통합되어, 군사사화학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성과를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포츠담에 위치한 연방군의 군사역사학 연구청(MGFA)도 새로운 연구거점으로 자리잡았다. 군사의학과 군사심리학 연구개발을 위해 2004년 신연방주의 민간연구기관(예컨대 대학)에 50만 유로에 달하는 연구용역이 주어졌다. 한편 베를린의 연방군 의료·노동·환경보호 연구소의 건립도 상당한 진척을 보였다. 본 연구소의 주요 임무는 군 작전활동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과 관련, 병리메카니즘, 예방, 진단, 치료, 전염병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3.1.1 대학 발전

‘대학 발전을 위한 공동과제’의 일환으로 2004년 동베를린을 제외한 신연방주에 1억 9천만 유로의 연방예산이 지원되었다. 신연방주 자체의 투자를 포함, 총 4억 6천만 유로가 신연방주의 대학을 확충하는 데에 지원되었다. 이로써 독일전체 지원금의 20%가 전체 대학생수의 14%를 차지하는 신연방주의 대학에 투입된 셈이다(2004/05년 겨울학기 기준).

지난 몇 년간 신연방주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학생 수 대비 지원액수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연방정부는 ‘대학 발전을 위한 공동과제’의 예산을 여러 해 동안 증액(1998년에서 2003년까지 15% 증가)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9억 2천5백만 유로에서 동결했다. 그러나 주정부가 50%를 공동지원하고 있어 총 지원금은 18억 5천만 유로인 셈이다.

지금까지는 ‘제 3자를 통한 선(先)자금확보 계획’을 통해 연방예산을 대학 발전 계획에 사용할 수 있었다. 신연방주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계획했던 대학 건립 및 확충을 예상보다 빨리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대안적 지원방식은 현재 기간이 만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지역발전기금(EFRE)을 보다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신연방주는 현재까지 이를 통해 47개의 투자계획에 제3의 지원금 2억 4천7백만 유로를 지원 받았다.

3.1.2 신연방주와 베를린의 혁신적 연구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대학 및 학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연구와 교수 임용에 있어 여성의 기회균등 실현(HWP)을 위해 도출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합의사항 중 3조에 해당한다. 이는 2000년에 종료된 대학특별프로그램 III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총 6개의 전문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독일 대학의 역량과 국제적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신연방주 내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학과 연구기관을 확충하는 데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1년부터 대학 간, 대학과 대학의 연구기관 간, 대학과 외국의 연구기관 간의 공동연구가 강화되었다. 또한 제3의 후원금 확보와 신진학자

그룹 구성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04년까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50%씩 총 9천7백만 유로를 지원했다.

신연방주와 베를린의 혁신적 연구체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연방주에 서는 많은 방안이 실현되었다. 관련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베를린시는 구(舊) 연구자-통합프로그램의 참가자 총 50명 이상의 연구활동과 학제 간 공동연구, 베를린 대학의 멀티미디어 협력체제를 지원한다.
- 브란덴부르크주는 특수연구부문, 대학원 과정, 미래기술부문의 네트워크구축을 준비 중이다.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주는 프로젝트의 전(前)단계에서 제3의 외부 후원금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연구성과를 조기에 창업아이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개최했으며 보너스 제도도 도입했다.
- 작센주는 드레스덴 공과대학의 생명공학센터, 라이프치히 대학의 생명공학의료센터를 집중 지원한다. 또한 지식과 기술 교류를 위해, 대학의 연구기관과 협력대학 간 공동프로젝트도 후원한다.
- 작센-안할트주는 전자공학, 계량공학, 신경과학, 나노기술 부문에서 일련의 우수한 연구계획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신경의료부문의 연구팀도 주요지원 대상이다.
- 튀링엔주는 대학 내 신진학자들로 구성된 13개 연구팀을 선별, 집중 지원한다. 기존의 특수연구부문을 통해 젊은 학자들에게 훌륭한 연구영역을 제공할 수 있는 학과만이 지원대상이 된다.

2002년에는 총 6개의 전문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작업이 있었는데,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그간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실행할 프로그램에 대한 윤곽을 잡았다. 이에 따라 신연방주와 베를린은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로부터 3년 간 2천550만 유로 이상을 지원받는다.

3.1.3 경제적 상용화를 위한 전문대학의 응용기술 연구프로그램(FH³)

경제적 상용화를 위한 전문대학의 응용기술 연구프로그램(FH³)은 지역 연계 프로젝트로 특히,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의 목적은 대학의 연구기술을 역내 기업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학과 기업 간, 대학 간, 대학과 연구기관(예: 프라우엔호퍼연구소) 간의 협업이 집중적으로 지원 받는다.

연간 제출되는 지원신청 중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 29개 전문대학의 신청이 38%를 차지하고 있다. 신연방주의 대학들은 108개의 구연방주 대학들과 비슷한 규모의 지원을 받는다. 2004년 연방정부는 총 천40만 유로를 투입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76개의 지원신청 가운데 57개의 연구프로젝트에 대해 총 천6백20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 중 23%인 370만 유로가 신연방주의 전문대학에 지원된다.

3.2 신연방주의 교육 및 연구 중심지 확대

2004년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의 연구프로젝트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출된 7억 6천6백만 유로(1998년, 6억 5천6백만 유로)는 동독지역 연구시설의 확충과 현대화에 투입되었다. 헬름홀츠센터에 2억 5천2백만 유로(1998 대비 6.4% 증가), 프라우엔호퍼 연구소에 8천8백만 유로(1998년 대비 41% 증가), 막스-플랑크 연구소에 1억 천8백만 유로(1998년 대비 23% 증가)가 투입되었다. 또한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 과학조합(WGL)' 설립을 위해 1억 8천만 유로(1998년 대비 11% 증가)를 지원했다.

2005년에는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의 연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8억 2천5백만 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며, 이는 1998년 대비 25% 이상 많은 지원규모이다. 각 지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3.2.1 막스-플랑크 협회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지원(시설 확충 비용만 5억 3천만 유로)으로 신연방주에 막스-플랑크 협회(MPG)가 설립되었다. 지난 수년간 MPG는 이곳에 18개의 연구소,

1개의 연구단지와 1개의 부설 연구소를 세웠다. 이로써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동서독 지역에 비슷한 비율로 분포하게 되었다.

현재 막스-플랑크 협회 연간 운영자금의 4분의 1인 2억 유로가 신연방주에 지원된다. 이를 통해 1,700개의 정규직이 제공되고 있으며, 제3지원금(Drittmittel)과 장학금까지 합하면 총 4000명의 고급인력에게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다.

신연방주의 막스-플랑크 연구소들은 막스-플랑크 협회라는 전체적 틀 안에서 운영된다. 예컨대 현재 38개의 리서치 스쿨이 참여하는 ‘국제 막스-플랑크 리서치 스쿨’ 프로그램에 신연방주의 14개 연구소도 참가하고 있다.

3.2.2 프라우엔호퍼 협회

작년 12월 드레스덴에 프라우엔호퍼 나노전자공학센터(CNT)가 설립되면서, 현재 신연방주에는 총 19개의 프라우엔호퍼 연구소와 기관이 들어서 있다.

표 3.1 프라우엔호퍼 I

프라우엔호퍼 나노전자공학센터(CNT)

2005년 5월말 프라우엔호퍼 연구소, AMD사, Infineon사가 공동 설립한 프라우엔호퍼 나노전자공학센터(CNT)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협력관계 속에서, 연구와 생산을 연계하고 있다. 이로써 드레스덴은 유럽의 최첨단 나노 연구기지가 될 것이다.

CNT는 고밀도 메모리 칩, 고성능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작에 중점을 두고 있어, 프라우엔호퍼 협회, 특히 마이크로전자공학 연구소는 원료, 박막, 기초프로세스, 구축 및 연결기술, 설계, 석판화 분야에 기술을 총집결할 수 있게 되었다.

연방정부와 작센주는 CNT 초기자본으로 8천만 유로를 지원하고, 센터의 참가업체들은 프라우엔호퍼 연구소와의 협력 하에 향후 5년간 약 1억 7천만 유로 규모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2005년 현재 여러 기관이 설립 중에 있다. 한편 신연방주의 프라우엔호퍼 연구소는 2004년 고용을 늘려, 2004년 말 근무자 수가 약 1,850명 이상이며, 이 중 석사급 연구생과 조교도 900명이나 된다.

표 3.2 프라우엔호퍼 II

프라우엔호퍼 세포치료 및 면역학 연구소(IZI)

2005년 4월 프라우엔호퍼 세포치료 및 면역학 연구소(IZI)가 라이프치히에 설립되었다. 설립비 3천2백만 유로는 유럽지역발전기금(EFRE)에서 60%,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각기 20%씩 마련했다.

IZI의 설립으로 프라우엔호퍼 연구소는 생명과학 분야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 연구소는 체세포 및 조직 결함과 기능장애를 발견, 재생의학을 통해 인체 조직과 기관의 기능을 되살리는 분야의 연구에 특화되어 있는데, 라이프치히는 이 연구를 하기에 최적의 입지이다. 이 지역엔 지난 수년간 큰 발전을 거듭한 의과대학과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는 병원이 있기 때문이다. 라이프치히 대학은 최근 대학 내 생명공학의료센터에 교수직 7개를 신설했고, IZI가 완공되면 약 110개의 연구직이 마련될 것이다.

프라우엔호퍼 연구소는 1992년 이래 구동독지역 프로젝트를 통해 총 9억 7천만 유로에 달하는 수입을 창출했다. 이 중 5억 3백만 유로는 기업, 3억 6천7백만 유로는 공공 프로젝트의 수주를 통한 것이다. 총 16억 천4백만 유로에 달하는 금액이다. 2004년 프라우엔호퍼 연구소의 구동독지역에 책정한 예산은 총 1억 7천7백만 유로였으며, 이 중 7천만 유로는 기업의 수주를 통해 발생했다.

표 3.3 프라우엔호퍼 III

고분자 합성과 가공을 위한 시험센터(PAZ)

프라우엔호퍼 연구소는 할레시(市)의 슈코파우 화학연구단지 내에 고분자 합성과 가공을 위한 시험센터(PAZ)를 설립했다. PAZ는 유럽 최대 화학회사인 다우 케미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더 많은 기업이 이 단지에 입성할 예정이어서, 과거 화학 삼각지대로 불리던 할레, 라이프치히, 비터펠트가 화학연구의 중심지로 다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PAZ는 프라우엔호퍼 응용고분자 연구소(골름 소재)와 재료공학연구소(할레 소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작센-안할트 주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총 2천백만 유로를 지원 받았다.

3.2.3 중·동부 유럽센터

연방정부는 ‘동독 재건’ 프로그램과 유럽연합 확대와 관련, 동독을 유럽의 연결요충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동부 유럽 경제·문화센터(MOEZ)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그 임무를 프라우엔호퍼 협회에 위임하였으며, 그 중심지는 라이프치히가 될 것이다.

MOEZ는 경제, 학문, 기술 분야의 정보네트워크 중심지로 발전할 것이며, 특히 신연방주의 여러 연구소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인프라를 토대로 할 것이다. MOEZ의 소장은 현지 대학의 교직원 가운데서 선발하고, 2006년 운영에 들어간다.

3.2.4 헬름홀츠 센터

신연방주의 헬름홀츠 센터 설립은 큰 성과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약 600여 명이 근무하는 포츠담 지리연구센터(GFZ)는 현재 지리학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센터로 자리매김 했다.

표 3.4 헬름홀츠 센터 I

지리연구센터(GFZ)의 지진해일(쓰나미) 조기경보시스템 개발

GFZ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헬름홀츠 공동체의 연구팀과 협력하고 있다. 올 1월 독일의 지리학자들을 대표하여 GFZ의 연구원들은 정부에 연구기획안을 제출하였는데, 이 구상안은 일본 고베에서 열린 UN ‘재해저감회의(WCDR)’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독일이 제시한 이 구상안의 장점은,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하여 최대한 빨리 조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지진해일 외에도 화산폭발, 폭풍우와 같은 자연재해도 이 조기경보시스템으로 보다 빨리 포착할 수 있다.

1992년 베를린-부흐에 막스-델브뤼 분자생물학 센터(MDC)가 설립된 이후 베를린-부흐의 캠퍼스는 훌륭한 임상연구센터로 거듭났다. MDC는 지역 병원과의 특별한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그리고 주요 게놈연구지로서 국립 게놈연구 네트워크에도 참여하

고 있다.

동독과 중·동부 유럽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설립된 라이프치히-할레 환경연구센터(UFZ)는, 현재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중심지로 떠올랐다. 이 센터의 연구팀들은 생명의 다양성과 환경의 경제성 연구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을 얻으며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표 3.5 헬름홀츠 센터 II

벤델슈타인 7-X 계획

헬름홀츠 공동체와 그라이프스발트의 막스-플랑크 플라즈마 물리학 연구소(IPP)는 태양과 같은 수소 동위원소를 융합하여 헬륨 에너지를 얻는 발전소를 개발하기 위한 물리적 토대를 연구하고 있다. ‘벤델슈타인 7-X 설립 프로젝트’이 지난해 ‘벤델슈타인 7-X 계획’으로 탈바꿈했다. 새로운 ‘벤델슈타인 7-X 계획’은 프로젝트 설계, 기본장비, 시스템 운영, 조립, 물리학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 12월 말 기준 약 200여 명이 종사하고 있고, 2009년에는 기술운영, 그리고 2010년에는 첫 ‘플라즈마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3.2.5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 학술공동체

1995년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 학술재단(WGL)과 통합된 ‘블루 리스트(BLE)’를 육성함으로써,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학문연구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학문적 요구에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신연방주에서는 36개의 연구기관이 연방과 주정부의 공동지원을 받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2004년 총 3억 9천3백만 유로를 투입했다. 각 연구소들은 전문 분야별로 협력함으로써 공동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라이프니츠 연구소와 기타 연구기관, 대학들은 연합체를 통해 사안별로 학제간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드레스덴 재료연구연합이 좋은 사례이다.

표 3.6 블루 리스트 I

라이프니츠 신경생물학 연구소(IfN)

라이프니츠 신경생물학 연구소(IfN) 내에 유럽 최초의 7-테슬라-자기공명단층촬영센터를 설립·발전시킴으로써 막테부르크는 신경학의 중심지가 되어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는 5개 센터 중 한 곳이 되었다. 7-테슬라-자기공명단층은 지구자기장보다 14만배 강한 초강력 자기장을 생산하여, 아주 약한 뇌파까지 감지, 뇌 구조를 세밀하게 포착할 수 있으며, 이로써 지금까지 감지하지 못했던 뇌활동 방해요소의 진단이 가능해졌다.

전 국가적, 전 사회적 이익과의 관련뿐만 아니라, 신연방주가 가진 연구개발역량의 적극적 상용화 측면에서도 라이프니츠 연구소는 큰 중요성을 갖는다. 라이프니츠 연구소는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적 성과가 경제적 상용화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세계적 역량을 가진 연구거점이 되었다. 본 연구소는 신연방주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더 많은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미 많은 연구소들이 학문적 역량을 키우고 혁신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현지의 대학들과 협력하고 있다.

3.3 신연방주 연구인력 개발

2001년 신연방주의 연구개발 분야 종사자⁸는 8만664명으로 이는 통독 이후 모든 부문의 통계자료가 처음으로 완벽하게 갖추어진 1995년 자료상의 7만 7,993명으로부터 3% 증가한 수치다.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 지원을 받는 신연방주 내의 대학외 연구기관 종사자 수는 1993년 1만 8,057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2만 1,943명이 되었다(베를린: 1993년 8,592명, 2003년 8,518명). 반면, 베를린을 제외한 구연방주에서는 1993년 5만 3,306명이던 연구 인력은 2003년 5만 1,924명으로 감소했다. 주민 1천 명당 연구개발 인력 비율을 비교하면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가 1.3명으로 0.8명인 구연방주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난다.

⁸ 이 통계수치는 연구직과 일반 기술직, 사무직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한편, 대학의 연구인력 수는 다른 형태로 변화했다.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 내의 대학연구인력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2만 4,600명에서 2002년 2만 3,864명으로 줄어들었다(베를린: 1995년 9,400명, 2002년 8,286명)⁹. 반면 베를린을 제외한 구연방주의 연구인력은 1995년 7만 6,073명에서 2002년 8만 850명으로 증가했다. 그렇지만 주민 1천명당 연구개발 인력 비율에서는, 2002년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가 1.4명으로 구연방주의 1.3명보다는 여전히 높다.

기업의 연구활동 현황¹⁰을 보면,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의 연구인력은 1993년 3만 1,998명에서 2003년 3만 3,820명으로 약 5.7% 증가했다(베를린: 1995년 1만 1,076명, 2003년 1만 4,266명). 반면, 구연방주에서는 1993년 26만 1,776명에서 2003년 26만 9,730명으로 불과 3% 증가하는데 그쳤다.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 내 기업체의 연구인력이 증가하긴 했지만 주민 1천 명당 연구개발 인력 비율은 2003년 구연방주가 4.1명으로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주의 2명보다 여전히 높다. 하지만 이 부문에서 동서독의 평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신연방주에는 연구역량이 뛰어난 기업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동서독은 산업구조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 2001년 서독은 전체 연구인력의 15%만이 중소기업 종사자인데 반해, 베를린을 포함한 동독은 41%에 달했다. 그러나 1995년의 55%에 비하면 물론 크게 감소한 것이다.

⁹ 이 통계수치는 1995년에야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¹⁰ 이 통계수치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

4

농촌개발

신연방주 농촌지역은 혁신과 고용 잠재력이 매우 크다. 그러나 독일 전역이 그러하듯 신연방주의 농촌도 구조조정, 세계화, EU확장으로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수한 젊은 인재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농촌지역의 잠재력은 더욱 이끌어내어 활용해야 할 것이다. 여전히 농업이 신연방주의 노동시장을 안정시키는 주요산업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농업만으로는 지역경제를 튼튼히 꾸려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농업은 농업 외의 분야에서도 소득과 고용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농촌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동참시켜야 한다. 지역특성화 발전은 일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주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농촌과 도시의 성장 및 고용 촉진방안을 긴밀히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신연방주의 농촌지역은 지역의 다양성(주거공간, 산업지대, 휴양지, 평준화)을 이용하여 지역의 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농촌관광, 농산물 직거래, 정보처리, 기타 혁신 다양화 전략
-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 역내 부가가치 창출, 창업여건 개선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 차세대 원자재의 효율적 이용 등을 통한 지속적 농업경영의 토대 확립
- 농촌지역 인력양성, 수공업과 제조업 분야 종사자 교육(교육훈련, 연수, 계속교육 등)
- 농촌지역과 그 외 지역에 대한 투자 및 소득창출 강화

4.1 개발지원책

2005년 발효된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은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농촌지역이 많은 신연방주가 특히 큰 이득을 볼 것이다. 정부는 두 가지 주요 지원방안을 마련했는데 ‘농촌구조 개선 및 해안 지역 보호(GAK)’와 ‘지역경제구조개선(GA)’이 바로 그것이다.

‘농촌구조 개선 및 해안지역 보호(GAK)’는 농촌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협력적 운영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현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농·임업 발전 전략에서부터, 농·임업 부문을 뛰어넘어 직접적인 지역발전을 가져올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 ‘지역경제구조개선(GA)’은 경제구조가 취약한 지역에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신연방주의 농촌발전에 기여한다(표 1.1과 1.2 비교).

GAK는 2004년에 ‘통합적 농촌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발원칙을 내놓으면서 좀더 강력한 지역개발을 추진했다. 그리고 신연방주에 이를 추진하면서 GA와 공동방안을 마련했다. 지역마다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을 많이 고려할수록 효율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신연방주의 농촌지역도 이로 인해 새로운 개발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 구상안은 독일연방 식량·농업·소비자보호부(BMVEL)가 지원하는 시범 실시계획인 ‘지역활력(REGIONEN AKTIV)’과 ‘리더(LEADER)’프로그램에서 이미 검증되어, 신연방주 7개 지역에서는 현재 208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그 중 ‘작센 슈바이츠’와 ‘뤼벡 만’이 가장 앞서고 있다. 또한 다른 시범지역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연방 및 주정부는 GAK에 245억 유로를 지원했고 이중 91억 유로가 신연방주에 투입되었다. 지원금의 40%는 농업구조개선, 특히 농촌마을의 현대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정리, 경지정리를 통한 사유화에 사용되었고, 30%는 생산과

상품화 제반조건을 개선하는데 들어갔다. 농촌 기업의 구조조정 외에도 작업장의 현대화·상용화에도 투자한 것이다. 또한 1991년부터 2004년까지 개별투자지원의 일환으로 2,369건의 배상보증에 6억 천4백만 유로를 지원했다. 그리고 지원금의 19%는 지속적인 농지경작을 위해 사용되었다.

연방정부는 GAK 프로그램 명목으로 2004년 한 해 신연방주에 약 2억 천6백만 유로를 책정했다. 여기에 각 주정부의 지원액을 합할 경우 GAK 운영 총 예산 규모는 3억 5천6백만 유로에 달한다. 또한 유럽연합의 재정지원도 큰 몫을 담당했다. 신연방주(제1 목표 지역)에 제공되는 최대공동지원금액은 재정지출의 75%에 달한다. 그러나 공동지원금을 통해 정부가 1 유로를 지원할 때마다 신연방주는 6 유로 이상의 지원금을 유럽연합, 연방정부, 주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투자규모는 몇 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다.

유럽 집행 및 보장기금(EAGFL) 집행분과는 2004년 GAK 지원금으로 신연방주에 약 4억 7천만 유로를 지원했다. 이는 2003년과 마찬가지로 농·임업 개발 차원을 넘어 직접적인 지역발전 효과를 낳을 방안 연구에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지원금의 70% 이상이 농촌마을개발, 농촌지역의 다양화(관광산업, 수공업 등), 자연재해 복구, 농업지역 인프라 개선 등에 들어갔다. 나머지 지원금은 농업지대 경쟁력 제고 방안 등에 사용되었다.

그 밖에도 EAGFL 보장분과는 신연방주의 제1 목표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약 1억 7천만 유로를 지원했다. 이 지원금은 농업환경개선 및 자연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개발금으로 사용되었다.

유럽연합 구조조정기금에서는 LEADER라는 공동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농촌지역 개발을 지원했다. LEADER의 목적은 입지조건 취약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즉,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 훼손되지 않은 자연, 풍요로운 문화생활, 안정적 사회 등이 LEADER의 지향점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지역민과 방문객에게 살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지역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주도하는 주체는 바로 지역주민이다. 이 지역들은 지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바, 2004년에 2천만 유로가 지원되어 혁신적인 시범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4.2 차세대 에너지 원료-경제 발전의 잠재요소

신연방주에 있어 재생원료의 생산이나 재배는 매우 중요하다. 재생가능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100만 헥타르의 경지 중 절반 이상이 신연방주에 위치한다. 원료 가공규모와 일자리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엔 재생가능 농작물로부터 1차 생산물을 얻는 처리시설도 생겼다. 예를 들어 튀링엔주의 블랑켄슈타인에선 연간 30만톤 규모의 설폰셀룰로즈(Sulfat-Zellulose) 제조시설이 들어섰고, 작센-안할트주의 슈텐달에선 연간 550,000톤을 생산할 수 있다. 현재 약 2,300명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1993년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주의 귄초브에 설립된 차세대 에너지 개발원(FNR)은 차세대 원료 분야의 연구·개발·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신연방주에는 관련 연구기관이 많이 들어서, 예컨대 골름(브란덴부르크)에 위치한 프라우엔호퍼고분자연구소는 접착제의 성분을 연구하여 그래피티를 막는 보호도장재를 개발 중이다. 아이제나흐에 있는 TECNARO사는 ARBOFORM이라는 고급재료로 생물분해성이 있는 합성수지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차세대 원료 부문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것은 이 에너지의 이용법이다. 튀링엔 농림부, 프라이베르크 공대, 드레스덴 공대는 유기물에 의해 생기는 고체연료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총 2,000여 개에 이르는 바이오가스시설 중 160개(8%)가 신연방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국 총 생산량의 25%를 생산한다(B 11.1.2 참조). 한편 보르넴 농업기술 연구소는 바이오가스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2004년에 생산된 약 110만 톤의 바이오디젤 중 절반은 신연방주에서 생산됐다. 이 외에도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고 상용화하는 것부터 석유를 대안연료로 대체하는 기술까지 연구되고 있다. 현재 3곳의 시설에서 연간 500,000 톤의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신연방주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BTL연료 생산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 이 연료가 있으면 유기물(Biomasse)로부터 디젤이나 오토연료와 같은 액체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 프라이베르크에 위치한 Fa. 코렌(CHOREN)사는 연간 15,000 톤의 합성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범시설을 짓고 있다. 또한 작센주의 많은 기업과 연구기관들도 BTL 생산방식 개발에 주력

하고 있다.

4.3 농업분야의 구채무 청산

연방하원은 통독 이후 큰 골칫거리였던 농촌지역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부문 구(舊)채무법(LwAItschG)」을 제정했다. 이 법의 목적은 협동농장을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 협동농장이 지고 있던 빚을 기업의 형편에 따라 상환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 채무의 이자규정이 만들어졌고, 통일적인 상환규정이 확정되었다.

구채무청산법은 기존의 과도한 부채상환제를 축소하고 약 1500개에 달하는 신연방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부채상환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채상환액은 각 기업이 제출한 부채상환 계획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되, 부채상환의 지원중립성이라는 원칙을 적용하여 결정된다. 이와 같은 부채청산 법률을 받아들이지 않은 기업은 지금까지보다 강화된 상환조건에서 매년 기업이윤의 일부를 부채청산에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이 새로운 법률은 채무자의 경제적 이해와 국가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현실적 방안이라 볼 수 있다.

상환절차에서는 구체적으로 구채무법(LwAItschG)의 대상을 정해야 한다. 부채상환은 2005년 8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연방정부는 토지사용 및 관리 주식회사(BVVG)에게 이 작업을 위임했다. BVVG는 채권은행과 함께, 각 기업의 수익실적과 전망을 바탕으로 신청서를 검토한다.

4.4 토지매입

구동독 시절의 국유지는 토지사용 및 관리 주식회사(BVVG)를 통해 민영화되었다. 이는 신연방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다. 2004년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농지 76,986 헥타르와 삼림 46,913 헥타르가 매각되었고, 그 중 대부분은 「토지배상 및 반환에 관한 법률(EALG)」에 따라 이뤄졌다. 1992년 7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농지 34만 9,563 헥타르와 삼림 46만 4,994 헥타르가 사유화되었다.

표 4.1 토지사유화

단위: 헥타르

토지 유형	1992.7.1 사유화된 토지	2005.5.31 까지 매각된 토지	그중 ALG에 의해 매각된 토지	2004.1.1~ 2005.5.31까지 매각된 토지	그중 EALG 에 의해 매각된 토지	임대된 토지	2004.12.31 토지 현황
농지	1,000,000	349,563	226,104	76,986	49,085	660,107	712,633
삼림	575,000	464,994	382,900	46,913	41,535	-	180,465

2004년 BVVG는 약 2,200 헥타르의 자연보호구역 토지를 신연방주에, 약 3,900헥타르의 토지를 환경보호단체와 재단에 무상 지급했다.

2004년 1월 발효된 토지사유화 완화 규정은 큰 효과를 낳았다. 2004년 중반부터 사유화 목적으로 공개경매에 입찰되었던 농지의 일부가 완화규정으로 인해 원예, 사료작물재배, 가공, 무공해경작과 같은 노동집약적인 기업에게만 입찰이 허용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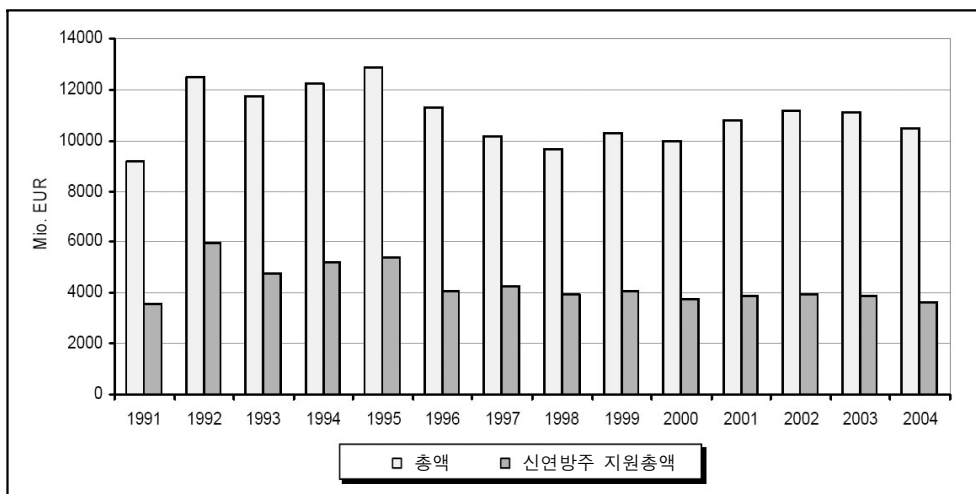
5

교통인프라 확충

교통인프라의 확충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여전히 동독 재건의 핵심 분야 중 하나다. 신연방주는 지난 수 년간 이 부문을 크게 발전시켜왔다. 현대식 연방철도, 연방도로, 연방수로를 건설하여 구동독의 주민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신연방주에는 여전히 만회해야 할 투자수요가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앞으로도 교통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표 5.1 교통기반시설 부문 연방예산 투자 추이

단위: 백만 유로



지난 수년간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 들어간 투자액은 연간 약 110억 유로로 이 중 1/3이 신연방주에 할당되었다. 1991년에서 2004년까지 연방예산과 「기초단체 교통 지원법(Gemeindeverkehrsfinanzierungsgesetz-GVFG)」에 의거 연방철도, 연방도로, 연방수로 확충에 총 천5백40억 유로가 지원되었으며 이 중 600억 유로가 신연방주에 투입되었다. 이는 연평균 3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재건과정 초기에는 사회간접자본을 현대화해야하고 교통시설을 확충해야 했기 때문에 신연방주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신연방주는 만회해야 할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방예산에 책정된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받고 있다.

2005년 3월 17일 슈뢰더 총리의 성명서 발표로 착수된 ‘교통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20억 유로 프로젝트’에 따라, 신연방주에 할당된 투자액의 비율은 약 35%에 달한다.

5.1 2003 신연방주 중심의 연방교통계획

2003 연방 교통계획은 2001년에서 2015년까지의 소요재원을 신연방주의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수와 국토면적 대비 신연방주에 대한 투자액은 전국 평균보다 많은 셈이 되었다. 2003 연방 교통계획의 주요 프로젝트로는, ‘통독 교통 프로그램 (Verkehrsprojekte Deutsche Einheit-VDE)’의 지속적 추진과 더불어, 막데부르크와 슈베린 구간 고속도로 A14, 캄니츠와 라이프치히 구간 A72의 확장공사이다.

유럽연합 확대로 현대화와 인프라구축의 필요성이 발생하자, 일련의 프로젝트를 통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유럽연합이 동유럽권으로까지 확대됨으로써 총 24개의 프로젝트가 ‘EU확대’라는 명칭으로 추진되고 있다. 24개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8개 철도 프로젝트, 13개 연방도로 프로젝트, 3개의 연방수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정부의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은 유럽연합의 확대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EU확대’의 주요프로젝트 중에는 이미 완료된 것도 있고, 아직 추진 중인 것도 있는데 다음은 완료된 프로젝트이다.

- 베를린~프랑크푸르트(오더)~독일/폴란드 국경(~바르샤바) 철도구간 확충
- 베를린~드레스덴 철도구간 확충
- 드레스덴~독일/체코 국경(~프라하) 철도구간 확충
- A 6, (뉘른베르크) 암베르크~바이트하우스~독일/체코 국경(~프라하) 연방고속도로 건설
- A 17, 드레스덴~독일/체코 국경(~프라하) 연방고속도로 건설
- A 20 뤼베크, A 11(~슈테틴) 연방고속도로 건설

기타 철도와 고속도로는 현재 설계단계에 있다. 현재까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모두 유럽연합(유럽 인프라망 네트워크나 유럽지역발전기금)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5.2 통일독일 교통정책의 실현

1991년 4월 연방내각에 의해 결정된 17개 통독 교통프로젝트(VDE)는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7개 교통 프로젝트는 9개의 철도 프로젝트, 7개의 연방도로 프로젝트, 1개의 수로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통독 교통프로젝트의 투자규모는 350억 유로이며, 이 중 65%인 250억 유로가 2004년 말까지 지출되었다. 17개 프로젝트 중 일부는 이미 완공되었고 나머지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다음은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완공예정인 프로젝트이다.

- 연방도로 A 4, 글라우흐하우 오스트~호헨슈타인~에른스트탈
- 연방도로 A 38, 블라이헤르로데~브라이텐보르비스
- 연방도로 A 73, 코부르크~리히텐펠스
- 통독 교통프로젝트 제8.1번 뉘른베르크~에어푸르트 및 통독 교통프로젝트 제8.2번 에어푸르트~라이프치히/할레
- 통독 교통프로젝트 제17번 하노버~막데부르크~베를린 수로

위 통독 교통프로젝트는 ‘교통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20억 유로 프로젝트’에서 약 5억 유로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될 예정이다.

5.2.1 연방철도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연방철도 프로젝트에 투입된 금액은 약 119억 유로에 달한다. 2004년까지 9개 프로젝트 중 6개 구간이 완공되었으며, 개통된 신규구간은 다음과 같다.

- 통독 교통프로젝트 제2번: 함부르크~베를린 구간
- 통독 교통프로젝트 제3번: 올첸~슈텐달 구간
- 통독 교통프로젝트 제4번: 하노버~베를린 구간
- 통독 교통프로젝트 제5번: 헬름슈테트~막테부르크~베를린 구간
- 통독 교통프로젝트 제6번: 아이헨부르크~할레 구간
- 통독 교통프로젝트 제7번: 베브라~에어푸르트 구간

통독 교통프로젝트 제 1번은 부분 개통되었다(하케나우 란트~슈베린역 (a)~카를스회헤 및 립니츠~담가르텐 베스트~슈트랄즈운트). 통독 교통프로젝트 제 9번(라이프치히~드레스덴 구간)에서는 라이프치히~리이자 (a) 구간이 완공되어 1시간 반 거리가 1시간 거리로 단축되었다.

통독 교통프로젝트 제8번(뉘른베르크~베를린 구간)에서는 할레/라이프치히~베를린 구간(통독 교통프로젝트 제8.3번)의 95%가 완공되어 2006년 봄부터 구간안전속도인 200km/h로 운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부분프로젝트 에르푸르트~뉘른베르크(통독 교통프로젝트 제8.1번) 구간과 라이프치히/할레~에르푸르트(통독 교통프로젝트 제8.2번) 구간의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5.2.2 연방간선도로

통독 교통프로젝트의 연방간선도로 부문을 살펴보면, 2004년 말까지 길이 1,500km

의 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 신설되었으며, 지난 해 말 현재 나머지 300km의 도로는 공사 중에 있었다. 이로써 통독 교통프로젝트는 75% 완료되었으며 15%는 건설 중에 있다. 2004년 말까지 연방간선도로 부문에 총 1080만 유로가 투자되었다. 주요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하노버 오스트 교차로에서 베르더 삼각지까지 이어지는 6차선 고속도로 A 2 개설공사를 완료, 개통했다. 고속도로 A 10의 6차선 확장공사 역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완료되었으며, 막데부르크~할레를 잇는 4차선 도로 A 14도 공사가 완료되었다. 2000년에 완공된 이 도로는 통독 교통프로젝트 중 가장 먼저 공사가 완료된 곳이다. 2005년 말까지 튀베크~슈테틴을 잇는 고속도로 A 20이 완공될 예정이며, 현재는 튀베크~랑스도르프 구간과 노이브란덴부르크~우케르만 교차로 구간만이 개통되었다.
- 베를린에서 뉘른베르크를 잇는 고속도로 A 9의 6차선 확장공사, 베를린 환상도로~헤름스도르프 교차로 구간과 튀링엔/바이에른 주 경계선~뉘른베르크 교차로 구간, 아이제나흐~괴르리츠 고속도로 A 4의 공사는 완료되었다.
- 고속도로 A 38(괴팅엔~할레)의 신설프로젝트와 A 143(할레 서부 우회도로)의 신설프로젝트 역시 거의 완료되었으며, 그 외의 구간은 개통될 예정이다.
- 에르푸르트~슈바이نف르트 고속도로 A 71과 줄~리히텐펠스 고속도로 A 73의 신설프로젝트는 교통의 효율성을 고려, 적절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고속도로 A 71은 2005년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며, 고속도로 A 73은 이미 완성되었다.

5.2.3 연방수로

하노버~막데부르크~베를린을 잇는 통일독일 교통프로젝트 제17번 연방수로의 핵심은 중부지방운하, 엘베~하벨 운하와 막데부르크 수로교차로이다. 2003년 엘베강의 운하다리과 호헨바르테 수문이 완공됨으로써 2.5 m 높이의 화물을 실은 선박이 베를린까지 연중 운항할 수 있게 되었다. 샤로텐부르크 수문 역시 2003년 가을부터 운영되었다. 통독 교통프로젝트 제 17번에 투입된 총 비용은 약 23억 유로이며, 이 중 절반이

2004년 말까지 지출되었다.

5.3 유럽지역발전기금 - 연방프로젝트

2001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승인한 연방 교통기반시설구축 프로그램 (2001년~2006년)은 EU구조조정기금의 일환에서 신연방주를 제1목표 지역으로 하는 지원책의 일부이다. 조성되는 기금 총액은 32억 유로이며, 이 중 16억 6천만 유로가 유럽지역발전기금(EFRE)으로부터 지원된다. 이 자금은 신연방주에만 투입되며 지원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연방 교통기반시설구축 프로그램

브란덴부르크

- 베를린-프랑크푸르트(오더) 간 철도시설 확충
- 브란덴부르크를 잇기 위한 연방고속 및 연방도로 A 113, B 96, B 96a 신설, 확충
- 비젠하겐 우회도로 신설, 클리스토프와 트레빈(B 101n) 구간 신설, 연방고속도로 룩켄 발데 북 - A 10 베를린 환상도로
- 구벤 우회도로 신설 (B 97n/B 112n)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 연방고속도로 A 20의 슈트랄룬트 연결점으로부터 베르겐까지 뤼겐 방향의 연방도로 B 96n 신설 (2차 슈트랄룬트 교차로 제외)
- 연방고속도로 A 20 구간 신설
- 로슈토크 항구도시 철도연결구간 보수공사

작센

- 라이프치히 도심터널 신축
- 2002년 홍수로 인한 피해지역의 철도연결구간 보수공사
- 드레스덴과 체코공화국 국경 간의 연방고속도로 A 17 도로건설

작센-안할트

- 할레~바이센펠스 할레 남쪽 철도연결구간 확충
- 연방도로 B 6 노이 구간 신설
- 엘베~하벨~수로 구간 확충
- 할레/라이프치히 지역의 교통체계운영 시범프로젝트의 시행자료작성 및 일부 시행

튀링엔

- 연방고속도로 A 71 구간 신설
- 파더보른~켄니츠(독일중앙 연결철도), 에어푸르트~글라우하우~쉴베른헨과 교차점인 게라지역의 철도구간 확충

5.4 고용창출을 위한 인프라구축(BSI)

고용창출을 위한 인프라구축(BSI) 협정은 2002년 「직업 악티브(Job-AQTIV)법률안」을 통해 제3차 사회법 개정안(SGB III) 279a에 명시되었다. 이 BSI 협정을 통해 사회인프라의 추가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노동부로부터 지원받게 되었다. 지원의 전제 조건은 건설업체들이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노동청이 명시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단, 지원금은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25%, 노동청에서 명시하는 일자리 수는 전체 고용자의 최대 3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2005년 3월에 신연방주의 도로건설을 위한 첫 BSI-시범프로젝트의 시공식이 있었다. 게라 시의 연방도로 B2의 건설(게라-북향연결도로)로 연방정부와 튀링엔 주의 도로건설 프로젝트(L 1079, 게라-동측 직선구간)가 처음으로 노동청의 지원금을 받게 된 것이다. 게라 시 노동청의 지원금은 약 100만 유로이며, 이는 추가고용의 형태로 건설업에 직접 투입될 것이다. 노동청의 구체적 목표는 15명의 실업자 특히, 건설전문직 근로자를 프로젝트 기간 동안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다.

게라 시의 시범 프로젝트는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신연방주에서는 인프라구축 (BSI) 협정의 차원에서 20개가 넘는 도로건설프로젝트가 구상 중에 있다.

6

도시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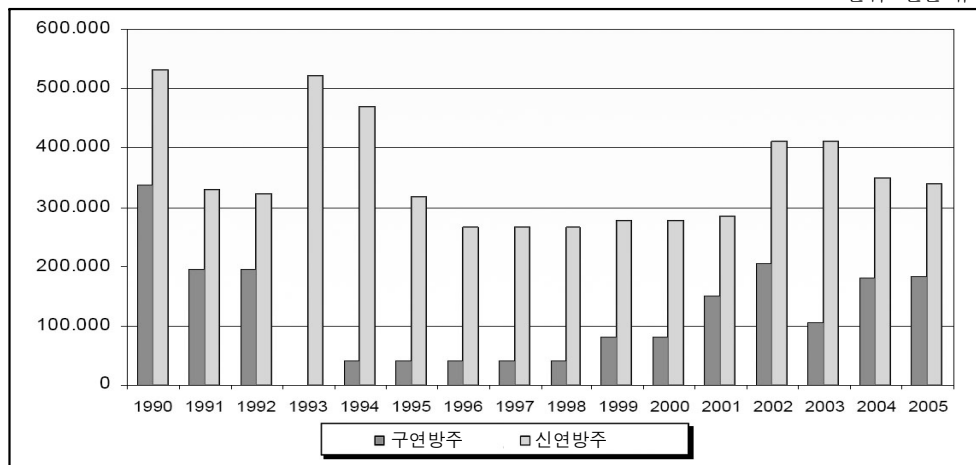
6.1 도시건설 촉진과 동독지역 도시재건

2005년 구동독 지역 도시건설을 위한 지원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2005년 신연방주 도시건설 촉진을 위한 건설 재정보조금은 총 3억 4천만 유로가 책정되어 있다(신·구연방주 총지원액은 5억 2천2백만 유로이다).

본 보고서의 작성 시기는 연방프로그램 계획이 한창 추진되고 있던 2005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인가를 받았거나 머지않아 인가를 받을 것으로 본다.

표 6.1 도시 건설 촉진을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1990~2005)

단위: 천만 유로



6.1.1 동독지역 도시재건 프로그램

연방정부는 구동독지역의 주택경기와 도시건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독지역 도시 재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998년 당시 구동독 지역에는 약 백만 여 개의 주택이 비어 있었다. 1990년대부터 급증하던 주택의 공동화 비율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둔화, 2002년에는 107만 7천 채¹¹를 기록했다. 독일 부동산건설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예산을 들여 빈집을 해체하기 시작하면서 2003년부터 주택의 공동화 비율은 감소세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독지역 도시재건 프로그램의 목표는 주택의 과잉공급을 줄이는 한편,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주택 건설업체는 기존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공동화된 주택이나 장기 미사용 주택을 보수·해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지난 8년간 총 10억 2천만 유로를 지원했는데 이러한 연방정부의 지원금은 각 주정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도시 재건축을 위하여 25억 유로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동독지역 도시재건 프로그램을 지원하려면 도시건설에 대한 총체적인 개발안이 있어야 한다. 도시개발안은 도시건설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 도시건설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 전체의 가치제고전략과 건물재건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이 같은 구상의 실천방안으로, 2002년 동독지역 도시 재건안을 공모한 바 있다. 이에 26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했으며,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약 천6백억 유로를 보조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295개 기초단체가 본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고, 2004년에는 이 기초단체들이 추진한 총 424개 사업이 지원받았다. 이중 347건은 철거, 162건은 건물의 가치상승을 위한 보수 사업이었다. 이 보수사업은 도시 주요건물의 보수, 주택의 현대화, 주거환경의 개선 및 기반시설의 확충을 포괄하고 있다. 2004년 연방지원금 중 69.9%가 건물 철거에 쓰였으며, 30.1%가 건물 보수에 투입되었다.¹²주정부와 지

¹¹ 연방통계청의 1% 표본조사 결과, 2002년도 마이크로센서스 추가조사 결과

¹² 보수사업은 연방정부, 주정부, 기초단체가 각각 33%씩, 철거사업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50%씩 지원했다.

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금을 합하면 총 5억 3,595만유로가 건물보수에, 5억 2,812만 유로가 재건축에 투입될 예정이다. 비율로 보면 50.37% 대 49.63%이다.

각 주정부의 집계에 의하면 2005년 6월말까지 동독지역 도시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철거된 주택은 9만 채, 주정부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 철거된 수는 22,000 채이다. 이로써 신연방주에는 총 11만 2,000 채의 주택이 철거되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철거된 주택 수는 총 17만 7,174 채로 본 도시건축 프로그램을 통해 8년 동안 35만여 채의 주택을 철거, 재건축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2005년 도시건설 촉진을 위한 행정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도시 주요건물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보수규정이 새로 마련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 단순한 건물과 관련된 안전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없이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건물의 옛모습을 유지하는 것과 건물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지원이 같은 조건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주정부는 도시재건 지원금의 50% 이상을 건물철거에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는 주택의 1/3정도를 철거하여 도시 미관을 살리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로써 동독지역 도시재건 프로젝트는 처음 의도대로 철거 수준을 넘어 보수를 통한 도시 가치 향상을 지향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재건에 관한 경험과 성과를 상호 지속적으로 교류해왔다. 예를 들어 2004년 11월 도시재건 프로젝트 전문 세미나를 개최, 도심의 가치상승 전략 및 재건지역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 또 도시재건 프로그램의 개선을 목적으로 2004년 동독지역 도시재건 연방실무부서가 신설되었다. 이 부서의 주업무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컴퓨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방주뿐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개발단계에 있으며, 연방이행 부서가 워크숍을 통해 컴퓨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연방정부는 '재건과정에서 고(故)건물¹³건물의 처리법 및 모범 사례'에 관한 연구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본 프로젝트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건물들을 실제 도시 재건과정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지자체가 역사적 건물을 보존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¹³ Altbau. 대략 194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

6.1.2 동독지역 도시재건과 기념물 보호

연방정부는 1991년부터 동독지역 기념건축물 보호 프로그램에 약 14억 8천만 유로를 지원했다. 동독지역 기념건축물 보호 프로그램은 역사 유적지 보존과 복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5년 신연방주의 155개 시(市)가 9천2백만 유로를 지원 받는다. 또 위 도시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프로그램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2004년 8월 기념건축물 보호를 위한 연방이행부서(www.staedtebaulicher-denkmalschutz.de)가 신설되었다. 이 부서는 현재 역사 유적지의 복원과 활용의 모범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6.1.3 전시회 ‘기념물: 구도시-새로운 삶’

통일 15주년을 기념, 신연방주의 역사적인 도시들이 1990년 이래 진행해 온 재건과정에 관한 전시회가 마련된다. 동독 지역 재건을 위해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이 함께 이룩한 업적을 선보이는 본 전시회는 건설교통부의 주관하고 동독 지역의 각 주정부 건설부, 독일 기념물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와 독일 시도연맹이 공동으로 후원한다. 2005년 9월 3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 순회 전시회는 가능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순회 개최될 예정이다.

6.1.4 복지도시

독일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도시’ 프로그램의 목표는 적극적, 포괄적 도시 개발 정책을 통하여 도시 소외지역 거주자들의 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2005년 독일 전역에 7,141만 8천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베를린을 제외한 신연방주는 총 1,320만 유로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단위별로는 2005년 총 49개 프로그램이 지원을 받게 된다. 재정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사회복지 도시 프로그램을 다른 지원프로그램과 연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계발 및 기회제공(E&C)’ 프로그램은 이의 좋은 사례다. 본 프로그램으로 2005년에도 ‘사회복지도시’ 프로그램 대상지역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이 마련된다.

사회복지도시 프로그램은 착수 이래 지금까지 5년간 정부뿐 아니라 전문가, 정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이끌어내며 큰 인정을 받았다. 360개가 넘는 프로그램 대상지역 및 252개 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정치인, 공무원간의 폭넓은 대화를 바탕으로 지역적 행정업무의 새로운 ‘철학’이 탄생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도시’ 프로그램은 각 도시들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거주도시로서 자립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신연방주로의 이주가 개인적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낙후되었던 미개발 지역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는 개선할 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도 포함된다. 한편 연방정부의 ‘사회복지도시’ 이행부서는 프로그램 참여자 간의 정보와 경험을 전국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인터넷 포럼인 www.sozialestadt.de를 운영, 활성화함으로써 독일 전역을 사회복지도시로 네트워크화 하는데 본 포럼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복지도시 개발은 아직 많은 과제를 안고 있어 향후 연방정부,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1.5 신연방주 지원수요

현재 구연방주 정부들은 도시건설 촉진을 위한 보다 많은 재정적 지원을 연방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연방정부는 2004년 구연방주 도시재건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4천만 유로의 보조금을 마련했다. 또한 16개 주 건설부장관들은 2003년 12월 동서독 지역에 지급되는 도시건설 지원금이 2005년부터 3년에 걸쳐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하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이렇게 될 경우 2007년까지 총 882만 유로가 동독지역으로부터 서독지역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연방의회는 연방정부에 2004년 12월 31일까지 도시 건설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본 보고서에는 신연방주와 구연방주의 지원금 수요가 제시되어 있다. 각 주정부 발표에 따르면 도시재건 프로그램뿐 아니라 기념건축물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 도시재건 수요의 약 40%가 지원되었다. 동독지역 도시재건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신연방주에는 아직 많은 과제가 놓여있다. 도시재건을 위해 필요한 금액의 12%만이 지급되었을 뿐이다. 사회복지도시 측면에서 본다면, 구연방주나 신연방주 할 것없이 모두 많은 재건수요가 존재하고 있다. 수요의 4분의 3이 어떤 형태로든 처리되어야 할 상황이다.

6.2 주택경기 안정화 대책

6.2.1 구 부채 청산규정

2000년 8월 28일에 통과된 (BGBl(연방법률관보). I S. 1304) 부채규정 개정안은 주택공동화로 피해를 입는 주택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구제 규정(AHG 6a)으로서 유효하다. 2000년 12월 15일 (BGBl. S. 1734) 제정되어 이듬해 1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된 구(舊)부채 청산규정은 주택경기와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공동화의 비율이 전체 주택의 15%를 넘어 생존을 위협 받고 있는 주택 건설업체들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재건은행(KwF)에 신청하면 철거 주거 공간 1평방미터당 최고 77 유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주택철거는 경제적 개념에 입각해 추진하는 동시에 도시건축이라는 측면에도 부합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본 목적으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총 11억 4천6백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공동화의 비율이 15%를 넘은 총 325개의 건설업체가 패키지 지원을 받게 된다. 빈 집 철거비용은 동독지역 도시재건 프로그램과 부채 청산규정에 의거, 지원되는데 2001년부터 3억 4천백만 유로 규모의 구부채 청산지원금이 건설업체의 철거비용(83,000채)으로 지원되었다(2005년 6월 30일 기준).

6.2.2 신연방주 주택건설업체 간 합병 시 토지 취득세 면제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신연방주의 주택 건설업체나 주택건설 조합이 합병을 할 경우 토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본 조치는 동독 지역의 도시 재건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주택의 공동화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건설업체들의

도산을 막는 데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의 성격상 유럽연합의 허가가 필요한 데, 베를린의 노동시장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미 허가를 득한 상태다. 베를린 노동시장지역과 관련해서는 현재 유럽연합이 검토를 시작한 상태이다.

6.3 주거시설 현대화

6.3.1 임대주택의 현대화를 위한 건설투자 지원

정부는 주거시설 현대화 수요에 맞추기 위해 1999년 제정된 「건설투자지원법」에 의거,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임대주택의 개·보수 시 평방미터당 614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체 비용의 15%를 지원했다(3 InvZulG 1999). 또한 2002년 동독지역 도시재건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1949년 이전 지어진 도심 주택에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주택경기의 구조전환에 대한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했다. 철거나 보수가 필요한 고(故)건물과 1949년에서 1959년 사이에 지어진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주거 면적 평방미터당 1,200유로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 비용의 22%까지 지원한다(3a InvZulG 1999). 그러나 평방미터당 50유로까지 이뤄지는 투자(자기참여)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지원이 중단되었다.

재정경제부와 건교부가 의뢰한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신연방주의 건설투자지원은 추가적인 자산투자를 창출했다. 또한 주택건설업체와 개인이 각각 25%, 50%로 투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 지원은 세금이 누진되지 않아 소유주들에 대한 지원이 동일하게 이뤄졌고, 처리과정이 간소하여 큰 효과를 낳았다. 이와 같은 투자가 이루어진 결과 낙후된 주택 중 3분의 2가 현대화되었다. 투자는 도시의 주택경기를 안정시켰음은 물론, 신규건축과 주택 공동화 감소에 기여했다. 주택공동화 비율을 살펴보면 투자지원을 받아 현대화된 건물이 그렇지 않은 건물보다 공동화 비율이 훨씬 낮다.

6.3.2 재건은행(KfW)의 지원프로그램

재건은행은 주거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의 신용대출 상품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품들은 2005년 1월 1일 새롭게 출시되었다.

- 2003년 4월에 시작된 2003 전국 재건은행 주거시설 현대화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약 2억 6천만 유로를 지원, 2004년 12월 31일 만료되었다. 2005년 1월 1일부터는 ‘**주거공간의 현대화**’라는 명칭으로 재건은행이 자체적으로 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 2001년 1월부터 시행된 14억 2천만 유로 규모의 전국 이산화탄소 배출건물 개선프로그램은 2005말까지 계속된다. 2005년 3월 17일 슈뢰더 총리는 2007년까지 7억 2천만 유로를 투입하여 지원을 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7

노동시장 정책

7.1 고용 및 실업률 변동추이

2004년 연평균 실업자 수는 16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4,000명이 감소했다(-1.5%). 이중 여성실업자수가 -1.7%로 남성 실업자 수보다(-1.3%) 감소폭이 크다. 또한 2003년에서 2004년으로 넘어오면서 20세 이하의 청년실업자 수가 감소한 점(-8.7%)과 54세 이상의 노인실업자 수가 감소한 점(-10.0%) 역시 긍정적인 현상이다.

2003년에 18.5%였던 전체 실업률은 2004년에는 18.4%를 기록했다. 신연방주의 실업률은 구연방주(8.5%)의 두 배 수준을 유지했는데, 신연방주 남성 근로자 실업률은 18.5%, 여성 근로자 실업률은 18.4%를 기록했다.

2004년 신연방주는 사회보험에 가입한 노동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4년 6월 노동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2,000명이 감소한(2.1%) 511만 명에 머물렀다. 이중 남성 노동자수는 257만 명으로 2.3% 감소했고, 여성 노동자수는 2.0% 감소한 254만 명이였다. 이에 반해 단축 노동자수는 2003년 6월의 739,000명에서 2004년 6월의 875,000명으로 18.4% 증가했다.

7.2 노동시장 개혁

2003년 12월 통과된 노동시장 서비스의 현대화에 관한 제4차 법안 (일명 하르츠(Hartz) IV 법안)과 2004년 7월 통과된 『지역자치 옵션법』은 지난 수십 년 이래 가장 변화가 큰 사회·노동시장 개혁법이다. 실업수당이 사회부조금과 통합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15세에서 65세까지의 구직자들은 새로 도입된 이 최저생계비(=실업수당II)를 지급 받는다(사회보장법 II).

구직자들에게 지급되는 최저생계비는 지방 노동청들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운영하는 고용분야 공동체에 의해 도입되었다. 즉 신연방주 내의 19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전국 69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지원한다. 직업센터(Job-Center)와 해당지자체의 체계적인 업무처리로 국민들은 해당관청을 찾아가기만 하면 곧바로 최저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노동시장의 서비스 현대화와 개혁을 위한 법안에 근거한 이와 같은 신규 노동시장정책을 즉시 더욱 광범위하게 실천해야 할 것이다.

연방정부는 ‘실업수당과 사회부조금의 통합’이 가져오는 결과를 계속 주시할 것임을 신연방주에 확언했으며, 이를 위한 방편으로 모니터링 조직을 신설했다. 신연방주도 참여하고 있는 본 조직은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실업수당-II와 함께 움부즈맨 제도가 도입되었다. 움부즈 위원회는 문제 발생시 자문을 담당하고 궁극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본 위원회는 상담이 필요한 신연방주의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05년 6월 29일 움부즈 위원회는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여 최저생계비의 적용과 확대를 권고했다.

7.2.1 구직자를 위한 기초보장

구직자를 위한 최저생계비 제도는 정부보조가 필요한 수요자에게 초점을 맞춰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은 하지만 이를 통한 수입만으로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기 충분치 않은 사람들이 본 최저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 수혜자 가족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사회보장비).

수혜자 가족에는 함께 사는 부모, 미혼 자녀와 배우자도 포함된다. 최저생계비(실업수당II, 사회보장비)의 액수는 기존의 사회부조금 수준으로서 최저생활을 영위하게끔

보장한다.

실업수당 및 사회부조금 책정 방법은 사회보장법 X II (사회부조)을 따르고 있다. 여기에는 일회지급과 반복지급 항목이 모두 명시되어 있다. 최소한의 의식주 비용뿐 아니라 사회생활 및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까지 지급된다. 그 밖에도 미성년자 보호, 장애아동 보호, 부채정산, 심리상담 등 최저생계비 수급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최저생계비 수급자가 미혼이나 편부모인 경우, 혹은 수급자의 배우자가 미성년일 경우 지급되는 금액은 동베를린을 포함한 구연방주에서는 345유로, 신연방주는 331유로로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책정기준은 1998년 소득과 소비에 관한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했고 현재 연금액수 상승을 고려하여 보완했다. 옴부즈 위원회는 2005년 6월 29일 발표한 중간평가 보고서에서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머른, 작센, 작센 안할트와 튀링엔 신연방주의 기초보장비가 14유로 적게 책정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연방정부는 2006년 1월 1일부터 기초보장비를 345유로로 통일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앞으로도 이 법안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새로운 개혁안은 각 가구의 형편을 고려하여 만들어졌다. 노동시장 서비스의 현대화에 관한 제4차 법안(일명 하르츠(Hartz) IV 법안)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소득이 적은 부모의 경우 자녀를 위한 추가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자신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으나 자녀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소득을 갖는 부모가 지원을 받는다. '자녀추가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실업수당II를 받을 수 있다. 자녀추가지원금은 자녀 한 명당 월 140유로까지 지급된다. 자녀수당 월 154유로에 경우에 따라 주택보조비까지 받을 경우, 자녀 양육비는 충분히 해결된다. 이 새 가족지원제도로 많은 가정이 실업수당II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한편 편부모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었다. 편부모의 경우 각종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는데, 특히 신연방주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16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편부모는 기존 지원금의 36%를 보너스로 받는다.

7.2.2 부가소득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고 정부조치들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2005년

10월 1일부터 실업수당-Ⅱ의 부가소득 조건을 개선했다. 개선된 규정에 따르면 정규수당 이외의 과외적 부수입에 대해 100유로까지 세금이 공제된다. 부가소득이 100유로 이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월수입이 총 800유로 이하일 때는 수입의 20%까지, 800유로 이상일 때는 수입의 10%까지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없는 수급자의 경우 1,200유로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한 명 이상인 수급자의 경우 1,500유로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7.2.3 노동시장 참여와 직업 재교육

구직자를 위한 새로운 최저생계비 제도는 ‘지원과 요구’라는 원칙하에 도입되었다. 그러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연방정부는 구직자 비율이 특히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이다. 특히 신연방주가 이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방안은 추가임금, 직업교육 및 재교육 지원 등이다.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정책에 투입된 비용은 첫 해에만 65억 5천만 유로였고, 이 중 42%가 신연방주에 투입되었다. 이는 실업수당-Ⅱ의 수급자 수에 비추어 본 실업수당은 신연방주가 평균보다 높다. 신연방주의 높은 청년실업률과 노동시장의 열악한 상황에서 비추어볼 때, 본 예산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인사 및 행정 지출예산으로 구직자에게 가이드 역할을 해줄 멘토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알선해주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특히 25세 이하의 청년실업자에 큰 도움이 된다. 멘토의 경우 1인당 최대 75명의 청년실업자를 상담, 보호하게 되어 있다. 청년실업자는 노동청에 가입하는 즉시, 일자리를 알선받거나 직업교육을 받게 되고 인턴 자리를 얻을 수 있다. 청년실업구제 정책 외에도 신연방주의 고령 장기실업자 역시 큰 문제다. 고령 실업자들을 우선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시켜야 하나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과 55세 이상의 장기실업자의 경우, 이들을 위한 기초보장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직업을 알선해주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는 고령 장기실업자에게는 추가일 자리를 제공한다(추가비용지급형 취업기회). 58세 이상의 장기실업자 중 실업수당-Ⅱ의 수급자를 위해 연방정부는 2005년 7월 ‘추

가일자리 5만개 이니셔티브'를 발족했다. 첫 단계로 3만개의 추가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연방주와 함께 5만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고령 장기실업자를 노동시장에 재편입하려면 지역의 잠재력을 보다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50세 이상 장기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지역별 특성과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연방정부는 2005년 6월 '지역 고용협정'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와 최종 목표는 고령 장기실업자를 노동시장에 재편입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50개의 지역별 혁신 지원프로그램을 선정·실행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의 경제, 노조, 행정당국, 연합체, 종교단체 등이 이에 적극 참여하며, 연방정부는 사회법 개정안 SGB II(노동공동체, 지역당국과 노동에이전시)에 따라 총 2억 5천만 유로, 프로젝트 당 최대 5백만 유로를 투입한다.

8

직업교육기회의 확대, 청년실업률 억제

청소년은 좋은 직업교육기회와 직장이 제공될 때 본인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고 사회의 온전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청소년 직업교육기회 확대와 청소년 실업퇴치를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독일의 이원교육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독일의 혁신과 사회 통합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노동시장 진출의 기회나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직업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직업 교육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독일의 이원교육은 오늘날에도 16세에서 20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 노동시장 진출로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초기교육이 부족하거나 부재한 경우 청소년들의 직업선택의 폭이 제한되고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손실을 초래한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직업교육 정책의 목표는 일할 의지가 있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8.1 직업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협정

직업교육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연방정부는 경제단체와 함께 2004년 6월 16일 ‘직업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경제단체들이 3년 간 매년 3만개의 추가 직업교육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취업자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매년 2만 5천개씩 만들어 취업알선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던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협정'은 직업교육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기업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직업교육자리를 늘렸다. 기업의 직업교육 계약은 2만 2천5백건 증가했다(+4.5%). 이에 반해 공공예산으로 운영되어 오던 직업교육 계약은 약 6천3백건 감소했다(-10.5%). 2004년 9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체결된 직업교육 계약은 총 57만 2,980건이다. 총 1만 5,346개가 증가한 것이다(+2.8%) (표 8.1 참조).

표 8.1 직업교육 계약체결 건수

	2004년 9월까지 체결된 직업교육계약	2003년 대비 증가량(건수)	2003년 대비 증가량 (%)
서독	448,876	14,129	+3.2%
동독	124,104	1,217	+1.0%
총	572,980	15,346	+2.8%

출처: BMBF/BMWA

신연방주와 베를린시에서는 1,217개의 직업교육이 추가로 생겨났다. 총 직업교육계약은 12만 4,104건으로 전년대비 1.0%의 증가량을 보였다. 신연방주는 성장이 비교적 눈에 띄지 않는데, 그 원인은 부진한 경제개발과 기업의 불안정성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평균 160명의 직업교육 일자리 창출 담당자가 직업교육 확대를 위해 1995년부터 신연방주와 베를린의 기업들과의 직접대화를 시도했다. 그 결과 연 17,000~20,000 개의 추가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그 중 80%가 실제로 구직자들로 채워졌다. 이외에도 이 담당자들은 기업의 직업교육을 지원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신연방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정부 당국도 직업교육생 수용 규모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작년만 하더라도 수용규모를 33% 확대하여 1만 7,600명의 직업교육생을 수용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5년에도 정부 당국은 이러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관련부처가 함께 나서고 있다.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사안 중 두 번째는 공동 중개 프로그램이다.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와 노동청은 2004년 8~9월부터 ‘직업교육 중계소’나 ‘중개의 날’과 같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능력별, 수준별 맞춤형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것이다. 또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교육생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 직업교육생의 수가 전년대비 2만여명 증가했으나, 중개프로그램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직업교육 신청자 중 아직 직업알선을 받지 못한 사람수가 2004년 9월 30일 기준 4만 4,600명이었으나, 2004년 12월말 기준으로는 1만 4,949명이나 감소했다. 이는 2003년 12월 기준보다 1,324명이 적은 수이다(청소년 1만 6,273명). 구연방주에서는 그 수가 2004년 9월 30일 기준 19,378명이었으나, 2004년 12월 말(-65.3%) 10,299명으로 감소했다. 신연방주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10,249명에서 (-68.8%) 4,650명으로 감소했다. 작센주와 베를린 시를 제외하면 전국 평균에 비해 신연방주의 감소비율이 월등히 높다. ‘동독지역의 직업교육프로그램’과 그 외의 주정부 차원의 추가지원프로그램이 직업교육의 통합에 큰 역할을 한 셈이다.

중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업들은 전국적으로 3만 1,500개의 ‘입사자격(EQJ)’ 자리를 제공했다. 이는 특히 개인적 이유로 일자리를 중개받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본 프로그램은 직업교육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들에게도 사고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었다. 2005년 7월말 당시 1만 7,5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기업의 ‘입사자격(EQJ)’ 자리를 얻었으며, 그 중 25%가 신연방주에서 채워졌다. 본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특별프로그램으로 월 지원금이 최고 192유로에 이른다.

2005년에는 직업교육 일자리를 찾는 사람의 수는 전국적으로 8,000명이 더 증가한 626,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수요증가 현상은 구연방주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노동청에 등록된 직업교육 일자리 수는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재계는 국가협정에 명시된 대로 해마다 3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하는 동시에 2만 5,000개의 ‘입사자격(EQJ)’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협정을 맺은 파트너들은 모두 활동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새로운 핵심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문화부장관회의-협력으로 청소년이 직업교육을 받기 위한 소양을 갖추는데 보다 힘쓰는 것이다.

8.2 2005 직업교육의 대안

연방정부는 ‘2004 직업교육의 대안’에 이어 2005년에도 직업교육제도를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다.

- ‘지역역량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연방정부는 지역역량 활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각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각 분야별로 하여금 기업의 직업교육 및 일자리 수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별, 분야별로 집중 지원했다. 그 결과 신연방주에서는 수많은 산학협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지역의 직업교육상황도 크게 개선되었다. 지역역량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 실시과정에서 형성된 네트워크는 각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였고 이러한 경제발전 효과를 통해 직업교육 상황이 다시 개선되는 효과를 보았다. 이러한 지역역량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은 그 추진과정에서 동독지역 직업교육 발굴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 ‘동독 지역-직업교육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동독 지역-직업교육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은 직업교육 일자리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현재 서독-직업교육 일자리의 일부로서 보완·운영되고 있다.

2006년부터 위 프로그램들은 통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리하여 각 지역의 수요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기업이 이원적 직업교육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이 구축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신연방주의 재정적, 구조적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8.3 동독 지역 직업교육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방-주 연합 프로그램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동독지역 공동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1996년 이래 신연방주 지역을 위한 일련의 직업교육 특별프로그램을 공동실시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매년 신연방주의 직업교육 변화 추이에 맞추어 이 프로그램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비는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각 주정부는 노동시장 및 직업교육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동독 공동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5억 9천만 유로를, 2005년에는 8천백만 유로를 추가 책정했다. 직업교육 일자리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연방정부는 경제단체와 함께 2004년 6월 16일 ‘직업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협정’을 체결했는데, 협정내용은 경제단체들이 3년간 매년 30,000개의 직업교육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는 것이다. 본 3개년 협정에는 신연방주의 직업교육생 1만 4,000명을 추가 수용할 것을 골자로 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2004년 9천5백만 유로를 지원했다. 2005년 5월 27일에도 같은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재 실시했다.

8.4 직업교육의 현대화

직업교육의 현대화는 부단히 지속되고 있다. 2005년 4월 1일자로 직업교육법 개혁안이 발효되었다. 그리하여 각 주정부는 전일 학교의 교육과정을 재편성하여 졸업생들에게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절차가 줄어드는 대신 개개인에게는 취업의 문이 넓어졌다. 직업교육의 현대화를 위한 프로젝트는 이 외에도 많이 있다. 1998년부터 180개가 넘는 구조조정 절차를 밟았으며 46개의 새로운 직종이 생겨났다. 올해만 해도 19개의 직업교육이 현대화되고 5개의 새로운 직종이 탄생했다. 그 중 2개의 직업은 2년 과정이다. 이 같은 조치가 이뤄져야만 기업이 제공하는 직업교육 규모도 커질 수 있을 것이다.

8.5 기업 연합 직업교육 연수원의 육성

여러 기업이 연합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할 경우, 개개인의 직업 능력 향상에는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전문 수공업, 광업, 농업 분야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신연방주 정부, 기업들은 동독지역에 서독의 기업연합 직업교육 형태를 모방한 연합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해왔다.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에 100여 개의 현대적인 기업연합 직업교육 수련장으로서의 연수원을 마련하고 1만 500여 직업교육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했다. 이에 더해 수련장의 장기 활용 계획의 일환으로 6,000여 개의 이론 학습장과 1,700여 개의 방을 갖춘 기숙사를 건립했다. 이를 위해 1991년부터 총 9억2,000만 유로의 연방예산이 신연방주에 투입되었다.

이처럼 기업연합 직업교육 연수원 설립을 통하여 신연방주 지역에는 일반직원 및 간부급 인사 등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현대적이고 양질의 교육기반시설이 마련되었다. 그 중 전문 수공업 분야는 기술의 진보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현대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간부 및 전문인 교육이 특히 필요한 분야이다.

경제전반에 걸쳐 기술 및 산업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식 및 기술을 보다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현대적 학습전달 방식이 요구된다. 연방정부는 전문 수공업 및 상업 교육기관에 기술이전 지원의 명목으로 시한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2002년 한 해 동안 신연방주에서 14개¹⁴ 교육장, 35명의 기술이전 교육담당자가 지원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인사 및 물류비용을 통틀어 71만2,000유로를 지원했다.

한편 2005년 이후, 인구구조의 변화로 학교교육을 제대로 마친 졸업생과 이원 교육참가자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이는 동독지역의 범기업 차원의 직업교육에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기술발전 문제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직업교육의 내용이 기술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범기업 직업교육장에 대한 새로운 지원을 구상하여 변화된 요건을 수용하는 문제해결에 힘쓰고 있다.

¹⁴ 로슈토크, 노이브란덴부르크, 슈베린, 노이루핀, 베를린, 포츠담, 프랑크푸르트(오데르), 막데부르크, 코트부스, 니더작스베르겐, 에어푸르트, 드레스덴, 게라, 주을, 켐니츠.

8.6 청소년 실업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들에게 보다 큰 직업교육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직업교육 및 취업을 통한 청소년 실업극복 긴급프로그램이 신설되었으며, 이는 2003년 12월 31일 만료되었다. 2001년 12월 10일 발효된 직업 악티브(Job-AQTIV) 법률안을 통해 2004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긴급프로그램이 제3차 사회법 개정안(SGB III)의 정규 정책방안으로 채택되었다. 여기에는 직업교육을 받기 전의 준비과정인 '정규직업교육을 위한 청소년 기초교육(AQJ),' '직업고등학교 졸업증 취득 프로그램,' '취업 병행 지원제도' 등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제3차 사회법 개정안은 2004년부터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2004년에는 25세 미만 청소년 53만 5,400명이 지원 받았다. 그 밖에도 2003년 12월 31일 만료된 청소년 긴급프로그램 JUMP 참가자 약 3만 8,800명과, 2004년 12월 31일 만료된 청소년 긴급프로그램 JUMP Plus 참가자 2만 5,560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로써 2004년 25세 이하 청소년 중 총 59만 9,751명이 노동청의 지원을 받았다.

실업 청소년의 취업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연방정부 특별프로그램-JUMP Plus는 2004년 말 성공리에 종료되었다. JUMP Plus를 통하여 2003년과 2004년 전국적으로 약 9만 5,000명의 실업청소년이 각 지역에서 직업교육 및 취업기회를 제공받았으며(동독: 4만 5,700명; 서독: 4만 9,200명), 또한 효과적인 직업교육, 취업알선을 위해 새로운 고용된 400명의 인력 역시 연방 노동청으로부터 별도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 외에도 지역 네트워크 및 지원구조를 구축, 확장할 수 있었다. 이로써 종래의 실업수당과 사회보조금 지급제도가 실업수당-II와 사회법 개정안 SGB II 로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 실업 청소년의 취업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연방정부 특별프로그램-JUMP Plus에 투입된 비용은 총 1억 9,140만 유로이다.

8.7 연방군의 직업교육지원

연방군 역시 청소년의 직업교육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연방군은 정부가 인정한 군 관련 19개 직종에서 연간 총 670개, 4개 행정부문에서 약 160개의 직업교육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2004년 연방군 지원자의 3분의 1이 신연방주 출신이며 작년에 입대한 군인의 40% 이상이 신연방주 출신이다. 이 중 35%가 직업군인이 되었다.

1998년부터 연방군은 내부 군사훈련 이외에 민간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군내 직업교육은 군 입대 이전부터 시작되는데 이를 샤움부르크 모델(Schaumburger Modell) 혹은 베를린 모델(Berliner Modell)이라고 부른다. 연방군은 교육생 일인당 매달 250유로의 직업 교육비를 책정하여 해당 민간기업, 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교육은 실업학교 졸업생들에게 관심있는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군내부에서 전문적 직업경험을 쌓게 하여 다양한 효과를 꾀하고 있다. 연방군의 직업교육생으로 선발되면 적절한 적성검사를 거쳐 직업교육을 받은 후, 최소 4년간 교육 받은 직종에서 군인 신분을 유지하며 근무한다. 현재 독일전역에 걸쳐 200여 명의 견습생이 이러한 직업교육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이 중 150명에 대한 직업교육이 동독 후진양성 센터의 지원으로 신연방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성공사례를 보자면 ‘단기근무 군인의 민간직업교육’ 프로그램(ZAW)을 들 수 있겠다. 연방군은 자체내부의 군사훈련 이외에 민간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노이브란텐부르크, 베에리트, 레니츠, 막테부르크/부르크 운트 바트 프랑켄하우젠에 21개월 단기복무 군인을 위한 민간직업교육장이 신설되었다. 슈베린, 파로브, 테테로브, 라이프치히와 신연방주의 기타 지역에서는 교육 커리큘럼을 다양화하였는데, 신연방주에는 2005년 상반기에만 600명 이상의 군인이 민간직업교육 21개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하반기에 들어 70명 이상이 다시 교육과정 이수에 들어갔다.

신연방주의 군인 약 3만 3,000명은 직업 지원서비스의 보호를 받는다. 이 직업지원서



비스는 노이브란덴부르크, 할레, 포츠담과 켐니츠 등지에 19개 소로 나뉘어 배치, 제공되고 있다. 이 서비스팀의 임무는 단기복무자를 보호하고, 직업군인 희망자에게 진로 상담을 하는 것이다.

9

아동, 청소년, 가족 및 여성 정책

9.1 지속적인 가족정책을 통한 가족 중심주의

세계화와 인구변동이라는 과제에 직면하여, 연방정부는 지속적인 가족정책을 국가의 모토로 내세우고 있다. 연방정부는 2010년까지 독일을 유럽 내에서 가장 가족친화적인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정계, 재계, 노조, 종교계, 복지단체와 기타 여러 단체와 함께 가족을 위한 연대에 참여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인프라 개선, 재정지원, 가족을 위한 시간확보를 정책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가족정책의 목표는 일과 가정의 조화, 저소득 가정에 빈곤탈출 기회 제공, 어린이를 위한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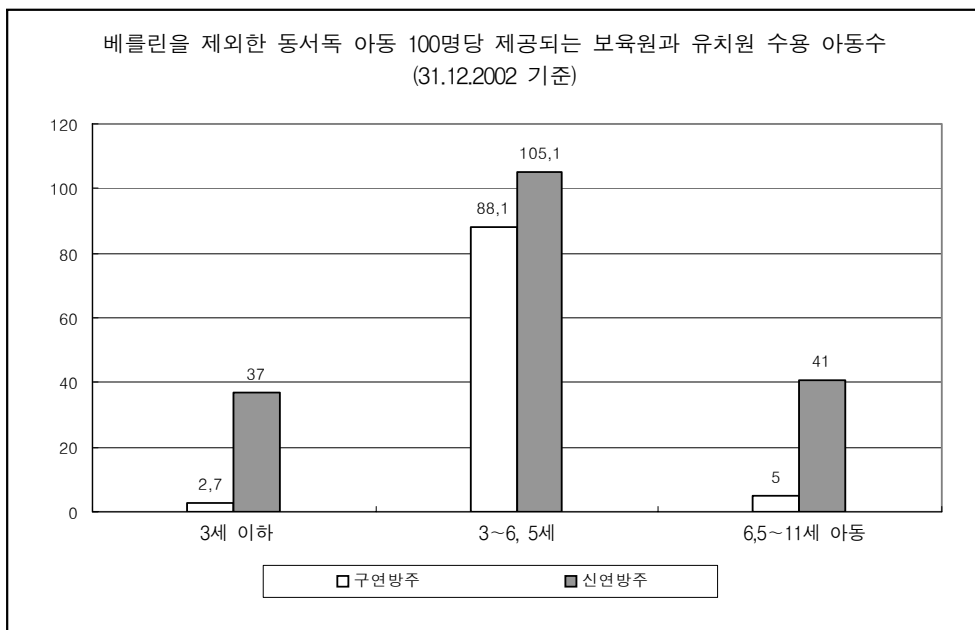
9.1.1 양질의 탁아시설 확충

구연방주 지역이 아직 탁아 관련 법률 및 시설이 부족한 반면, 신연방주 지역은 기존의 수준높은 탁아문화를 그대로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주정부 차원의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OECD의 2004년 12월 보고서 ‘Starting Strong’는 미취학 아동 탁아시설 부문에서 독일의 신연방주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명시했다(그림 9.1참조). 신연방주는 북유럽 국가 다음으로 많은 보육원, 유치원, 전일제 탁아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2005년 4월부터 ‘어린이-보다 많이...!’- 친 가족적인 독일’ 캠페인을 통해, 탁아시설 제공에 관한 정보,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 www.deutschland-wird-familienfreundlich.de에 제공하고 있다.

어린 아이들이 하루 종일 탁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정부의 최대과제 중 하나이다. 그리하여 연방정부는 신연방주 지역에서 3세 이하 아동에 대한 탁아시설을 확충하고자 한다. 정·재계, 사회단체, 노조와 종교계의 지원으로 2005년 1월 1일 어린이를 위한 탁아시설 확충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의 목적은 신연방주의 탁아시설 수용규모를 확대하고, 각 지역 및 가구 형편에 따라 차별화된 탁아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탁아시설의 이용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일제 탁아소나 전문 보육사, 시민단체 이니셔티브나 영리 서비스시설을 통하여 연방정부는 시와 공동체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15조 유로를 투입하고 있다.

그림 9.1 보육원과 유치원의 원생 수용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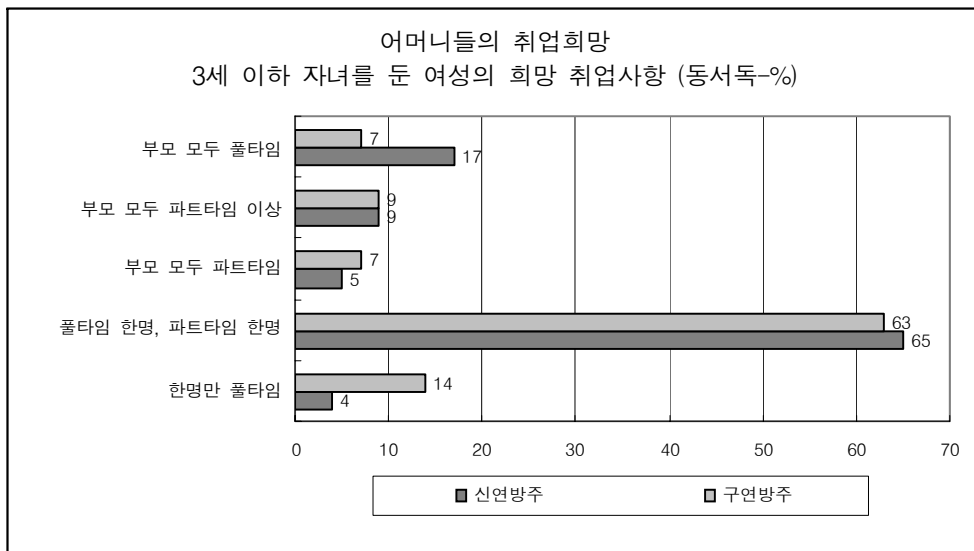


9.1.2 가정생활과 직업과의 균형

구연방주와는 다른 이유가 작용되겠지만 신연방주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일과 가정의 균형은 개인의 인생설계나 기업의 생산성, 사회의 통합을 가능케 하는 전제조건이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서는 사회전반의 지원이 필요하다. 연방정부는 2003년 여름 베르텔스만 주식회사(Bertelsmann AG)의 지원을 받아 ‘가족을 위한 연대’를 설립했다. 정치, 경제, 노조와 사회가 함께 이 연대를 설립한 것은 가정생활과 직업생활의 균형이 가족정책의 주요 목표라는 데서 비롯된다. 이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연방정부는 ‘가족을 위한 연대’라는 중장기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본 연대에 참여하는 경제계, 정치계, 노동계, 기타 여러 사회단체들은 가족 우호적인 근무환경과 기업 문화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친가족적인 기업은 사회적 복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작센 주의 KOMSA 주식회사의 경우에서 그 실례를 찾아 볼 수 있다(이 기업은 ‘성공요인-가족’이라는 기업경시대회의 중소 기업부문에서 수상한 바 있다).

그림 9.2 어머니들의 취업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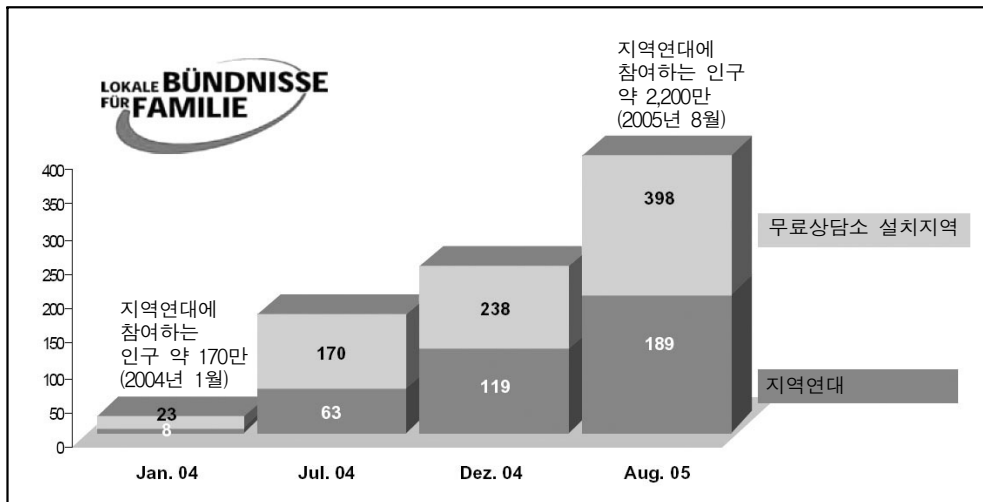


출처: IAB, 1999

9.1.3 가족을 위한 지역연대 프로젝트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일하고 사는 곳에서 가장 먼저 가족적인 느낌을 갖는다. 연방 정부는 전국단위의 이니셔티브인 ‘가족을 위한 지역연대’를 발족했다. 이는 정·재계, 시민단체와 노조, 종교계가 각 지역에서 가족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료상담 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기존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거의 전 지역에서, 기업은 전체의 3분의 2지역에서 지역연대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역연대 프로젝트는 레나테 슈미트(Renate Schmidt) 연방주총리와 루트비히 게오르크 브라운(Ludwig Georg Braun) 상공회의소장이 2004년 처음으로 착수한 이후, 양적으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2005년 8월 기준으로 전국에 결성된 지역연대는 약 190개이다(그림 9.3 참조).

그림 9.3 가족을 위한 지역연대



‘가족을 위한 지역연대’의 중점활동은 지역마다 차이를 보인다. 이를테면, 뤼겐(Rügen)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유연한 탁아시설 운영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가족을 위한 지역연대’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가족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 이를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케 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9.1.4 구체적인 재정지원

연방정부는 형평성을 고려, 저소득층 가족, 편부모 및 자녀 수가 많은 가족을 우선지원대상으로 삼고 이들의 생계해결을 위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나 직업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연방정부는 2005년부터 양육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다. 본 양육보조비는 부모 자신만의 생계만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저소득 계층에게 우선 지급되며, 자녀 1명당 월 140 유로를 지급한다. 여기에 154 유로인 기존양육비와 주거비까지 합쳐 저소득층도 어느정도 자녀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다. 연방정부는 본 제도를 통해 총 150,000명의 어린이와 그 부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9.2 남녀 기회균등

남녀의 기회균등은 역동적인 경제의 전제조건이자 상징이다. 그러므로 신연방주는 전통적으로 높았던 여성 취업률을 유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더욱 장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 신연방주의 교육, 연구, 혁신, 경제력의 신장을 목표로 진행중인 각종 기타 정책을 보완 추진하고 있다.

2004년 4월 연방정부는 베를린 훔볼트 대학 내 성별능력전문센터를 설립, 양성평등실현에 새로운 박차를 가했다. 이 성별능력전문센터는 젠더 메인스트리밍(Gender Mainstreaming)의 의미에서, 사회·경제·정치·행정 등 각 분야에서 남성·여성이 처한 서로 다른 상황과 관심사를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고려, 지원한다.

9.3 청소년을 위한 기회확대

연방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차세대 육성이다. 정부의 아동·청소년 정책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는 신연방주 지역에 잔존하는 불이익을 제거함으로써 이 지역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나은 직업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협력 및 기회균등을 경험토록 하는 것이다.

9.3.1 연방정부의 ‘우리가…여기서, 지금 (Wir...hier und jetzt)’ 이니셔티브

2003년 가을부터 시작된 연방정부의 ‘우리가…여기서, 지금’ 이니셔티브는 독일 차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서독으로의 이주를 막기 위한 방안(www.wir-hier.und-jetzt.de)으로 추진되었다. 424만 유로의 재원이 투입된 본 연방 이니셔티브는 프로그램이 종료된 2004년 12월 말까지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약 1만 3,000명의 청소년이 4개 부문에서 417개 개별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시간 뛰어넘기’라는 주제 하에 청소년들은 지역의 역사를 학습했다. 현지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아이디어 경연대회에서는 새로운 ‘전망’을 내놓았다. ‘노동’ 부문에서는 취업을 위한 조기오리엔테이션과 고용을 위한 지역적 활동, 인터넷 상의 인턴시장까지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청소년의 시민활동 이니셔티브는 ‘의미’있는 여러 활동들을 제공했다. 연방 이니셔티브는 민주 청소년 재단과 독일 아동·청소년 재단이 후원하고, 독일 청소년 연구소가 기술적, 이론적으로 지원했다.

이 행사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뿐 아니라 청소년 취업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연방이니셔티브 프로젝트로 얻은 경험과 지식은 전국적으로 청소년의 취업여건을 개선하고 향후 사회참여를 장려할 것이다. 본 업무는 민주 청소년재단 내 동독지역 인구유출문제 연구부서가 담당하고 있다.

9.3.2 개발과 기회

청소년의 실업퇴치를 위하여 ‘청소년 능력개발 및 기회제공 (E&C)’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E&C(www.eundc.de)는 연방-주 연합 프로그램인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복지도시' 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E&C가 실시되는 234개 도시 중 77개는 신연방주 지역이다.

E&C 프로그램의 핵심은 '역량강화 센터'이다. 이는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통합을 지원한다. 이 역량강화 센터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개인별 형편에 맞는 지원 방법을 개발하여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12개 연방주의 16개 지역에서 역량강화 센터가 건립되었으며, 그 중 5개가 신연방주에 있다. 그동안 약 3,000명의 청소년이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는데, 2002년 출범한 프로그램의 기한은 2006년까지이며 1,050만 유로가 투입되었다.

9.3.3 사회복지를 위한 지역자본 (LOS)

저소득층의 교육 및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연방정부는 각 지역을 연계하는 사회복지를 위한 지역자본 제도(LOS, www.los-online.de)를 유럽 사회기금(ESF)과 공동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소규모의 지역별 프로젝트와 현지 청소년의 자발적 활동을 통해, 특히 저소득층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삶의 여건을 개선하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현재 286개 지역의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61개는 동베를린 포함한 신연방주 지역이며, 1,450만 유로가 이 지역에 투입되었다.

9.3.4 민주주의와 관용

연방정부는 2001년 '관용과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청소년-극우주의, 반외국인 및 반유대주의 추방'이라는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의 민주적 태도를 배양하고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2006년 만료되는 이 캠페인은 세 분야로 나뉘어 실시된다.

- '크세노스(XENOS)-다양성 속에서의 삶과 노동': 독일 청소년과 독일 내 외국인 청소년, 독일인과 외국인이 조화로운 학교·직장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바로 이러한 상호이해 구축을 위한 여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인종차별주의와 반(反)외국인 정서를 퇴치하고,

관용을 촉구하는 여러 프로젝트를 노동시장관련 정책과 직접 연계시킴으로써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연방정부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프로젝트 운영비로 약 7천5백만 유로를 유럽사회기금에서 지원 받는다.

- ‘엔티몬(ENTIMON)-폭력과 극우주의에 대한 공동대응’: 이 프로그램은 2001년에 시작된 ‘폭력 및 극우주의 추방운동’의 후속으로, 2005년 프로그램 예산으로 천만 유로가 다시 책정되었다. ENTIMON은 민주주의와 관용을 강화하고 극우주의와 폭력 사용을 예방, 추방하는 운동을 벌인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ENTIMON의 일환으로 2,200여 프로젝트가 정부의 재정지원 하에 실시되었고, 약 1,700만 유로가 신연방주 지역에 투입되었다.
- ‘시비타스 (CIVITAS)-신연방주 내의 극우주의 추방운동’: 이 운동의 목표는, 신연방주 지역 내 민주적 시민사회를 구축, 강화, 연계, 발전시키는 것이다. 신연방주 지역의 청년층에서 확산되고 있는 극우주의와 반외국인주의를 추방하고자 2004년 한 해 9백만 유로가 이 운동에 투입되었다. CIVITAS 프로젝트 내 1,100여 개의 소규모 프로젝트가 학교, 재교육 기관, 스포츠 센터, 교회, 아동·청소년 캠페인, 사회복지, 난민구조기구, 언론 등에서 시행되었다.

2006년 말까지 연방정부는 약 1억 9천2백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엔티몬(ENTIMON)에 약 6천5백5십만 유로, 시비타스 (CIVITAS)에 약 5천백5십만 유로, 크세노스(XENOS)에 약 7천5백만 유로가 할당된다. 이 지원금은 유럽사회기금(ESF)과 연방주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9.3.5 정치참여 강화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로 유지된다. 그러나 많은 젊은이에게는 정치참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전문정치인들에게는 자신의 책임영역을 청소년들에게 나누어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북돋우려는 용기가 부족하다. 이에 ‘P 프로젝트-참여하라’(p는 정치 Politik와 참여 Partizipation의 앞글자이다) 운동이 시행되고 있다(www.projekt-p.de).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연방정치교육원(bpb), 독일연방 청

소년 서클(DBJR)이 공동 시행하는 이 운동은 12~21세 사이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정치참여를 지원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참여의 기회를 만들고자 지역 단위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6,000여명의 청소년이 200개의 프로젝트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베를린에서 열렸던 ‘베를린 05-젊은 정치 페스티벌’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프로젝트와 그 경험담, 결과들이 소개되고 전시되었다. ‘P 프로젝트’의 최우선 목표는 독일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보다 친화적인 나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P프로젝트’는 어린이 행복국가-독일을 만들기 위한 국가적 운동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10

건강보험 및 사회복지 보험

10.1 노후 생계대책: 법정 연금보험제도를 통한 노후생계보장

법정 연금보험제도는 신연방주 지역에서도 노후 생계를 보장하는 최우선책으로 그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다. 전국 통합 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1992년 1월 1일부터 구동독의 400만 명 이상의 기존 연금생활자가 경제활동 당시 수입에 따라 연금을 받는 연금제에 통합되었다. 연금액수는 당시 동서독 소득차를 감안해 서독의 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그 후 동서독의 임금변화추이가 차이를 보임에 따라 동독의 연금이 근본적으로 서독보다 높아진 셈이 되었다. 다시 말해 동독의 연금지급수준이 서독을 따라잡게 되었다. 이같이 연금액수가 동일해진 과정은 이른바 연금이익율 (Eckrente)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연금이익율이란 평균소득을 가진 사람이 45년 동안 불입한 후 받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동서독 지역에 모두 해당된다. 200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신연방주는 1.19%, 구연방주는 1.04%의 연금액이 증가했다.

2005년 1월 법정 연금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법안(『연금제 지속법』)이 도입되었다. 법정 연금보험제도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평균수명 연장 과 이에 따른 연금 납입자와 연금 생활자의 수적 비율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연금제 지속법은 연금 생활자로 하여금 부분적으로

책임을 분담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연금평준화 정책의 실행은 2004년 임금 및 연금지급액 상승을 토대로 연금수준과 연금월총액(연금총액)을 하락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연금제 지속법은 법안에 보호약관을 명시해 이러한 연금하락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 1일 연금수준과 연금총액에는 변동이 없다.

2004년 신연방주의 연금은 구연방주 지역 대비 87.9%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신연방주는 같은 해 구연방주의 연금지급을 위해 131억 유로를 지급했다.

2004년 7월 1일 현재, 연금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한 연금총액, 즉 실제 지급한 연금액은 신연방주의 경우 남자 1인당 평균 1,018유로, 여자 1인당 659유로였다. 이는 남녀 일인당 각각 973유로, 479유로가 지급된 구연방주보다 높은 액수이다. 이렇듯 신연방주 지역에서 실제 지급한 연금액이 지급될 연금평균률을 상회하고 있는 것은 첫째, 통일에 따른 연금제도 통합과정에서 기지급액 보호(Besitzschutzbetrag)가 적용되었기 때문이고 둘째, 신연방주 연금생활자의 재정원이 구연방주 지역에 비해 단순·통합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동서독 연금생활자의 수입원을 비교하면 뚜렷이 드러난다. 즉, 신연방주의 경우 법정 연금보험제도의 수입이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구연방주처럼 생명보험, 개인적 노후대책(예를 들어 부동산 수입원), 혹은 기업노후보장책 등 기타 수입원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연금평준화 정책은 연금 지속법이 도입됨에 따라 중단되었지만 신연방주 연금 상승률은 해당 지역 노동자의 실제 임금 및 소득상승률에 연동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연방정부는 장기적으로 신연방주와 구연방주의 연금이 평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두 지역의 임금수준이 평준화된다는 의미이다. 현재 연금 지속법에 의해 개정된 연금평준화 실천안도 임금, 소득 연동제를 따르고 있는 바, 앞으로도 각 지역의 소득수준에 맞는 실질적 연금평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외에도 연금액 자체 평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연금 변동 폭에 대해 신규 연방주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추가 보호약관은 신연방주 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법정 연금보험제도의 보험요율 안정화를 위해 2006년부터는 사회보험 분담금 납기일이 다음달 중순에서 이 달 말로 앞당겨진다. 이로써 재정이 부족한 기업들은 월말 자금난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적절한 과도기 또한 마련된다.

10.2 포괄적 국민건강 보호

건강은 개인의 삶이나 공공의식, 사회복지보험제도 전반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통일 후 연방정부는 신연방주 의료서비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결과, 오늘날 신연방주 주민의 건강복지 수준은 구연방주와 견줄만 하다.

10.2.1 신연방주 지역 의료보험제도(GKV) 현황

1998년 말까지 신연방주 지역 법정 의료보험제의 운영부채는 8억 유로에 이르렀으나,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상당부분을 상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2년과 2003년 재차 적자를 기록, 의료보험개혁 조치를 통해 부채를 탕감받아야 했다. 2004년 말 신연방주에 확보된 의료보험 재정은 7억 유로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 전(全)독일 위기구조 개선 프로그램(RSA)의 일환에서 이뤄진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공공재정 이전에 의한 것이다. RSA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동서독의 재정평준화와 보험금 지급에 사용된 금액이 2002년 24억 유로에 달했다. 2003년에는 약 30억 유로였다. 통계치를 볼 때 2004년에는 33억 유로에 이를 전망이다.

2004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신연방주 의료보험은 약 11억 4천만 유로의 흑자를 냄으로써 40억 유로 흑자를 기록한 독일 전체 보험흑자의 25%를 차지했다. 이러한 신연방주의 재정상황개선은 「법정 의료보험 현대화법(GMG)」 상의 지출제한과 수입제고 규정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동서독 지역에 각기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예컨대 의료보험 지급부문에서는 동서독 모두 보험가입자 1인 평균 3.5%의 지급이 감소한 반면, 납입부문에서는 서독이 1.3%, 동독이 0.2%로 서독이 동독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은 신연방주와 달리 구연방주의 의료보험 수입이 보험료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재정은 위기구조 개선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신연방주의 평균 보험요율은 2005년 6월 1일 13.94%로 구연방주 지역보다 0.24%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차이는 무엇보다 작센주 일반지역의료보험(AOK) 요율이 12.9%로 비교적 낮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10.2.2 법정 의료보험제도 현대화에 관한 법(GMG)

2004년 1월 1일 발효된 의료보험 개혁안은 현행 법정 의료보험제도의 구조개혁 및 재정구조의 개혁을 포괄하고 있다. 구조개혁을 통해 의료보험제 운영에 가장 큰 재정부담이 되고 있는 주요질병 부문에서, 품질과 경제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재정구조개혁이란 보험료 부담이 되는 기업의 임금부대지출(Lohnnebenkosten)을 중단기적으로 낮추고, 법정 의료보험제도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개혁안이다.

- **보험료 부담 축소:** 작년 독일 전역에서 이미 2,800만 이상의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았고, 2005년 초 추가로 약 350만 명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이러한 보험료 인하로 평균 보험료는 2003년 14.3%에서 2004년 14.2%로 인하되었다. 의료보험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보험료는 15%까지 상승했을 것이다. 2005년 6월 1일 의료보험료는 평균 14.18%이다(신연방주 13.94%, 구연방주 14.23%).

법정 의료보험제도의 현대화에 관한 법을 통해 신연방주는 두 가지 추가 이점을 얻게 되었다. 하나는 전국적 의료서비스 센터의 설립기반이 마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서독 지역 응급의료비용의 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10.2.3 의료서비스센터 설립허가-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이전

법정 의료보험제도 현대화에 관한 법 재정으로 독일 전국에 걸쳐 과거 동독 국립의료원과 유사한 형태의 의료서비스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구동독 의료보험제도의 주요 요소가 통독 의료보험정책에 수용·통합된 것이다. 의료서비스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전국적으로 이미 7개의 의료서비스 센터가 설립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의료서비스 센터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의료진과 비전문 의료보조원이 함께 일하는 종합병원식의 의료기관이다. 의료서비스 센터는 환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간편한 원스톱 방식으로 제공한다. 환자 치료에 관여하는 모든 의료

진들은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며 환자의 병세, 치료목표와 방식에 대해 의논한다. 이러한 의료서비스 센터는 보다 효율적인 진단과 치료를 보장할 뿐 아니라, 고가 의료장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의료경비 절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그 외에도 의료서비스 센터는 젊은 의사들에게 직원의 신분으로 응급치료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원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부담 없이 의료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직업전선을 떠나 있던 젊은 여의사들은 의료서비스 센터에서의 근무를 통해 업무복귀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파트타임 근무 등을 통해 직장과 가사를 돌보기가 보다 쉬워진다.

10.2.4 신연방주 지역 의사 소득추이

법정 의료보험제 현대화를 위한 법을 통해 신연방주 의사들의 소득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 법에는 동서독 지역보험 계약의사의 소득 평준화 규정을 담고 있다. 그리하여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신연방주 의사의 소득은 3.8%, 총 약 1억 2천만 유로가 추가 인상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베를린을 제외한 구연방주 의사의 소득지급분을 소폭 인하했다. 또한 신연방주는 의료서비스 안정 프리미엄 명목으로 연간 천5백만 유로를 현재의 소득지급분에 추가 지불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법 규정을 통해 구동서독 지역 의사소득의 평준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신연방주 의사의 소득 총액에는 2002년 1월 발효된 의사 거주지법의 도입으로 큰 폭 상승한 추가 소득이 포함된다:

- 이 법에 따라 신연방주 지역 기업의료보험 계약 의사의 소득이 기타 의료보험기관 계약 의사의 평균소득만큼 인상된다. 그리하여 전체 신연방주 의사의 소득 총액은 약 8천7백만 유로로 증가하게 되었다.
- 이 법은 또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신연방주의 모든 의료보험사에 최고 6%까지 진료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각 의료보험이 기타 서비스비용을 절감하고, 각 연방주의 기타 소득을 통해 상쇄할 수 있도록 하되, 진료비 인상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했다. 이 규정은 2003년 제정된 「보험료

안정법(일명 ‘제로섬 방안’)의 대상인 의사, 치과의사, 의료시설 진료비 규정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

최근 의료보험기관의 진료비 지출 통계를 보면 이미 이 법의 효력을 확인할 수 있다. 2002년 신연방주 법정 의료보험기관의 진료비 지출이 보험가입자 개인당 5.9% 늘었고 2003년에도 3.6% 증가했다(응급치료시). 이러한 증가세는 같은 기간 구연방주 진료비 지출증가세(2002년 1.3%, 2003년 2.5%)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의사진료에 대한 마이너스 변화치는 2004년 구연방주 -5.8%, 신연방주 -7.2%를 기록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환자들이 병원을 찾을 때마다 추가로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추가 진료비는 의사의 소득으로 곧장 들어간다. 최근 발표된 연방 보험계약의사 연합(KBV)의 추정에 따르면 추가 진료비를 통한 의사 수입은 2004년 10억 7천7백만 유로에 이른다. 이 진료비가 2004년 법정 의료보험(GKV)의 지출에 가산된다면, 진료비는 전년 대비 전국평균 1%상승한 결과가 된다.

자유직으로 근무하는 조산원의 수입도 증가했다. 2004년 7월 24일 발효된 조산원 소득규정 4차 개정법에 따르면 법정 의료보험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산원의 출산보조비는 평균 6.5% 증가했다. 이러한 조산원 소득 개선은 궁극적으로 출산보조업무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10.2.5 주치의 수급현황

신연방주 지역은 전반적으로 응급진료 서비스가 원활하다. 전문의 진료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따라 신연방주 의료개선안에도 공급과잉을 보이는 의료분야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몇몇 신연방주는 주치의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 원인은 주치의의 연령구조에서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주치의 중에는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많아 향후 수년 안에 이들이 은퇴하게 되면 주치의 수가 급감, 지역적 공급부족이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법정 의료보험제 현대화에 관한 법은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설 의료시설로 하여금 국가 의료보험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가,

공급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에 한해 의료서비스 안정프리미엄을 제공해 의료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의료서비스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언급된 의료서비스 센터 설립 또한 의료 공급 상황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10.2.6 입원환자 의료서비스 촉진 방안

급성질병과 응급치료 부문에 대한 만성적 투자부족 문제는 신연방주 지역의 의료시설에 투자함으로써 대부분 해결되었다.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1995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3억 5천8백만 유로를 신연방주와 베를린 지역(구 동베를린 구역)에 지원했다. 또한 신연방주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유사한 규모의 재정지원을 단행했고, 각 의료보험기관은 간호보험(Pflegeversicherung)에 연간 1억 7천9백만 유로를 지원함으로써 본 투자프로그램에 동참했다. 이러한 투자지원은 신연방주 노동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투자액 100만 유로 당 3~4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것이다.

2002년 1월 1일 『동서독 연대협약 지속을 위한 법률(SFG)』이 발표되었다. 이 법은 무엇보다 동독재건 투자촉진법과 의료시설투자프로그램의 법적 근거인 의료보험구조법 제14조를 개정한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의료보험구조법 제14조가 정한 특수목적용 연방재정지원금인 3억 5천8백만 유로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독재건 투자촉진법에 의해 지급되던 연방예산은 개정법에 따라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특별수요 연방지원금으로 신연방주 지역과 베를린에 지급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신연방주 지역은 자금사용에 있어 운신의 폭이 넓어졌으며, 연대협약-II에 따라 2019년까지 보장된 특별수요 연방지원금을 통해 현 의료시설 투자부족 사태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의료보험구조법 제14조는 2014년 말까지 간병보험에 대한 투자액을 확충할 것과 다양한 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발족할 것을 명시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규정은 신연방주재건 투자촉진법에 의해 변화되지 않고 상황에 맞게끔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베를린과 라이프치히에서는 일반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연방군도 입원환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인 환자들은 연방군 소속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서

비스 이용률도 높다. 연방군 소속 병원은 공공 건강보험제도에 통합되어 있고, ‘교육병원’으로서 의대생들을 위해 강사를 위촉, 직업교육을 제공한다.

10.2.7 안티D 지원법 (Anti-D-Hilfegesetz)

연방정부는 「안티D(Anti-D, 의약품 혈액형 Rh-인 산모가 Rh+인 태아를 임신했을 경우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투여하는 의약품) 지원 및 C형 간염환자 지원법(안티D 지원법)」을 새로이 제정하고 해당 산모 및 환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2000년 8월 11일 공포된 이 법률은 공포 초기부터 각 연방주에서 빠른 속도로 적용되었는데, 2000년의 경우 산모 및 환자에게 지급된 지원액은 총 87억 6천2백만 유로에 달했다. 이 중 71억 3천8백만 유로는 일시불, 16억 2천4백만 유로는 단계별로 지급되었다. 연방정부는 이 일시불 지원금의 전액과 단계별 지원금의 절반을 부담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지원은 법률 발효 당해에만 지급되었기 때문에 2001년 24억 1천백만 유로에서 2004년 19억 7백만 유로로 감소했다.

표 10.1 안티D 지원법 (2000년 1월 1일 발표)

해당년도	일시불 지원금	단계별 지원금
2000년	71억 3,800만 유로	16억 2,400만 유로
2001년	594,000 유로	18억 1,700만 유로
2002년	149,000 유로	19억 9,600만 유로
2003년	51,000 유로	19억 4,100만 유로
2004년	46,000 유로	18억 6,100만 유로

10.2.8 간병보험(Pflegeversicherung) 지원

연방정부는 「간병보험법 제52조」에 따라 1995년부터 응급 및 입원환자 의료서비스 수준을 조속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동서독 지역 의료수준의 평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한부로 2002년까지 매년 약 4억 900만

유로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은 2000년 연방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지급이 중단되었으며, 2002년까지 지급예정이었던 총 2억 2천백만 유로도 동결된 상태로, 2004년 당해 수요에 따라서만 지급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원연기에도 불구하고 총 33억 유로라는 지원규모에는 변화가 없다.

간병보험에 대한 재정지원규모는 각 연방주의 주민 수에 따라 결정된다(베를린의 경우, 구 동베를린 지역 주민수를 기준으로 한다).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고, 주정부는 나머지 20%를 주정부 예산, 해당 주 내 각종 투자기금, 혹은 지역구 예산액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러한 재정분담을 통해 1995년부터 2004년 말까지 신연방주 지역에 876개에 달하는 간병시설이 신설되었다.

이밖에도 연방정부는 간호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91년부터 96개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에 약 8천2십만 유로(2005년 7월 기준)의 예산사용을 승인했는데, 이 금액은 신연방주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파트타임 간호직, 입원환자 간호 시설, 임종환자시설(호스피스)의 신설 및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11

에너지와 환경

신연방주 지역은 천연가스, 석유, 갈탄, 석탄 및 재생에너지가 균형을 이룬 현대적인 에너지 공급체계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공급구조도 이미 시장경제체제로 바뀌었다. 그간 신연방주는 자연 및 환경보호, 환경유해 산업시설의 현대화, 광산개발 문제 해결에 있어 이미 장족의 발전을 거두어왔다.

11.1 에너지 정책

11.1.1 갈탄을 이용한 전력생산

신연방주는 갈탄 산업에서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갈탄산업은 여전히 신연방주의 주요 경제분야 중 하나이다. 그러나 1989년 3억 톤에 이르렀던 갈탄 채굴량은 통일 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1990년대 말 6,500만 톤으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현재는 갈탄 채굴량이 매년 8,000만 톤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95%의 전력생산성을 자랑하는 신설 갈탄 발전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가장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2004년에도 역시 갈탄 발전소의 가동률은 매우 높았다.

지난 몇 년간 갈탄의 환경친화적 이용 부문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 1990년 갈탄을 사용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독일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5%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22%로 크게 감소했다. 1990년~2004년 사이 독일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5.5%(추정 통계자료)나 감소시키는데 갈탄산업이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갈탄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47.6%나 감소해, 독일이 교토의정서를 준수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현재 신연방주의 갈탄산업은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갈탄 채굴지역과 전력 생산지역의 노동시장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게 되었다. 2004년 말 현재 관련 지역의 종사자 수는 약 1만 1,100명에 달한다.

11.1.2 재생에너지

신연방주 지역에도 재생에너지 생산이 상승일로에 있다. 예를 들어 지난 몇 년간 신연방주에는 총 5,581개에 달하는(2005년 6월 30일 기준) 풍력기가 설치되어 총 5,662메가와트(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전 독일 풍력에너지 생산의 37%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 외에도 '농촌구조 개선 및 해안지역 보호(GAK)' 공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된 재생에너지법과 연방정부의 시장도입 프로그램, 농업투자촉진 프로그램(AFP)을 통해 신연방주는 바이오 가스생산 및 사용을 크게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은 노동시장의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직·간접적 고용창출 효과는 독일 전역에 걸쳐 약 13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중 상당 부분이 신연방주 지역에 해당된다.

2004년 8월 1일 발효된 『개정 재생에너지법(EEG)』으로, 독일 내부적으로도 이미 연간 115억 유로의 이윤을 창출하는 흑자산업인 재생에너지, 즉 태양·풍력·수력·지력·바이오 에너지 산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리하여 이 법은 훌륭한 기후보호 수단이자, 혁신동력이며 독일의 환경기술 수출을 촉진한다 하겠다.

11.1.3 온실가스 방출권 거래

2005년 1월 1일부터 모든 EU회원국은 기후 보호를 위한 새로운 환경보호정책인 온실가스 방출권 거래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온실가스 방출권 거래제도로 독일에서도 기후보호를 위한 제반조건이 근본적으로 개편되었다. 온실가스 방출권 거래제도는 이산화탄소(CO₂) 방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경제적인 제도이다. 이산화탄소(CO₂) 한 톤 당 가격은 온실가스 방출권 거래 시장에서 결정된다. 모든 기업은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량을 신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즉, 모든 기업은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량 달성 방법을 각기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투자, 이산화탄소 저발생 연료 사용, 이산화탄소 방출권 추가 구입 등의 방법을 들 수 있겠다.

제1차 온실가스 방출권 분배 기간(2005년~2007년) 동안, 2004년까지 운영되고 있던 독일의 모든 방출권 거래 의무 시설들은 총 14억 8천5백만 톤의 이산화탄소 방출권을 할당 받았다. 제1차 온실가스 방출권은 무상으로 분배되었다. 총 시설의 3분의 2와, 총 방출권의 80%는 에너지 산업에 배당되었다. 총 1849개의 온실가스 방출권 거래 의무 시설 중 약 18%에 달하는 336개 시설이 신연방주에 위치해 있고, 신연방주는 총 14억 8천5백만 톤의 이산화탄소 방출분량의 23%에 이르는 3억 4천만 톤에 이르는 방출권을 분배 받았다.

독일 국내의 온실가스 방출권 분배규정에 의하면, 방출량 할당을 결정할 때 특수한 상황을 결정에 참작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온실가스의 조기감축('early action')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 특별규정은 이미 90년대 이산화탄소를 상당량 감축한 신연방주에 특히 유리하다. 그리하여 총 할당량의 84%(방출권 3억 3300만 만 톤 중 2억 7천9백만 톤)가 신연방주에 주어진다.

11.1.4 효율적 전력생산

신연방주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현대적인 열병합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다. 주로 천연가스 연소방식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은 현재 2,400메가와트(MW)에 달한다. 발전소의 연평균 가동시간은 4,000시간으로 연간 총 수요전력의 8%를 열병합

발전이 공급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소의 유지 및 확대는 2002년부터 「열병합발전소의 유지, 현대화 및 확대에 관한 법」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이 법은 열병합발전소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11.2 환경유해 산업시설의 현대화

신연방주의 환경유해 잔여 산업시설의 현대화에 대해 연방정부와 신연방주 정부는 1992년 12월 행정협약을 체결, 이 협약에 따라 통일 후 위탁 경영된 신연방주 기업이 신탁기간 만료 이후 시설을 현대화할 경우, 연방정부가 소요비용의 60%를 주정부가 40%를 각각 맡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시설현대화의 규모가 클 경우, 연방정부의 부담분이 늘어난다(연방정부 75%, 주정부 25%).

연방정부는 1999년 튀링엔 주, 2001년 작센-안할트 주, 2003년 1월 1일에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주와 각각 환경유해 시설 현대화 산업에 관한 일반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으로 환경 유해 시설 현대화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주정부로 이전되었다. 브란덴부르크, 베를린, 작센주의 시설현대화 작업 역시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비용부담을 주정부의 몫으로 넘긴 것은 주요 산업지대의 유지, 지속적 이용을 통한 산업시설의 휴지 방지, 산업에 불필요한 부지의 용도 변경을 취해서이다.

연방군 내 국토수호관리청은 연방군 소속부지 중 자연·환경유해성 토지를 발견·조사·측정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재개발해야 한다. 1990년 초 신연방주 환경유해 토지비용은 구연방주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었으나, 수차례의 재개발 사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오늘날에는 동서독 토지환경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연방군 소속 지리학자, 신연방주의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큰 공헌을 한 바 있다.

11.2.1 갈탄지역 재개발

지역적으로 넓게 자리잡은 신연방주 갈탄광을 포함, 갈탄 정제시설은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환경유해 갈탄지역의 재개발 작업은 통일 직후 연방정부의 고용

창출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1993년 이후부터는 연방정부와 갈탄생산지역 주정부 사이에 맺어진 환경유해시설 재개발 규정에 관한 행정협정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1990년 이후 연방 및 주정부 예산 약 75억 유로가 폐쇄 노천광의 안전개선과 재활용화 작업에 투입되었다. 현재 이 작업의 5분의 4가량, 특히 비탈 낙석방지, 폐광입구 차단, 피복층의 안전이동 및 산적, 가동중단 석탄공장 및 발전소 안전철거 등은 이미 마무리 된 상태이다.

2003년~2007년 사이 갈탄지역 재개발에 책정된 예산은 14억 유로로 연방정부와 갈탄 생산지역 주정부가 각각 75%, 25%를 분담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노천광 지역 지하수 재개를 위해 각각 1억 유로씩을 공동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갈탄 생산지역이 소재하는 주정부는 2007년까지 갈탄광 지역의 재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가분 1억 7천5백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갈탄지역 재개발 프로젝트의 총괄책임자는 연방정부 소속의 라우지츠 중부 탄광관리 주식회사(LMBV)이다. 이 기업은 현재 700명의 직원을 갖춘 전문기술보유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LMBV사는 2004년 259명의 청소년에게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등 직업교육 분야에서도 라우지츠 및 중부독일 갈탄광 지역 최고의 선도기업 역할을 맡고 있다.

갈탄지역 재개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탄광지역 지하수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갱구 지하수의 흐름 재개, 탄광지역 지하수 수질개선 및 지하수 부족문제 해결 등이 관련 현안이다.

갈탄지역 재개발과 관련해 2003년 한 해 다음과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

- 약 6천500만 입방미터의 피복층 토지, 암반이 이동처리 되었다.
- 1,238개의 환경유해 위험지역 중 716개 지역이 이미 현대화되고, 적합한 안전조치가 취해졌다.
- 약 100만 톤에 이르는 폐수가 처리, 정제되었다.
- 약 4,720만 입방미터의 갱도가 폐쇄, 적합한 안전조치가 취해졌다.
- 1000 헥타르의 탄광 토지가 광업법에 따라 재개발 되었다.
- 대규모 홍수 이후 2004년 말까지 탄광 지하수로 약 17억 리터가 사용되었다.

- 약 6,300 헥타르의 탄광토지가 기타 용도로 매각되었다.

앞으로도 갈탄지역 재개발은 지역 노동시장의 부담을 덜어 줄 것이다. 2004년 평균 갈탄지역 재개발로 창출된 중부 독일과 라우지츠 지역의 일자리 수는 약 6,280개에 달한다.

폐광지역의 재개발, 현대화에 지속적인 협조를 한 광업종사자들 덕분에 라우지츠와 중부독일 탄광지역은 오늘날 매력적인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또한 이 지역 주민들도 많은 시간과 돈이 투자된 폐광지역 재개발의 이득을 차츰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갈탄지역 재개발 사업은 2005년 9월 연방총리의 지원 하에 개최된 국제 재개발 회의를 계기로, 독일 산업사에 있어 전세계에 자랑할만한 성공담으로 남게 되었다.

11.2.2 방사성 방출시설 폐기

연방정부 소속 공기업인 비스무트 주식회사(Wismut GmbH)는 1991년부터 정부의 위임을 받아 작센, 튀링엔 지방에 소재한 신연방주-소련 합동 우라늄 탄광시설을 철거·재개발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방사성 물질과 기타 유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토지와 시설을 재개발, 현대화하는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인구 밀집지역인 이 지역 주민에게 다시금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비스무트 주식회사는 재개발 작업의 3분의 2가량을 이미 마무리한 상태로, 이에 소요된 정부예산은 약 42억 유로이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해당지역 방사선 및 기타 독성 물질 등 환경 유해요소는 크게 감소한 상태이고, 더불어 기존 탄광지역의 경제, 주거환경 개선의 전제조건이 마련되었다. 비스무트사의 지휘 아래 재개발된 토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위한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재개발된 기존 폐광지역의 상당부분이 2007년 게라-론네부르크 지역에서 개최되는 독일 전국 정원 박람회(BUGA)의 부지로 사용될 것이다(론네부르크 신부지).

오늘날 약 2,200명의 직원을 거느린 비스무트 주식회사는 독일경제 전반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비스무트사는 매년 340명의 청소년에게 직업교육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1억 유로에 달하는 재개발 사업을 공개입찰을 통해 타기업에게 발주하고 있다.

입찰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주로 작센과 튀링엔주의 기업들이다.

기업경영과정에서 쌓은 각종 재개발 기술은 자회사인 비스무트 환경기술 주식회사(WISUTECH)가 관리하고 상품화하고 있다. 이러한 비스무트사의 각종 사업은 비스무트사와 해당 개발지역의 고용안정 및 새로운 고용창출에 기여한다.

아직 남아있는 재개발 사업들도 2015년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사업종료 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사후처리 프로젝트가 이어질 예정인데, 폐광지역 지하수 범람 및 누수방지, 재개발 토지의 유지, 보수작업, 지속적 환경 감시 작업 등이 이에 속한다.

2003년 연방정부와 작센 주정부가 구 탄광 재개발을 위해 체결한 행정협약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연방정부와 작센 주정부는 2012년까지 총 7천8백억 유로를 절반씩 부담하여 이 지역의 구(舊) 우라늄탄광 시설을 철거하고 환경유해 잔여물을 제거하기로 했다. 제1차 재개발계획은 이미 성공적으로 완료된 상태이다.

2001년 연방은 요한게오르겐슈타트 및 브라이텐브룬 지역의 7개 우선 프로젝트의 사전조사를 위해 50만 마르크(25만 5,646 유로)를 비스무트 사에 지원했다. 2002년 시작된 위험폐광지역의 안전시설 설치작업은 2004년 마무리 되었고, 이 작업 역시 연방정부와 작센 주정부가 각각 239만 유로를 투자하는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

그라이프스발트/루브민, 라인스베르크 지역에 위치한 가동이 중단된 소련형(形)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는, 연방의 재정지원으로 2004년까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연방 소속 기업인 북에너지사(EWN)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서방선진 8개국의 협정에 따라 2003년 가을부터 시작된 러시아 핵잠수함 폐기 프로젝트에 대표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원자력발전소 철거 프로젝트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과거에 원자력발전소로 유명했던 그라이프스발트 지역의 부지 용도 변경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의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하나로 건설된 산업항구와 더불어, 2004년에는 태양열발전소(1.6 메가와트)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또한 고효율 가스증기발전소(GuD 발전소) 건설 준비는 베를린-루브민 간 가스 파이프라인이 완공되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고효율 가스증기발전소의 설립은 환경보호를 위한 세계개혁의 일환인 전기생산 에너지원 조세 평등법의 도입을 통해 가

능할 수 있었다.

11.3 자연보호

11.3.1 BVVG 자연보호지구/ 녹색벨트(Grünes Band)

2000년 9월 22일 발효된 재산권보완법에 따라 약 10만 헥타르에 달하는 연방 자연보호지역은 토지활용 및 관리 주식회사(BVVG)의 토지 사유화 사업에서 제외되었다.

2005년 1월 말 현재 주정부, 각종 자연보호 단체, 재단에 무상 제공될 예정이었던 자연보호지역 토지 약 5만 헥타르 중 2만 8,448 헥타르가 소유이전 되었고, 2005년 말 까지 나머지 토지 중 5,190 헥타르가 이전될 예정이다. 토지활용 및 관리주식회사(BVVG)는 2,575 헥타르의 토지가 추가 이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상제공 예정이었던 5만 헥타르의 자연보호지역 중 소유가 이전된 부지는 2005년 1월 말 현재 1,064 헥타르에 이른다.

BVVG 자연보호지구와 더불어 녹색지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환경보호지역으로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연방정부는 녹색지대의 유지·보호를 장려하기 위해 여러 프로젝트 및 활동을 성공적으로 진행시켜왔다. 이에 더해 연방재무성 장관은 사유지 재청구 소송권이 없는 구 동서독 경계의 녹색지대 부지(구 국경지역 토지법 해당지역)를 무상으로 해당 지역 주정부에게 이전할 것을 발표했다. 이로써 연방정부는 주정부에게 구 국경지대를 따라 형성된 녹색지대, 즉 환경보호지역을 전 국토를 가로지르는 자연생태지역으로서 지속 보호할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 셈이다. 각 주정부는 현재 연방정부의 이러한 제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11.3.2 자연보호 프로젝트

브란덴부르크 주의 자연보호 대형프로젝트 ‘슈프레발트(Spreewald)’는 2년간의 계획기간을 거쳐 2004년 9월 실행에 착수했다. 브란덴부르크 슈프레발트 지역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은 2013년까지 총 895만 유로를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연방은 메클렌부르크-포르포머른 주와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샤알제(Schaalsee)' 프로젝트를 위해, 2005년 2월부터 연방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프로젝트 계획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자연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고 자연경관을 돋보이게 하는 조치 등이 취해질 예정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한 총 예산액인 480만 유로 중 340만 유로는 연방이 지원한다.

11.3.3 자연보호와 관광사업

관광업은 신연방주 지역의 주요산업 중 하나이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60만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다. 신연방주에서 특히 농촌지역의 농업 실업인구는 관광업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경관 및 자연보호는 관광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휴가·여행 연구협회가 매년 실시하는 여행 추이분석에 따르면, 자연을 경험하는 것이 여전히 독일인 여행동기의 최우선 순위로 꼽히고 있다. 때문에 연방환경부는 '녹색시대' 계획을 장려하고 있다. 연방환경부는 녹색시대에서 관광사업을 개발하여 최소 두 개 시범지역에서 실시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자연보호에 있어 중심역할을 하는 것은 대규모 보호지역 지정이다. 여기에는 국립공원 이외에도 야생생태보호지역, 자연공원 등도 들어간다. 연방 환경부는 관광이 대규모 보호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조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메클렌부르크 포르포머른 주에 위치한 뮈리츠(Müritz) 국립공원은 방문객 수입만으로 134만 유로를 벌어들였다. 국립공원 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63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냈다. 국립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90년대 조사된 설문결과와 일치한다. 뮈리츠 국립공원 방문객의 56%는 국립공원 존재여부가 여행지 선정에 중요한, 아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응답했다.

11.3.4 연방군 훈련장의 장기적 사용

2002년 발효된 군 훈련장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연방지침은 연방군의 자연보호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 지침은 최신 자연과학 지식과 자연보호에 대한 사회, 정치 전반의

인식 등을 잘 반영하고 있다.

군 훈련장의 규모는 신연방주 9만7천 헥타르, 구연방주 9만천 헥타르로 연방군이 사용 중인 토지 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군 훈련장은 기본적으로 접근을 금지하고 있으며, 비료 및 농약의 사용, 그 밖의 유해 환경 물질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실제에 가까운 군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제 생활공간의 축소형과 같은 자연 구조가 요구된다. 때문에 군 훈련장으로는 일반 지역보다 생태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이 적합하다.

통독 이후 연방군은, 구소련연방 및 구동독 인민군(NVA)이 자주 사용하던 군 훈련장을 서독수준의 환경, 자연친화적 상태로 개선시키는 작업에도 큰 몫을 담당했다.

이와 같은 환경개선의 결과, 각 연방주는 '자연 2000'(동식물 서식지(FFH) 및 조류 보호지역 토지환경조사) 과정에서 여타 지역을 놔두고, 군 훈련장을 우수환경지역으로 등록하기도 했다.

12

예술, 문화, 스포츠

12.1 신연방주 및 구 동베를린 지역 문화지원

연방정부 문화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는 신연방주 문화시설, 재단이 국내외적으로 명성에 걸맞은 시설과 수준을 갖추게끔 하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에 걸친 연방정부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신연방주 지역의 문화저변은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문화사업을 개발, 신연방주의 문화창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2.1.1 등대 프로그램

연방정부는 신연방주 주정부가 범지역적 문화시설과 재단을 보호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5년 연방정부는 총 7,500만 유로를 신연방주 문화재단에 지원했다.

-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지역 프로이센 성 및 정원 보호재단
- 바이마르 고전주의 및 문화재 보호재단
- 데사우 건축공예학교 재단

- 소르비아 (구동독 작센과 브란덴부르크 주에 산재 거주하는 동유럽 소수민족) 민족 재단
- 라이프치히 바흐 자료실 보호재단
- 작센-안할트의 루터 기념관 보호재단
- 슈트랄준트의 독일 해양박물관 재단
- 할레 지역의 프랑크 재단
- 데사우-뵈블리츠 문화재단
- 바트 무스카우의 뤼클러 영주 공원 보호재단
- 뤼클러 영주 박물관/공원 및 브라니츠 성 보호재단
- 아이제나흐 지역의 바르트 성곽요새 재단
- 프랑크푸르트(오더) 지역의 클라이스 기념과 및 연구소
- 카멘츠 지역의 레싱 기념관
- 독일 중부 바로크 음악 상설회의

이외에도 라이프치히의 그라씨 박물관, 아이제나흐의 바흐하우스, 연방 프로젝트의 후원을 받는 앙커스하겐의 하인리히-솔리만-박물관 등의 문화기구가 올해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연방정부는 프로이센 성 및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정원 보호재단(SPSG)에 매년 천3백만 유로를 지급함으로써 재단의 최대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1990년에는 이 재단 보호하의 역사적인 유물인 성곽 300여 개와 고(古)정원 750여 헥타르가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통일 이후 SPSG 성곽, 정원의 보수작업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가속화되었다. 향후 몇 년 간 이뤄질 SPSG의 주요사업으로는 재단의 구조조정과 문화재 보호 및 관광상품화 차원에서의 성곽, 정원 보수작업 등이다.

바이마르 고전주의 및 문화재 보호재단 역시도 26개에 달하는 박물관, 기념관, 성곽, 공원, 괴테-쉴러 자료실, 안나 아말리아 여공작 도서관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문화재 기구이다. 1998년 바이마르 고전주의 및 문화재 보호재단의 문화재들 또한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이중 특히 주목을 끄는 문화재는 바이마르 고

전주의를 고증하는 중심역할을 할 안나 아말리아 여공작 도서관이다. 그러나 2004년 9월 2일 안나 아말리아 여공작 도서관의 지붕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코코실의 일부에 대형화재가 발생, 약 8만 여권의 책이 손실되어, 이는 독일 문화의 요람을 훼손한 국가적 문화재앙으로 기록되었다. 연방은 즉각적인 화재 복구를 위해 4백만 유로의 특별원조기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안나 아말리아 여공작 도서관의 재건 계획에 착수하여 2007년 완공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도서관 재건에 2005년부터 350만 유로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한다. 뿐만 아니라 2005년 바이마르 고전주의 재단의 건축물 및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기금으로 350만 유로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 기금에는 화재보호 시설 확충 비용이 포함된다. 연방 지원금은 총 7백만 유로에 달한다.

프로이센 성 및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정원 보호재단과 바이마르 고전주의 및 문화재 보호재단과 더불어 비텐베르크-아이즈레벤 지역 루터 재단, 바르트 성곽요새, 바이마르-데사우의 옛 건축공예학교 건물, 데사우-뵈를리츠 문화재단의 정원부지도 현재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상태이고, 2004년 7월 드레스덴의 엘프계곡과 바트 무스카우의 뤼클러 영주 공원도 세계문화유산에 새로이 추가되었다.

12.1.2 동독지역 국립문화기구 투자 프로그램

신연방주의 연방문화정책은 전반적인 문화 인프라 개선사업보다는 독일전역의 문화 발전에 영향을 미칠 만큼 명성 있는 문화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동독지역 국립문화기구 투자’ 명목으로 약 6천만 유로 상당의 문화투자 기금을 설립했다. 이 기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은 재정지원의 일부를 부담하는 각 주정부가 수립·제출하게 된다. 올해 이 기금의 지원을 받은 문화시설은, 드레스덴의 히게네 박물관(인체공학 박물관), 귀스트로프 지역의 에른스트-발락-재단, 고타 지역의 프리텐슈타인 성 등이다.

12.1.3 독일 전역의 주요 문화시설 목록

문화대국으로서의 독일의 자존심을 지켜줄 문화시설과 문화재의 상당부분은 신연방주에 위치하고 있다. 문화아말로 경관·자연보호를 통한 관광육성과 함께 신연방주 지

자체의 중요한 발전 잠재력이기 때문에, ‘문화 등대’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할레 지역 프랑크 재단의 전(前)대표 파울 라베(Prof. Dr. Paul Raabe) 교수는 연방정부와 문화·언론 담당관의 위탁을 받아 신연방주 주정부와의 협의를 거친 제3차 ‘문화 등대’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신연방주에 위치한 독일권, 유럽권 주요 문화시설의 목록을 담고 있고 통일 후 연방과 주정부 및 지자체의 문화 인프라 개선노력이 기록되어 있다. ‘문화 등대’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폭넓은 문화계층을 겨냥해 다양한 사진과 그림을 담아, 재판(再版)에 들어갈 정도로 성공을 거두었다.

12.1.4 기념건축물 및 유적지 보호사업

과거 동독정부가 수십 년 간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념건축물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통독 이후 독일은 문화재 관리와 보수라는 큰 과제를 안게 되었다. 연방정부는 2005년 한 해만도 다양한 문화재 보수 프로그램 명목으로 980만 유로의 지원금을 책정했다.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 독일 내 국보급 건축물, 고고학 발굴지, 유서 깊은 공원 및 정원자재 보호 및 보수를 위한 ‘국보급 문화 기념건축물 및 유적지’ 프로그램 (2005년 44건에 610만 유로 지원)
- 유서 깊은 도시 중심지 재건·보수를 위한 ‘역사도시보존’ 프로그램. 주요 건축물과 기념비의 유지·보수·현대화, 그리고 예술, 도시건축,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리, 광장 등의 유지·재건. 2005년 155건에 대해 920만 유로 지원. (6.2장 참조)

이런 지원과 함께 신연방주 및 구 동베를린의 기념건축물 보존도 연방정부의 주요문화정책에 속한다.

12.1.5 라이프치히 독일도서관

1912년 건축된 라이프치히 소재 독일도서관은 프랑크푸르트(마인)의 독일도서관, 베를린 독일 음악도서관과 더불어 ‘독일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부여 받은 국립 도서관이다.

라이프치히 독일도서관은 제 4차 증축기간 중 신문·잡지실이 추가로 만들어져, 독일도서관 내의 독일 도서·문서 박물관이 이 신문·잡지실로 이관된다. 독일 도서관의 증축공사를 통해 현재 베를린-슈테그리츠에 소장된 독일 음악자료가 독일 도서관으로 이전될 것이다.

12.1.6 연방문화재단

2002년 연방정부가 문화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던 연방문화재단 설립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연방정부가 이 재단을 잘레(Saale)강 유역 할레시에 설립한 것은 신연방주에 대한 국가적 책임감을 과시하고, 동서독 화합의 문화지원책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연방문화재단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독일이 국내외적으로 당면한 문화적 도전과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문화재단의 주요목표 중 하나는 국제 문화교류의 심화이다.

연방문화재단은 매년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 재단 설립초기인 2002년에는 천3백만 유로, 올해 2005년에는 약 3천6백만 유로가 지원될 예정이다.

12.1.7 문화수도 베를린 건설

연방정부는 문화도시 베를린 건설에 활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하나가 되어가는 시대에, 한 국가의 이미지는 그 국가가 대내외적으로 표방하는 특성, 상징에 의해 좌우되기 쉽다. 이러한 상징적 이미지 구축과 문화적 이해를 확산하는 작업인 독일문화정책에 독일 정부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1998년 정권교체 후 새로이 선출된 사민당(SPD) 정부는 수도문화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연방정부는 연간 4억 2천만 유로가 넘는 자금을 베를린 문화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2003년 12월 9일 연방정부는 베를린 주정부와 새로운 문화수도 건설조약을 체결, 이 조약에 따라 연방정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화시설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연방은 2004년 1월부터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베를린 연극제, 베를린 국제 영화제, 세계문화의 집뿐 아니라, 베를린 예술 아카데미, 독일영화 자료관의 재정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었고, 베를린 주정부가 관여하던 함부르크 역사 건설비용도 단독 지원한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문화수도 베를린건설 기금은 베를린의 문화계를 혁신시키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문화수도 베를린은 독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생활의 유희유가 될 것이다.

연방정부는 문화수도 베를린 건설조약을 통해 베를린 주정부의 문화 재정 부담을 덜어주어 왔다. 연방의 이 같은 재정지원을 통해 베를린 주 의회는 2004년 1월 1일부터 ‘베를린 오페라’라는 이름의 재단을 신설하고, 신중한 구조조정을 통해 독립적이고 현대적이며 독특한 예술성을 지닌 건실한 오페라 문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12.1.8 프로이센 문화재 보호재단

베를린 문화지원의 대표적 성공사례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프로이센 문화재 보호재단이다. 전쟁 중 파손된 박물관과 국립도서관을 보수·재건하는 데는 건설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큰 노력과 부담이 요구된다. 이 재단의 주요 임무는 일명 ‘박물관 섬’(베를린 중심지를 가로지르는 슈프레강 내 섬으로 박물관 밀집지역-역주) 내 건물과 역사적인 운터텐린덴 국립 도서관의 본부를 보수, 재건하는 일이다.

1999년 유네스코(UNESCO)는 베를린 박물관 섬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호·감독하고 있다. 프로이센 문화재 보호재단 이사회는 1999년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안에는 박물관 섬 내의 건물들을 보수·재건하고 박물관 섬 지역 전체를 현대화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물관 섬의 보수 및 재건 비용은 2002년부터 연방이 지원하고 있다. 2004년 보수가 끝난 쿠피닉 성은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시대의 전시품과 함께 공간 예술 박물관으로 새롭게 개장되었다.

12.1.9 문화유산 보존사업

독일이 통일되면서 구동독 및 구동독 국경지역 국내외에 산재해 있던 독일 역사유물들을 보존, 후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과제는 그라이프스발트 지역의 포머른 주립 박물관 및 괴를리츠 지역의 슐레지엔 박물관 등이 담당한다. 그라이프스발트 시내에 자리 잡을 포머른 주립 박물관의 건설작업은 연방정부의 문화·언론위원회의

재정지원으로 신속히 진행 중이다. 총 다섯 채의 건물 및 외관시설을 포함한 포머른 박물관은 2005년 6월 3일 개관한다.

연방정부와 문화·언론위원회의 막대한 재정지원으로, 괴를리츠시 역사 중심가에 있는 1526년 건설된 쇠호프 성 역시 박물관으로 이용하기 위한 확장공사에 들어갔다. 완공 후 이 건물은 괴를리츠 솔레지엔 박물관으로 재탄생해 지속적으로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며, 솔레지엔 지역의 주요 문화재를 선보이는 장기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동유럽 지역의 독일 문화와 역사를 연구, 소개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요청이 신연방주로부터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포츠담대학, 막테부르크 대학,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학문의 전당 등의 프로젝트 지원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동유럽 이웃국가와의 연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학교들은 추가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12.2 2006 독일 월드컵

1974년 서독 월드컵에서 서독과 동독의 대표팀이 대결을 벌인 바 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은 통일 이후 개최되는 최대의 스포츠 행사이다. 츠비카우에서 브레멘, 뮌헨에서 로스톡, 프랑크푸르트 마인에서 프랑크푸르트 오더, 쾰른에서 킬까지 독일 전역은 ‘세계의 친구들과 함께’라는 2006 독일 월드컵의 공식 슬로건을 외치며, 세계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개최국인 독일은 2006 월드컵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6 독일 월드컵 준비를 위한 경기장 및 교통부문의 인프라 구축은 신연방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 연방정부가 준비한 월드컵 관련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 프로그램인 축구 지구본(FUSSBALL GLOBUS)은, 2004년 여름 라이프치히에서 전국순회를 시작했다. 연방은 베를린 올림픽 경기장의 현대화와 라이프치히 센트럴 경기장의 개축을 위해 2억 4천7백만 유로라는 사상최대의 예산을 지원했다. 양 경기장은 2004년 여름 성대한 재개장식을 가졌다. 일반적으로 경기장 건축비는 주정부가 담당한다. 그러나 양 경기장의 건축비는 지역형편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연방이 담당했다. 연방의 재정지원 덕분에 베를린과 라이프치히는 2006 독일 월드컵의 개최도시가 될 수 있었다. 라이프치히 센트럴 경기장은 2005년 6월 15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미니월드컵인 FIFA 컨

페더레이션스컵대회의 경기장 중 하나로 사용될 예정이다.

12.3 스포츠 시설 구축

연방정부의 집중지원 부문은 다음과 같다.

신연방주의 전문 스포츠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연방정부는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약 2억 2천8백만 유로를 투입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연방정부 스포츠 지원 총예산 4억 2천7십만 유로의 54%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또한 2004년에는 약 천만 유로가 추가 지원 되었다. 이와 같이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연방정부는 신연방주 내 전문 스포츠 시설의 신축 및 보수를 촉진하고 있다.

특별 프로그램 '동독지역 황금계획'은 연방정부의 주요 스포츠 지원책 중 하나이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자체적으로 약 6천만 유로를 지원, 총 2억 9천만 유로에 달하는 외부 투자액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이처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낙후되어 있었던 신연방주 지역의 기존 스포츠 시설은 개선되어, 이 지역의 스포츠 시설과 프로그램 수준도 구연방주에 견줄 만큼 크게 향상되었다. 대중 스포츠 시설의 현대화 및 유지본래 주정부의 임무이다. 그러나 연방 정부가 2001년, 2002년에 걸쳐 지원금을 확대하고 2005년 프로그램을 연장 운영한 측면을 고려해 보면, 연방정부가 본 사안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4 응용 훈련학 연구소 - 스포츠 기기 연구개발원

라이프치히의 응용 훈련학 연구소(IAT) 및 베를린 소재 스포츠 기기 연구개발원(FES)은 독일 스포츠 연구의 핵심기관이다. 이들 기관들은 전문, 신진 스포츠인의 관심분야와 학문적 욕구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소는 각 종목을 정밀 분석하는 동시에, 각 종목 간의 연계체계와 그 복합성도 추구하며 스포츠 관련 기술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2005년 IAT, FES 두 기관에 책정된 정부지원 예산은 766만 1천 유로로, 연방정부는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에 대한 지원액을 전년보다 11만 유로를 증액했다.

12.5 올림픽 경기 거점

연방은 신연방주 및 베를린 지역(대부분의 올림픽 관련 스포츠 시설은 구동베를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의 일곱 군데 올림픽 기지촌(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포츠담, 코트부스/프랑크푸르트(오더), 켐니츠/드레스덴, 라이프치히, 막데부르크/할레, 튀링엔)을 재정지원하고 있다. 2005년 한 해, 이들 지역은 전문 스포츠인 관리, 코치교환 프로그램을 통한 코치 고용 활성화, 올림픽 기지촌 내 스포츠 시설활용과 같은 명목으로 약 천3백만 유로를 지원 받았다. 또한 연방은 올림픽 기지촌 안의 '체육인의 집' 운영지원과 같은, 후진 양성과 전문 스포츠인 지원이 맞물리는 부문을 지원하고 있다.

12.6 연방 스포츠 육성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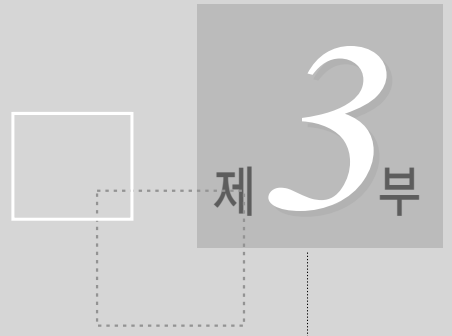
총 네 군데의 연방 스포츠 육성센터 가운데 하나는 신연방주 지역 내 킨바움에 위치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2005년 이 사업에 약 95만 유로를 지원 했다.

12.7 연방경찰대의 전문 스포츠 지원

연방경찰대 (BPOL)은 전문 스포츠인을 지원, 양성함으로써 재능 있는 신진스포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동시에 이들에게 연방 경찰대 내 투입경찰관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은퇴 후에도 새로운 직업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한다. 연방경찰대는 현재 코트부스, 프랑크푸르트(오더) 지역 올림픽 기지촌 소속 선수(종목별)에게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 기지촌에는 현재 육상, 사이클, 유도, 조정부문에 총 56명의 올림픽 유망주들이 훈련 중인데, 이들은 이미 각종 세계대회에서 금메달 3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한 바 있다. 그 밖에도 여러 청소년 스포츠 대회, 세계·유럽·독일 국내 챔피언십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12.8 연방군 스포츠 지원센터

연방군은 독일 전문스포츠인 양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통일 후 서독 연방군의 전문 스포츠인 지원제도는 동독 지역에 그대로 확대 적용되었고, 그 후 독일 내 총 25개 스포츠 지원센터 중 6개 센터(프랑크푸르트(오더), 오버호프, 포츠담, 로슈토크, 할레, 프랑켄베르크)가 신연방주에 위치하게 되었다. 연방군 현대화 조치 중 하나로, 연방군의 전문스포츠 지원제도를 최적화하기 위한 조사가 착수되었다. 연방군은 독일 스포츠 연맹과의 합의와 협력 하에 2010년까지 세 기간에 걸쳐 총 25개의 연방군 스포츠 지원센터 중 10개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15개 중 3개의 연방군 스포츠 지원센터(프랑크푸르트(오더), 오버호프, 프랑켄베르크)는 신연방주에 들어설 예정이다.



신연방주 지역 경제지표

1. 지역별 현황

1.1 신연방주 지역 경제지표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면적 (km ²) ⁰⁾	891	29,477
인구 (천명) ¹⁾	3,387	2,569
각 연방주 면적대비		19,1
인구밀도 (인구/km) ¹⁾	3.801	87
2004년 국내총생산(GDP) ²⁾ (경상가격) (10억유로) ²⁾	77,9	45,0
2003년 대비 (%) 변화율	1,3	1,7
취업인구 1인당 GDP	50.773	44.323
2004년 GDP ²⁾ (1995년 가격기준) (10억 유로)	70,8	41,7
2003년 대비 (%)	0,5	0,9
취업인구 1인당 GDP *생산성²⁾	46.201	41.073
2004년 제조업분야 총부가가치 ³⁾		
2003년 대비 (%)		
경상가격	2,1	6,8
1995년 물가 기준	1,7	4,8
2004년 총부가가치 (물가인상분 포함) ³⁾ (경상가격) (10억 유로)	72,6	42,0
농업, 임업, 어업	0,1	1,0
공업 (건설업 제외)	10,4	8,2
* 제조업	8,2	6,1
건설업	2,3	2,4
교역, 음식숙박업, 교통분야	11,7	8,2
금융, 임대업, 서비스업	26,2	10,5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업	22,0	11,7
2004년 취업률⁴⁾	73,5	77,6
2004년 사업장 별 취업률 (천명)⁵⁾	1.533	1.016
실업인구 ^{6), 7)}	326.151	240.634
실업률 ^{6), 7)}		
당월	19,4	18,0
작년동기 (월기준)	17,7	18,9
단기 비정규직 노동자 ^{6), 7)}	3.567	3.804
여분 일자리수 ^{6), 7)}	21.800	13.570
사회보험가입 정규 노동자^{6), 7)}	1.016.000	700.400
(교육훈련소를 알선 받지 못한) 직업교육 희망자 수(2005. 7기준) ^{6), 7)}	9.243	13.030
직업교육장 여분 수용도^{6), 7)}	3.432	2.661
사업등록 ⁸⁾	477.372	451.110
2004년 1-12월 사이 사업등록건수	47.158	30.163
2004년 1-12월 창업된 신규사업장	41.744	26.029
2005년 1-4월 사이 사업폐기신고	15.466	8.742
사업폐기신고 ⁸⁾	353.424	289.999
2004년 1-12월 사이 사업폐기신고	30.404	18.245
2005년 1-4월 사업폐기신고	11.165	6.822
지원 프로그램 창업, 투자보조 및 자산성 (ERP/EKH) 프로그램 신용대출 ⁹⁾ 총 책정예산 (100만 유로)	1.841	7.593
각 지역별 지원프로그램 ¹⁰⁾ (사업 및 기업경제 분야) 총 책정예산 (100만 유로)	844	5.972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머른	작센-안할트	작센	튀링엔	총계
23.421	20.445	18.408	16.176	107.927
1.726	2.535	4.334	2.382	13.477
12,8	18,8	32,2	17,7	100,0
74	124	235	147	125
29,8	45,8	79,8	42,3	242,7
1,5	1,9	2,4	1,9	2,0
42.140	45.345	41.631	40.951	42.712
27,6	42,3	73,9	38,8	224,4
1,1	1,2 4	2,2	1,5	1,5
39.078	1.867	38.558	37.600	39.486
9,5	8,6	9,8	7,3	8,5
9,4	7,6	11,7	7,8	8,8
27,8	42,7	74,5	39,4	226,5
1,2	1,1	1,0	0,7	5,0
3,7	9,2	17,2	9,8	48,1
3,0	7,5	14,4	8,6	39,7
1,5	2,5	4,7	2,2	13,3
5,6	8,6	12,1	6,4	40,9
7,2	9,8	19,9	9,7	57,1
8,6	11,7	19,6	10,5	62,0
76,0	76,4	76,7	76,2	76,7
707	1.010	1.918	1.032	5.683
175.168	255.534	395.800	206.108	1.599.395
19,8	20,1	18,0	16,8	18,6
20,1		17,9	16,8	18,5
1.351	20,7 3.621	8.908	5.317	26.568
13.946	14.343	22.833	14.520	101.192
497.900	716.200	1.328.000	705.600	4.964.000
9.466	11.271	22.510	12.974	78.494
2.256	1.787	3.429	3.128	16.693
290.433	418.047	790.079	433.463	2.860.504
20.407	25.071	49.171	25.276	197.246
18.420	22.833	43.564	22.011	174.601
6.035	7.469	16.092	7.643	61.447
192.734	287.502	518.887	298.200	1.940.746
14.169	17.688	32.630	18.346	131.482
4.790	6.530	13.006	6.479	48.792
7.087	7.639	12.931	8.928	46.019
3.170	7.212	8.852	5.336	3.387

⁰⁾ 총계에는 베를린지역 제외.
¹⁾ 연방통계청 (2004년 6월 30일). 베를린은 전역 기준. 총계는 베를린지역 제외. 인구밀도는 각 연방주 통계 따름.
²⁾ 바덴-뷔템베르크 주 통계청. 거시경제지표 연구분과. 2005년 2월 기준. 베를린은 전역 기준. 총계는 베를린을 제외한 전 신연방주 지역.
³⁾ 연방통계청. 2004년 3월 실시한 인구 센서스 조사 결과. 15-65세 사이 거주인구 당 취업인구 조사. 구 동베를린 지역 취업률: 77.5%.
⁴⁾ 연방 통계청 및 각 연방주 통계청 취업인구 조사분과. 2005년 2월 기준. 베를린 전역 기준. 총계는 베를린을 제외한 전 신연방주 지역.
⁵⁾ 연방 노동중개소. 2005년 7월 기준 (사회보험가입 정규직 노동자수: 2005년 5월 추정치) / 베를린 전역 노동시장 통계. 총계는 상기 언급된 6개 연방주를 모두 포함한 수. 실업자 수는 모든 노동가능 인구를 대상으로 함.
⁷⁾ 연방 노동경제부. 2005년 6월 기준. 1900년 이후 창업, 투자 지원 및 자산성 대출 프로그램(EER/ EKH) 지원 승인예산 (지원포기, 감축, 취소분을 제외할 순지원액).
⁸⁾ 연방통계청. 1991년 이후 통계. 1995년까지는 구 동베를린 지역, 1996년 이후에는 베를린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
⁹⁾ 연방 경제 및 수출감독청(BAFA), 1991년 1월-2005년 6월 기간.
¹⁰⁾ 유럽 지역발전기금(EFRE) 지원분 포함.

1.2 구연방주 및 신연방주 지역 사회경제지표

연방주	인구	취업인구 2004년			실업인구 2004년 ⁴⁾	
	2004년 6월 30일 현재(천명)	실제취업 인구 ²⁾	취업률 ²⁾	독일국내 취업 인구 ³⁾ (1,000명)	연평균 (천명)	민간인취업 총인구에 대한 실업 인구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1.726	916	75,9	707	183	20,5
브란덴부르크	2.569	1.382	77,6	1.016	251	18,7
작센-안할트	2.511	1.325	76,4	1.01	263	20,3
튀링엔	2.365	1.244	76,2	1.032	208	16,7
작센	4.307	2.228	76,8	1.918	397	17,8
신연방주¹⁾	13.477	7.828	76,7	5.683	1.6	18,4
슐레스비히-홀슈타인	2.825	1.348	73,5	1.21	138	9,8
함부르크	1.737	874	73,7	1.037	84	9,7
니더작센	8.002	3.683	71,1	3.479	377	9,6
브레멘	662	306	70,9	391	42	13,3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18.069	8.245	69,9	8.285	898	10,2
헤센	6.088	2.953	73,0	2.994	251	8,2
라인란트-팔츠	4.058	1.874	71,2	1.753	155	7,7
바덴-뷔템베르크	10.707	5.285	75,0	5.352	340	6,2
바이에른	12.427	6.238	75,5	6.225	450	6,9
자알란트	1.059	470	68,5	500	46	9,2
구연방주 (합계)	65.635	32.322	72,5	31.226	2.781	8,5
베를린	3.387	1.778	73,5	1.534	298	17,6
독일 (합계)	82.498	40.15	73,3	38.442	4.381	10,5

국내총생산(GDP) (2004년) ⁵⁾			각종산업분야수익 (2004년) ⁶⁾		수출비중 ⁷⁾ (2004년) (%)	총지출 중 조세명목 지출 ⁸⁾ (2004년 잠정치) (%)	인건비 지출 ⁸⁾ (1사분기) (%)	투자명목 지출 ⁸⁾ (잠정치) (%)	이자지출 ⁸⁾ (잠정치) (%)
명목GDP (10억유로)	명목1인당 GDP (유로)	1995년 물가기준 GDP (1995=100)	10억 유로	2004/2003 변화율 (%)					
29,8	17.256	105,9	8,9	5,2	19,7	43,1	26,6	19,2	6,8
45,0	17.527	113,9	17,9	5,9	20,7	47,9	23,4	19,4	8,9
45,8	18.245	113,8	26,0	10,3	21,4	43,3	28,0	18,6	8,4
42,3	17.874	114,2	23,3	7,9	27,4	43,4	26,7	19,7	7,3
79,8	18.539	110,4	40,7	9,1	30,2	46,3	26,4	26,7	3,6
242,7	18.01	111,7	120,5	8,0	25,5	45,1	26,3	21,5	6,6
66,5	23.539	109,2	30,3	9,5	38,6	61,1	41,1	8,4	11,2
78,8	45.363	115,8	64,3	-7,1	18,4	68,4	32,1	10,5	9,5
184,9	23.111	108,1	146,6	6,0	40,9	64,0	39,9	7,5	10,9
23,6	35.592	109,5	20,9	1,8	53,5	43,8	30,6	18,6	11,9
481,4	26.643	109,1	308,3	7,5	37,7	70,5	41,3	9,5	9,6
195,2	32.056	114,7	86,6	3,2	42,0	72,3	38,2	8,7	7,5
95,4	23.507	109,7	66,1	5,3	45,8	61,6	41,0	11,0	9,3
319,4	29.835	115,0	251,4	4,0	45,0	71,4	41,8	8,3	6,0
385,2	30.993	120,0	280,8	7,6	44,9	75,7	42,4	11,7	3,0
26,1	24.606	107,2	20,6	14,0	42,4	54,2	39,1	10,5	11,4
1.856,4	28.284	113,0	1.302,9	5,4	40,9	69,6	40,6	9,8	8,0
77,9	22.988	91,5	30,6	1,7	29,2	39,0	33,0	8,3	11,3
2.177,0	26.388	111,9	1.423,4	5,6	39,6

1) 신연방주: 베를린 제외, 구연방주: 베를린 제외 (단, 실업률 통계의 신연방주 합계는 베를린 지역 포함).
2) 1995년 유럽 거시경제지표(ESVG) 산출기준. 베를린=베를린 지역. 신연방주=베를린 제외. 구연방주=베를린제외. 2005년 2월 현재.
3) 제조업 및 광업분야의 종업원 2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통계.
4) 총수익에서 해외수출이 차지하는 비율. 신연방주: 구동베를린 포함. 구연방주: 구서베를린 포함.
5) 각 연방정부예산 총 지출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 신연방주: 베를린 제외. 구연방주: 베를린 제외. 2005년 8월 현재.
6) 각 연방정부예산 총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신연방주: 베를린 제외. 구연방주: 베를린 제외. 2005년 8월 현재.
7) 각 연방정부예산 총 지출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 신연방주: 베를린 제외. 구연방주: 베를린 제외. 2005년 8월 현재.
8) 각 연방정부예산 총 지출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 신연방주: 베를린 제외. 구연방주: 베를린 제외. 2005년 8월 현재.
출처: 연방통계청, 연방노동증개소 '각 연방주 거시경제지표 연구분과' 및 '취업인구 조사분과', 연방재무부, 연방정부 자체산출통계.

2. 신연방주 지역 거시경제 지표

2.1 경제 전반에 관한 주요통계지표 / 신연방주 vs. 구연방주¹⁾

		구연방주 ²⁾	
		1991	2003
1995년 가격기준 국내총생산(GDP) ¹⁾	10억유로	1.495,4	1.720,9
경상가격기준 국내총생산(GDP) ¹⁾	10억유로	1.336,3	1.856,4
거주인구 ³⁾	천명	61.914	65.635
취업인구(국내) ¹⁾	천명	30.006	31.226
피고용자(국내) ¹⁾	천명	26.898	27.715
실업인구 ¹⁾	천명	1.689	2.781
경상가격기준 인구 1인당 GDP	유로	21.583	28.284
경상가격기준 취업인구 1인당 GDP	유로	44.533	59.451
1995년 물가기준 인구 1인당 GDP	유로	24.153	26.219
1995년 물가기준 취업인구 1인당 GDP (노동생산성)	유로	49.836	55.110
총인건비 ¹⁾ 근로자 1인당 인건비 ¹⁾	10억유로 유로	723,6 26.900	953,1 34.390
총임금 및 급여 ¹⁾	10억유로	590,7	766,3
근로자 1인당 총임금 및 급여 ¹⁾	유로	21.962	27.649
인구 1인당 시설, 설비투자 ^{3), 5)}	유로	4.900	4.900
인구 1인당 자본금 ^{2), 6)}	유로	114.000	134.000
임금단위비용 (절대치) ^{1), 7)}	유로	54,15	51,34

신연방주 ²⁾		신연방주 vs. 구연방주(% ²⁾)		독일전체에서 신연방주가 차지하는 비율 ²⁾	
1991	2004	1991	2004	1991	2004
215,4	295,2	.	.	12,6	14,6
165,9	320,6	.	.	11,0	14,7
18.071	16.864			22,6	20,4
8.448	7.216			22,0	18,8
7.976	6.420			22,9	18,8
913	1.600			35,1	36,5
9.183	19.010	42,5	67,2		
19.644	44.425	44,1	74,7		
11.920	17.507	49,4	66,8		
25.498	40.913	51,2	74,2	.	.
120,4	180,0	.	.	14,3	15,9
15.100	28.029	56,1	81,5		
100,6	144,6			14,6	15,9
12.616	22.517	57,4	81,4		
3.200	4.300	65	89	.	.
51.000	101.000	45	75		.
		구연방주에 대한 신연방주 우위분		.	.
72,58	56,14	34,0	9,3		

¹⁾ 1995년 유럽 거시경제지표(ESVG) 산출기준. 2005년 2월 현황.

²⁾ 신연방주: 베를린 포함. 구연방주: 베를린 제외.

³⁾ 1991년: 연평균 수치. 2004년: 연 중순 평균수치.

⁴⁾ 1991년: 연평균 수치. 신연방주: 구동베를린 포함. 구연방주: 구 서베를린 포함 / 2004년: 신연방주: 베를린 전역 포함. 구연방주: 베를린 제외.

⁵⁾ 이포(ifo) 경제연구소 추정치(2005년 7월 현재) - 건물투자부문 통계: 연방통계청 및 연방정부 공동 조사자료. 시설/설비투자=신규건축물이나 시설, 기타 설비물에 대한 투자 (당시 물가기준). 신연방주: 구 동베를린 포함. 구연방주: 구서베를린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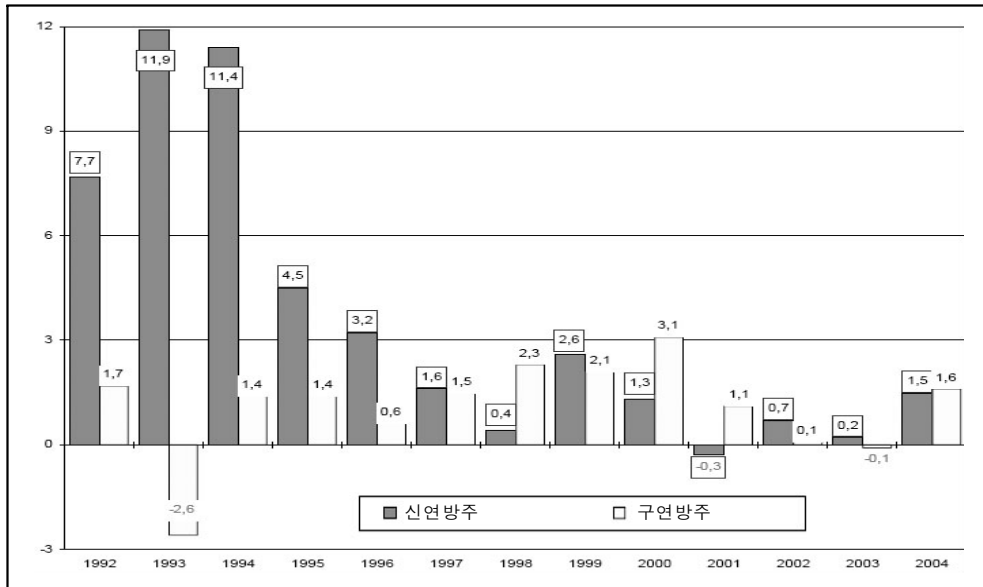
⁶⁾ 1991, 2002;

⁷⁾ 명목 GDP 100유로 당 피고용인 급여로 지출되는 금액.

출처: '각 연방주 거시경제지표 연구분과' 및 '연방 및 각 연방주 취업인구 조사분과', 이포(ifo) 경제연구소(투자관련통계), 연방통계청, 연방정부 자체산출통계(비교, 대조통계).

2.2 국내 총생산(GDP) / 신연방주 vs. 구연방주

2.2.1 전년대비 GDP 실질 성장률(%)¹⁾



¹⁾ 1995년 유럽 거시경제지표(ESVG) 산출기준. 1995년 물가기준. 신연방주 vs. 구연방주: 각각 베를린 지역 제외. 2004년 8월/2005년 2월 현황.

출처: 연방주 통계청 '거시경제지표 연구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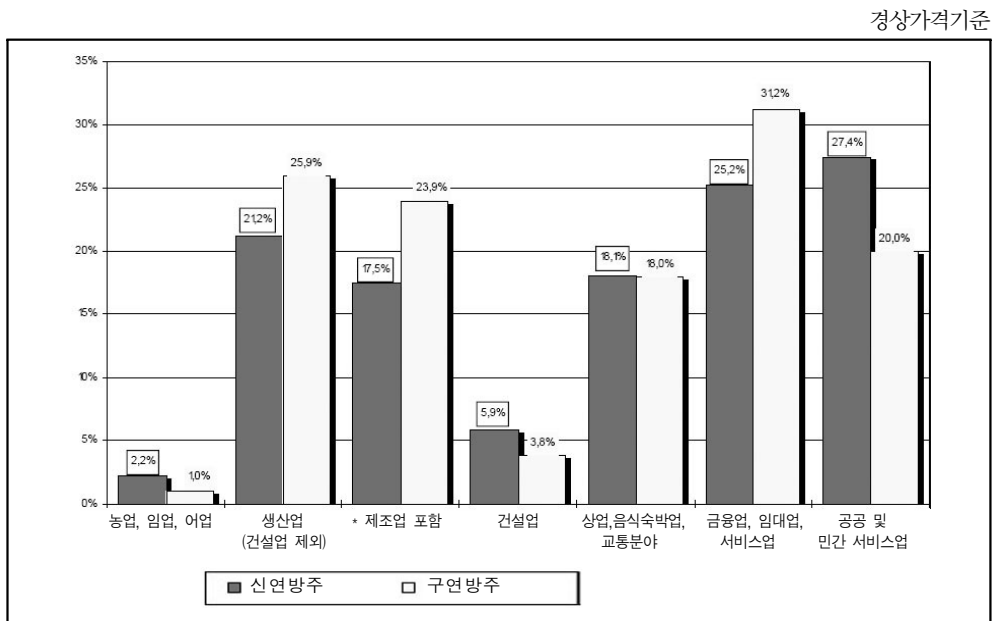
2.2.2 취업인구 1인당 GDP 성장률(생산성). 전년대비(%)¹⁾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신연방주	0.7	-1.4	2.0	1.5	0.7	1.4	0.9	0.7	0.8	0.3	0.6	0.9	1.2
구연방주	23.0	14.8	8.8	2.5	3.9	2.9	0.2	2.0	2.3	1.3	1.8	1.8	1.6

¹⁾ 위 도표와 동일

출처: 연방주 통계청 '거시경제지표 연구분과', '연방 및 각 연방주 취업인구 조사분과'

2.3 2004년 경제분야별 총부가가치 생산비중(분야별 총부가가치/경제전반 총부가가치)¹⁾



¹⁾ 1995년 유럽 거시경제지표(ESVG) 산출기준. 신연방주 vs 구연방주: 각각 베를린지역 제외. 2005년 2월 현황.
출처: 연방주 통계청 '거시경제지표 연구분과'

2.4 신연방주 경제분야별 총부가가치 성장률 / 전년동기대비(%)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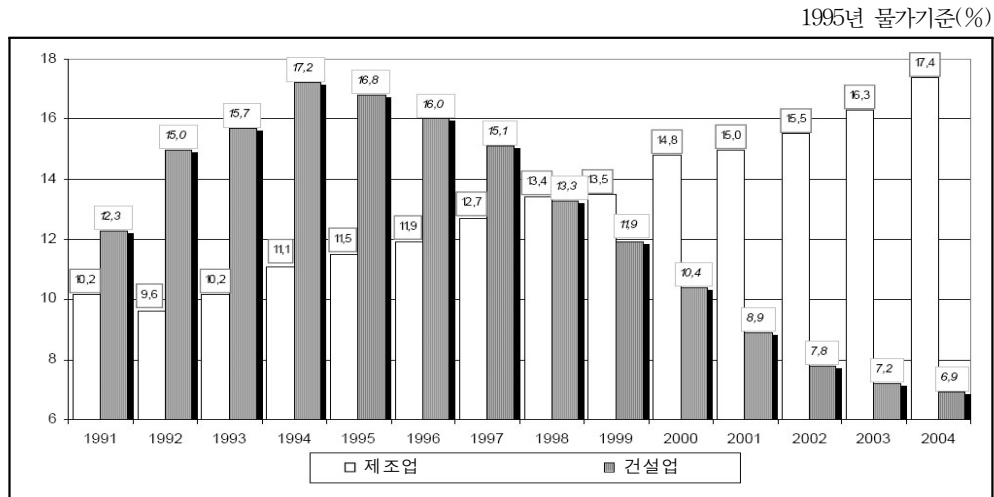
1995년 물가기준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경제전반 총부가가치 총계	7,8	12,1	11,3	4,9	3,6	2,1	0,8	2,8	1,9	0,1	0,9	0,4	1,8
농업, 임업, 어업	-19,9	35,7	-12,4	13,1	3,4	6,5	9,2	6,7	-5,3	4,2	-4,0	-3,6	9,2
생산업 (건설업 제외)	-5,8	14,7	12,3	6,3	9,2	4,0	3,8	3,6	9,0	0,3	4,4	5,4	7,4
* 제조업 포함	1,2	19,5	20,8	8,5	7,6	9,4	6,0	3,4	12,3	1,1	4,3	5,9	8,8
건설업	31,5	17,1	22,2	2,7	-1,5	-3,8	-11,0	-8,1	-11,3	-14,2	-11,5	-6,5	-3,7
상업, 음식숙박업, 교통분야	16,6	13,1	10,8	2,4	2,0	0,8	3,5	10,2	4,3	5,7	5,8	1,6	1,5
금융업, 임대업, 서비스업	9,6	16,9	13,6	10,8	8,0	6,7	6,3	3,7	3,5	3,1	0,6	0,2	1,4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업	3,5	3,9	6,0	2,4	1,4	1,5	-1,1	2,1	1,0	-1,2	-0,2	-1,4	-1,1

¹⁾ 1995년 유럽 거시경제지표(ESVG) 산출기준. 2005년 2월/2004년 8월 현황. 신연방주: 베를린 제외.

출처: 연방주 통계청 '거시경제지표 연구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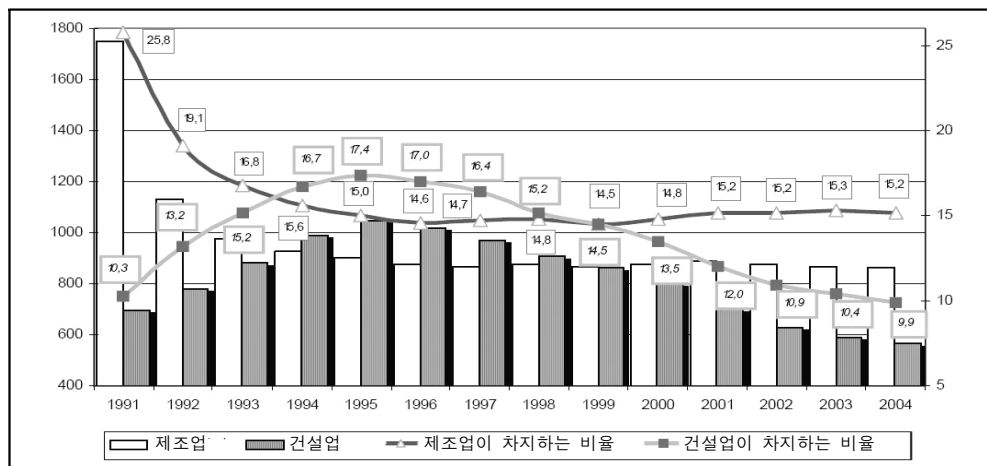
2.5 신연방주 지역의 제조업 및 건설업 총부가가치가 신연방주 경제전반 총부가가치 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율¹⁾



¹⁾ 1995년 유럽 거시경제지표(E S V G)산출기준. 베를린을 제외한 신연방주 지역. 2005년 2월/2004년 8월 현황.

출처: 연방주 통계청 '거시경제지표 연구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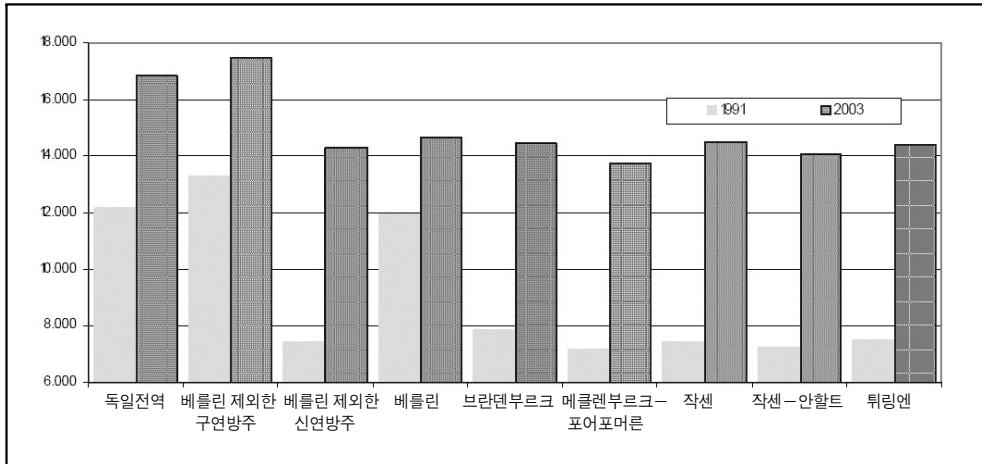
2.6 신연방주 지역의 제조업 및 건설업 취업인구¹⁾



¹⁾ 1995년 유럽 거시경제지표(E S V G)산출기준. 베를린을 제외한 신연방주 지역. 2005년 2월/2004년 8월 현황. 도표 좌측수치: 취업인구(천명)/도표 우측수치: 각 분야 취업인구가 전체 취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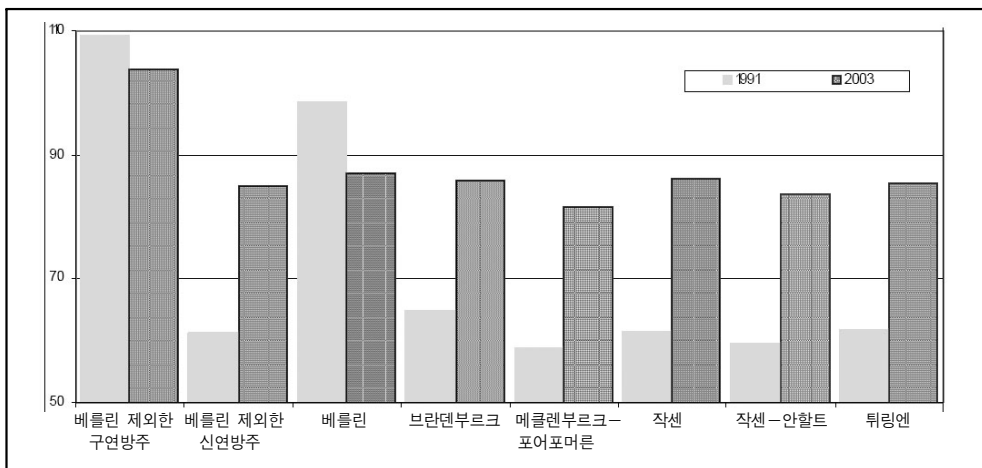
출처: 연방주 통계청 '거시경제지표 연구분과', '연방 및 각 연방주 취업인구 조사분과'

2.7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수입¹⁾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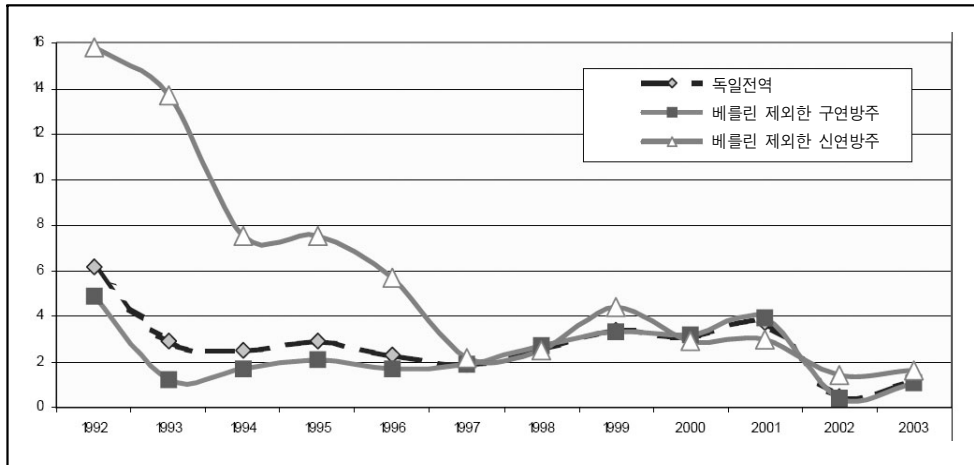


¹⁾ 비영리 시설 민간단체까지 포함한 각 가구당 가용수입.

1991년과 2003년 비교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독일전체=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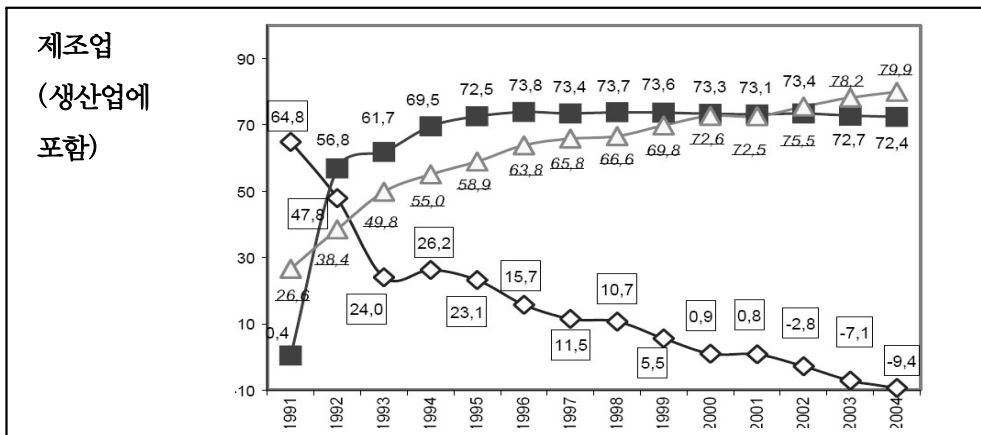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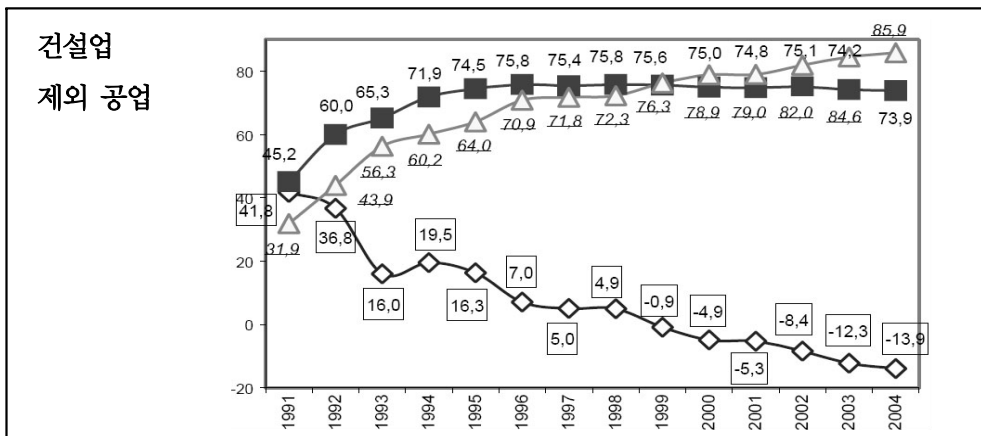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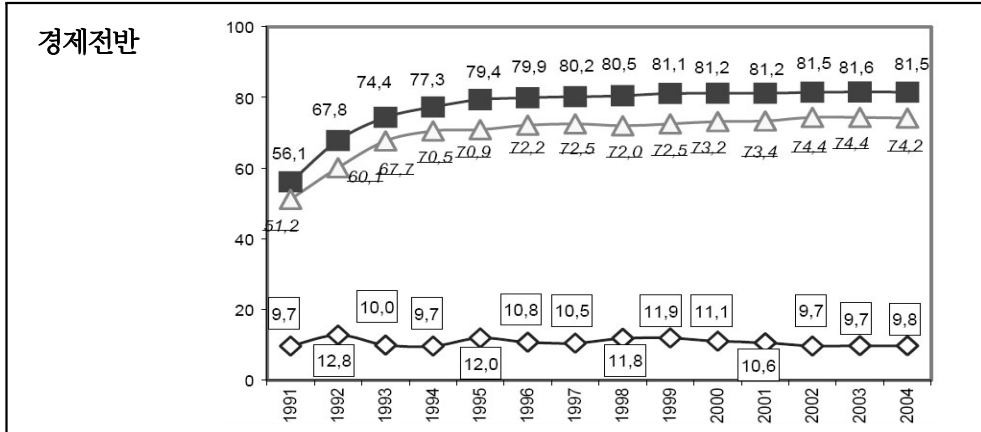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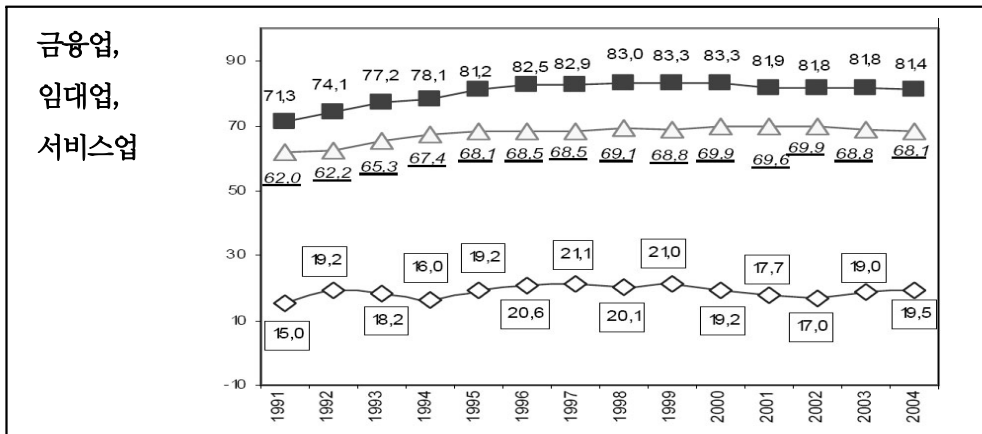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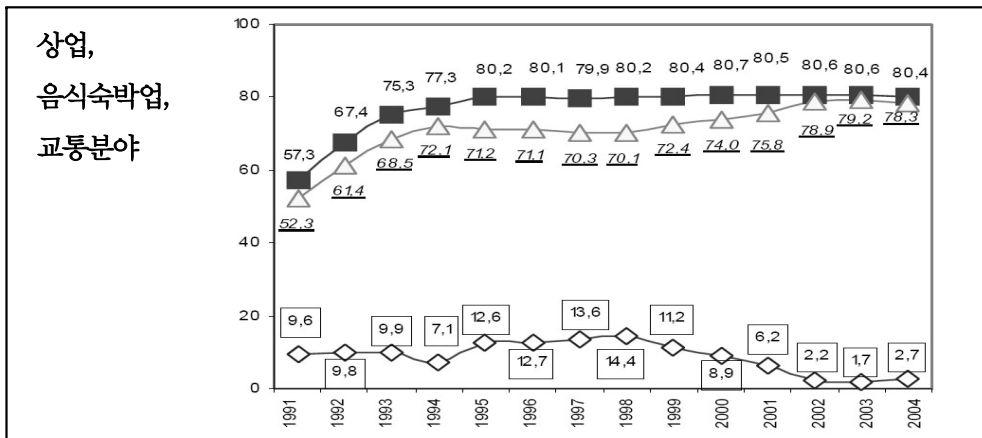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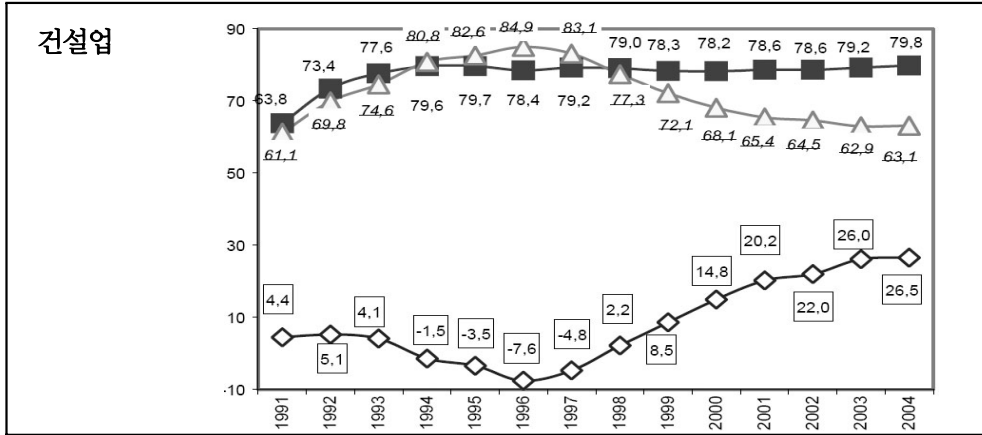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전년대비 변화율 %)



출처: 연방주 통계청 '거시경제지표 연구분과'. 2004년 8월 현황.

2.8 임금비용, 생산성 및 임금단위비용 / 신연방주 vs. 구연방주¹⁾





◆ 구연방주대비 임금단위비용 신연방주 우위부(%)
 ■ 구연방주 취업인구 1인당 총수입(%)
▲ 구연방주 취업인구 1인당 생산성(%)

¹⁾ 1995년 유럽 거시경제지표(ESVG)산출기준. 구연방주는 베를린 포함, 신연방주는 베를린 제외.

출처: 연방 노동경제부, 거시경제지표 연구분과.

3. 경기지수

3.1 신연방주 지역 내 생산변화 추이

생산지표(2000=100-최종수치)

	1995	1996	1997	1998
	지표	지표	지표	지표
공업분야 전체	87,8	89,3	91,4	93,6
- 주요건설부문 제외	75,6	78,6	83,0	88,3
- 에너지 및 주요건설부문 제외	71,6	75,6	82,2	87,4
광업 및 토지, 광물채취 및 가공처리	73,2	76,3	81,4	87,2
반제품생산자	66,7	70,5	78,9	85,2
투자재생산자	78,5	77,9	81,8	88,2
내구소비재생산자	63,9	69,1	76,0	84,2
소모용품생산자	72,9	81,4	87,9	90,3
소비용품생산자	71,8	79,9	86,4	89,5
에너지	93,6	92,6	86,8	92,2
Energy (E부분 대치)	89,9	84,2	73,5	85,5
광산업	136,9	127,2	116,4	102,2
석탄, 이탄, 석유, 천연가스 등	130,2	120,3	108,1	93,9
기타 광물, 토양 채굴업	150,4	141,1	133,1	119,0
제조업	71,2	74,7	80,3	86,7
식품 및 담배가공업	71,4	81,4	88,4	90,1
섬유 및 의류업	80,7	83,5	88,5	94,3
가죽, 모피제조업	103,9	96,1	98,2	108,0
목재업(가구생산자 제외)	51,8	58,5	63,3	78,7
제지업, 출판 인쇄업	82,1	85,3	95,6	102,5
코크스 및 정유	77,4	73,0	62,8	82,9
화학제품 생산업	58,1	66,1	71,4	73,7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업	62,0	67,4	75,6	81,0
유리, 도자기 생산업 및 광물, 토양 가공업	92,0	95,4	98,8	96,8
금속 생산 및 가공업	68,4	71,7	78,2	86,5
기계/설비 생산업	77,7	79,5	86,5	90,7
사무실 기기/전자기기 생산업	47,9	53,2	65,7	72,3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생산업	84,5	76,6	76,0	86,4
가구, 장신구, 악기, 재활용 제품 생산업	73,5	76,5	83,0	91,6
에너지 및 급수시설	96,6	99,3	97,4	97,6
주요건설사업	132,3	127,8	121,9	112,8
지상건설사업	140,1	138,5	132,3	120,7
지하건설사업	120,1	111,2	105,6	100,3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지표	지표	지표	지표	지표	지표	전년대비(%)
97,5	100	100,5	100,5	104,3	110,0	5,4
93,4	100	103,8	105,8	111,7	120,1	7,5
92,7	100	104,8	107,5	113,6	123,5	8,7
92,8	100	104,4	106,6	112,8	121,8	8,0
90,6	100	103,7	109,5	120,2	135,4	12,6
93,3	100	107,2	108,3	111,1	118,7	6,8
91,8	100	106,4	100,3	97,3	106,4	9,3
95,0	100	103,8	104,9	109,1	114,2	4,7
94,6	100	104,1	104,3	107,7	113,2	5,2
96,7	100	99,1	98,3	102,8	104,3	1,5
94,3	100	99,8	97,7	104,0	103,8	-0,2
101,1	100	100,8	104,4	107,8	104,1	-3,5
92,5	100	106,6	107,9	107,5	105,9	-1,4
118,5	100	88,8	97,3	108,4	100,3	-7,5
92,5	100	104,5	106,7	112,9	122,4	8,3
96,2	100	103,3	101,9	103,3	109,4	5,8
94,7	100	99,4	90,7	89,5	84,2	-5,9
91,7	100	101,0	101,6	100,7	102,7	2,0
89,8	100	101,4	115,9	126,5	143,5	13,5
102,2	100	103,7	113,7	128,3	135,4	5,5
94,9	100	97,7	94,6	102,9	103,2	0,3
79,8	100	100,2	113,1	117,6	139,0	18,2
90,1	100	102,6	104,2	117,2	126,9	8,3
101,9	100	94,2	92,3	93,4	94,8	1,6
91,8	100	105,5	105,5	110,0	116,8	6,2
93,2	100	106,0	103,8	104,9	113,7	8,4
81,2	100	114,0	124,5	141,8	167,9	18,4
91,6	100	108,8	113,6	119,7	130,4	9,0
94,2	100	103,0	103,2	103,0	110,5	7,3
98,7	100	98,5	98,7	101,8	104,7	2,8
112,2	100	88,5	81,2	77,9	73,4	-5,7
116,1	100	83,5	74,4	70,3	64,5	-8,2
106,2	100	96,2	91,8	89,8	89,3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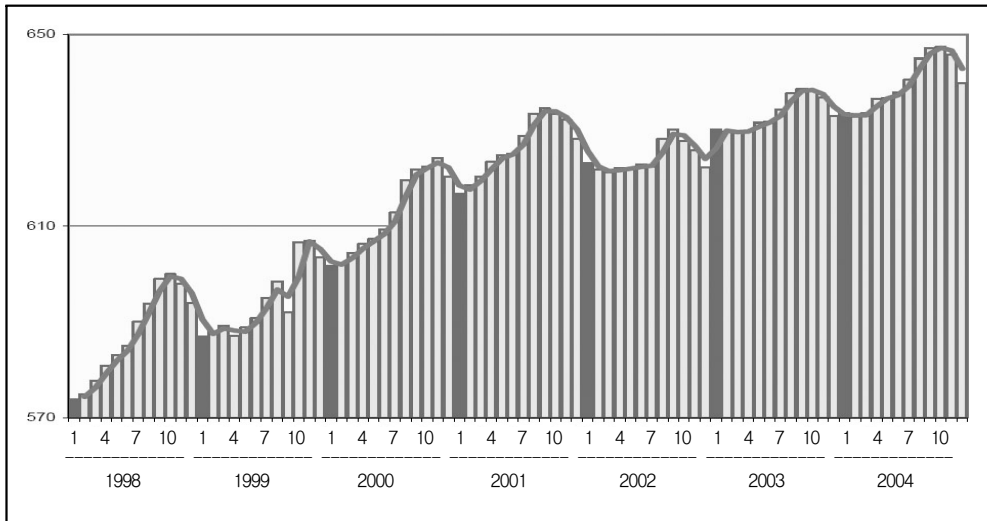
주: 2003년 기준에 따른 업종구분. 통계자료는 2000년 기준(종업원 20인 이상인 기업체).
출처: 연방통계청

3.2 제조업 및 광물, 토양 채굴 분야 종사자 변화추이

년도	독일전역	구연방주	구동베를린 및 신연방주	독일전역	구연방주	구동베를린 및 신연방주
	해당분야 종사자 (천명)			전년대비 변화율(%)		
1997	6,416	5,834	581	-1.6	-1.7	-1.1
1998	6,405	5,817	588	-0.2	-0.3	1.1
1999	6,368	5,773	596	-0.6	-0.8	1.3
2000	6,376	5,764	613	0.1	-0.2	2.9
2001	6,390	5,764	627	0.2	0.0	2.3
2002	6,209	5,584	624	-2.9	-3.2	-0.4
2003	6,133	5,500	633	-2.6	-2.9	0.2
2004	6,015	5,376	640	-1.9	-2.3	1.1

출처: 연방통계청 (광업 및 제조업에 관한 월말보고서)
2003년부터 조사범위 확대, 따라서 전년통계와의 일대일 비교 불가능.

신연방주 및 구동베를린 지역 제조업 종사자(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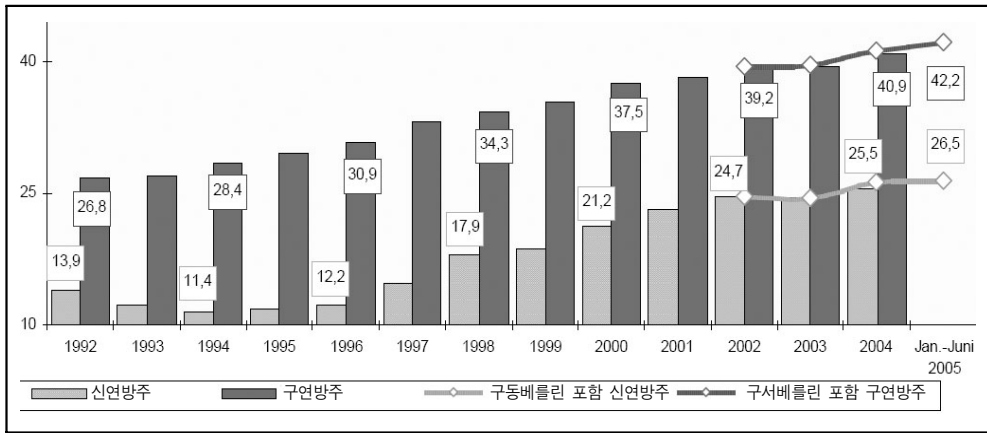
3.3 신연방주의 주택건설 관련 건설허가건수 및 완공건수¹⁾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건설허가건수	5,484	26,525	82,529	126,088	180,011	186,155	155,368	113,973	91,874	66,104	50,036	42,103	44,568	38,697
* 신축건물	5,144	24,640	77,138	116,561	164,010	165,074	133,606	91,693	73,267	54,886	42,719	36,368	39,434	33,753
완공건수	16,670	11,477	23,598	67,704	104,214	143,366	177,829	128,447	102,865	86,284	58,254	49,007	41,836	39,724
* 신축건물	16,430	11,302	21,879	62,495	95,872	130,421	160,783	110,748	82,963	70,533	48,558	41,339	36,222	35,269

¹⁾ 거주 및 비거주 건물: 기존건물의 보수공사도 포함. 2004년 임시통계.

출처: 연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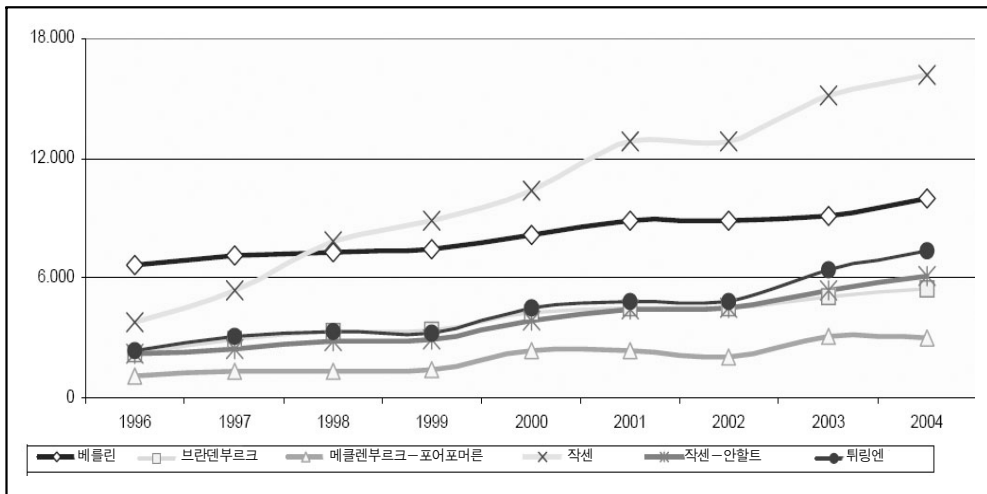
3.4 광업 및 제조업 수출비중¹⁾(%)



¹⁾ 종업원 20인 이상 기업의 총이윤에서 해외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신연방주: 구동베를린 포함한 구동독 전역. 구연방주: 구서독 전역. 1995년 경제부문 분류기준을 변경하여, 1995년 전후 통계자료 일대일 비교 불가능.

출처: 연방통계청, 자체산출

3.5 각 연방주별 수출액 변화(100만 유로)



출처: 연방통계청

4. 노동시장 통계

4.1 신연방주 지역 노동시장 주요지표¹⁾ / 2005년 7월 기준

조사대상군	2005년	
	7월	6월
사회보험의무가입 정규노동자		
- 당월 말 현황		
구직자 (총계)	2,260,283	2,247,922
실업자 (구직자 중)		
- 당월 추가분	219,902	155,571
당해년 초부터 누적치	1,405,268	1,185,366
- 당월 감소분	207,596	205,080
당해년 초부터 누적치	1,409,768	1,202,172
근로층 (상이누적통계 중)	696,135	590,626
직업훈련생 (상이누적통계 중)	163,455	137,485
- 당월 말 현황	1,599,395	1,587,097
노동층의 45.1%	720,999	734,094
47.7% 여성	763,302	747,078
24.6% 비직업교육자	393,077	385,690
13.6% 25세 이하 청년	217,251	188,160
(2.8% 20세 이하 청소년)	44,901	28,605
26.2% 50세 이상	419,266	422,940
(11.4% 55세 이상)	182,512	182,371
43.6% 장기실업자	697,347	696,998
실업률		
- 민간인 취업 총인구 대비	18,6	18,5
- 민간인 비정규직 총인구 대비	20,5	20,3
남성	21,0	21,1
여성	20,0	19,5
25세 이하 청년	20,6	17,9
(20세 이하 청소년도 포함)	13,1	8,4
실업수당 수혜자		
실업수당 ²⁾	496,410	487,522
실업수당 II ³⁾	1,708,445	1,694,500
사회보장비 ³⁾	489,864	486,520
등록 일자리수^{4), 5)}		
- 당월 추가분	71,320	68,586
당해 초부터의 누적통계	408,772	337,452
- 당월 말 현황	101,192	95,529
정부 비지원 일자리 수 ⁶⁾	41,211	41,393
즉시 취업 가능 일자리 수	74,990	69,159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참여자		
- 당월 말 현황 (총계)	539,046	578,482
자격증 취득	54,008	62,241
직업훈련 직원 및 상담	143,469	160,115
직장생활병행	141,340	151,431
노동창업정책	151,309	155,741
단기직 지원	-	26,568
	전월(前月) 대비 변화추이	
시준정산 이후 통계	2005.07	2005.06
- 실업인구	-23,000	-21,000
- 등록 일자리수 (정부지원 일자리 포함)	6,000	1,000
- 정부 비지원 일자리수 ⁶⁾	1,000	-3,000
- 민간인 취업총인구 대비 실업인구	18,7	18,9

¹⁾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머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 주.

2005년		전년동기대비 변화추이(실업률-전년동계)			
5월	4월	7월 ¹⁾		6월	5월
		절대치	%	%	%
4,964,000	4,931,400	-142,333	-2.8	-	-2.8
2,230,693	2,247,882	166,133	7.9	8.4	8.6
154,054	191,334	-22,042	-9.1	-21.4	-17.2
1,029,795	875,741	-145,692	-9.4	-9.4	-7.3
222,678	265,748	1,390	0.7	-5.5	-7.7
997,092	774,414	-105,662	-7.0	-8.2	-8.7
484,692	363,676	36,570	5.5	4.3	2.8
112,745	87,939	-72,991	-30.9	-33.3	-34.1
1,636,609	1,705,231	-863	-0.1	1.4	3.4
772,312	823,495	-34,695	-4.6	-2.8	-1.3
762,185	784,796	-12,292	-1.6	-0.4	1.7
389,918	398,174	40,892	11.6	12.1	13.0
193,784	208,196	15,563	7.7	10.2	16.7
27,833	30,499	8,793	24.4	28.2	49.7
432,366	442,459	17,618	4.4	5.6	6.9
184,738	186,568	25,512	16.2	17.0	17.2
707,573	717,893	-10,005	-1.4	-0.5	0.7
18.9	19.7	18.5	-	18.1	18.3
20.7	21.5	20.2	-	19.8	20.0
21.6	22.7	20.4	-	20.1	20.6
19.7	20.3	20.1	-	19.4	19.4
17.7	19.0	18.4	-	15.6	15.2
7.6	8.3	9.9	-	6.1	5.1
513,054	559,213	-23,070	-4.3	-	-4.3
1,679,812	1,676,480	-	-	-	-
483,541	485,807	-	-	-	-
66,964	65,420	26,116	57.8	40.8	35.0
268,866	201,902	113,961	38.7	35.2	33.8
98,049	88,637	51,531	103.8	81.6	80.4
45,065	41,486	5,890	16.7	8.7	18.4
70,369	60,573	40,590	118.0	89.4	93.5
571,272	563,499	-87,211	-13.9	-11.3	-12.8
65,815	70,867	-40,158	-42.6	-43.2	-43.3
164,651	164,760	-46,720	-24.6	-22.6	-23.3
155,745	157,153	-15,883	-10.1	-5.2	-2.5
142,741	129,665	21,419	16.5	30.5	27.5
28,902	31,246	-2,900	-9.8	-9.8	-10.1
전월(前月) 대비 변화추이					
2005.05	2005.04	2005.03	2005.02	2005.01	2004.12
-14,000	-23,000	11,000	9,000	41,000	4,000
5,000	8,000	11,000	9,000	7,000	-
4,000	2,000	1,000	-	1,000	-
19.1	19.2	19.5	19.3	19.2	18.8

¹⁾ 당월 최신통계와 전년 동월수치 비교 지난 두 달간 실업자 수당에 따른 추정치.
²⁾ 조사 당월 및 전월(前月) 추정치. ³⁾ 조사 당월 및 전월(前月) 추정치.
⁴⁾ 추정치 (실업수당 마지막 2개월간 추정치).
⁵⁾ 설문조사에 따르면 2004년 4/4분기 총 일자리 가운데 노동청에 등록된 일자리 수는 30.1%였다. / 2004년에는 등록일자리 중 평균 68%는 구직자에게 연결되지 않았다. 일자리 알선을 시작하자마자 35%는 구직자에게 즉시 연결되었다. 모집을 시작한지 30일만에 57%는 구직자에게 연결되었다.
⁶⁾ 임시고용전담기관(Personal Service Agenturen), 노동창출정책(Arbeitsbeschaffungsmaßnahmen), 노동창출인프라정책(Beschäftigung schaffenden Infrastrukturförderung)이 알선한 일자리 및 의무저임금노동 제외.

출처: 연방노동증개소

4.2 신연방주 노동시장정책 프로젝트 참여자¹⁾

당해 연도별 평균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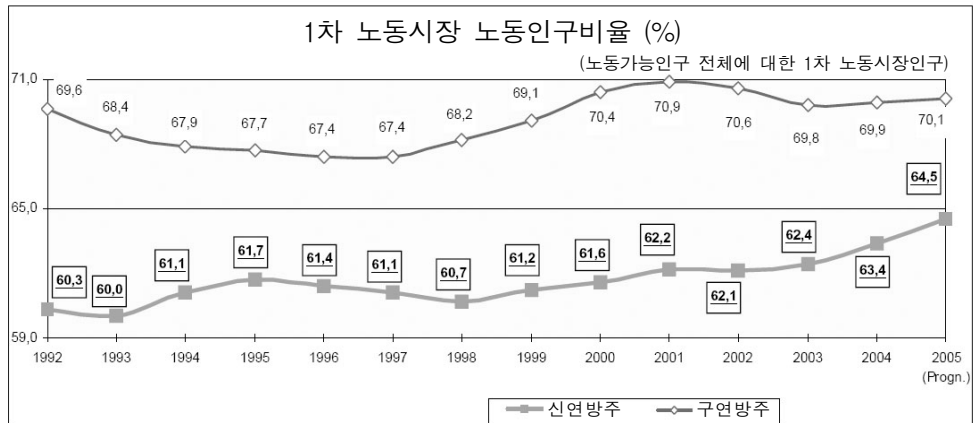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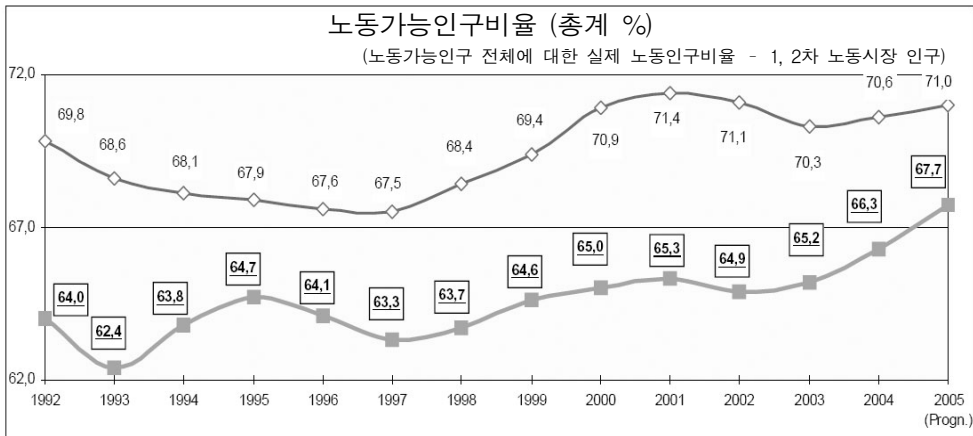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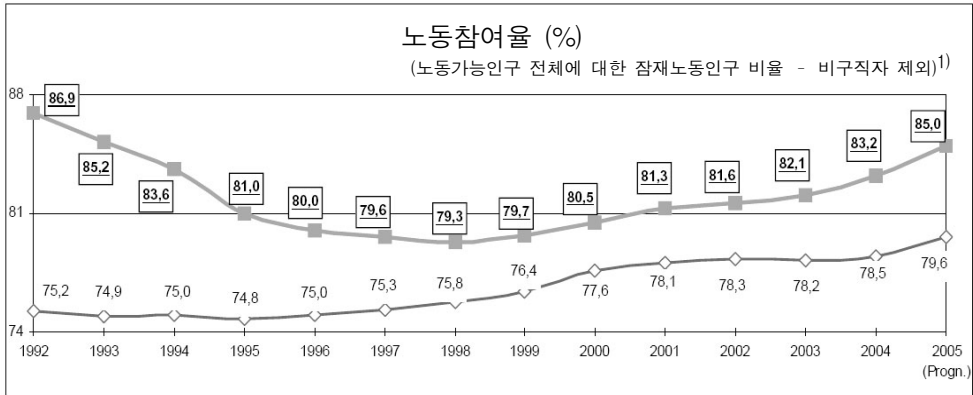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실업인구	1,375	1,344	1,359	1,374	1,411	1,623	1,600
정규직 직접지원	158	185	120	108	112	140	150
임금비용지원	146	171	106	94	97	107	81
신규채용 보조금	17	26	40	53	65	98	71
신규사업장 고용보조금	1	3	5	8	5	8	8
자회사 및 지사 고용보조금	-	-	-	-	0	0	1
고령노동자 수입안정 보조금	-	-	-	-	-	1	2
신연방주 경제기업 구조조정 지원책	-	-	-	-	0	0	1
구조조정조치보조금(OfW) ²⁾	115	131	51	23	13	3	-
장기실업자 취업보조지원	13	11	10	12	14	4	-
창업지원	12	14	14	14	15	33	69
초기안정금	12	14	14	14	15	20	21
창업 특별보조금	-	-	-	-	-	13	48
인력서비스 에이전시	-	-	-	-	-	4	9
직업 및 기타교육 지원	261	263	252	253	256	240	198
직업 재교육	151	143	140	136	129	99	63
장애인 취업교육	38	37	38	38	41	46	45
독일어 교사자격증 취득과정	6	6	6	5	5	5	4
취업준비과정 지원정책	20	21	24	26	29	33	28
저소득층 등 기타 하류층의 직업교육	46	56	44	48	52	57	58
노동창출정책	198	217	193	159	130	113	95
노동창출정책	151	168	148	116	88	73	65
전통적 구조조정 정책	47	49	47	43	44	39	28
노동창출성의 인프라 구축, 확대정책	-	-	-	-	0	1	2
적성시험 및 직업훈련 지원	14	16	19	21	22	31	31
기타 자유지원금	17	25	24	28	27	5	16
청소년 긴급프로그램³⁾	-	34	35	45	46	46	36
장기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	-	-	-	-	-	1	16
노년층 파트타임 취업 지원 (연방노동중개소 등록건수만)	2	5	5	10	13	17	16
참가자 (총계)	650	745	648	624	606	597	567
<i>참고</i>							
단기 비정규직	34	27	24	27	41	35	29
취업인구 중 사회법 III조 423항에 의한 생활보조비 수급자	96	94	88	94	111	136	136

¹⁾ 2002년까지 동베를린만을 포함한 신연방주 지역. 2003년부터 베를린 전역을 포함한 신연방주 지역.

²⁾ 구조조정조치 지원금(Ost für Wirtschaftsunternehmen: OfW)

³⁾ 2004년 '점프플러스(Jump Plus)'와 합동추진.

4.3 신연방주 및 구연방주의 노동참여율



¹⁾ 15~65세 사이 독일 거주 독일인. 신연방주: 베를린 제외/구연방주: 베를린 포함

출처: 연방노동청, 연방통계청, 연방 및 각 연방주 취업인구 조사분과, 할레 경제연구소 산출 (2005년 6월 29일 현재).

5. 주요 재정지원 프로그램 및 재원(財源)

5.1. 신연방주 지역 주요 지원 프로그램 현황

(2005년 6월 현재)

	1995		1996		1997		1999		2000	
	지원 건수	100만 유로	지원 건수	100만 유로	지원 건수	100만 유로	지원 건수	100만 유로	지원 건수	100만 유로
창업, 투자지원 및 자산성 대출 프로 그램 (ERP/EKH)										
- 지원예정액	15,386	3,520	12,092	2,563	16,552	2,618	11,745	2,207	7,539	1,522
- 실투자액	-	8,700	-	6,509	-	7,048		5,293		4,179
주거환경 현대화 프로그램¹⁾										
- 지원예정액 (제I차, 제II차)	53,900	4,880	54,042	4,336	47,660	4,988	44,754	5,918	8,643	1,299
지역발전 지원 프로그램										
- 기업경제 지원예정액	4,549	4,302	4,686	6,432	4,540	4,475	4,999	4,313	3,848	3,336
- 실투자액	-	10,016	-	11,592	-	7,364		9,178		7,339
- 경제관련 인프 라 구축 지원예정액	896	4,007	605	1,891	664	2,089	467	1,351	424	1,235
- 실투자액	-	3,064	-	1,464	-	1,630		1,041		938

¹⁾ 신연방주 재건 신용대출청의 보완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예산으로 이자삭감혜택을 받았다. 통계는 반올림한 수치이다.

2001		2002		2003		2004		누적통계	
지원 건수	100만 유로	지원 건수	100만 유로	지원 건수	100만 유로	지원 건수	100만 유로	지원 건수	100만 유로
								1990년 3월이래	
4,491	1,138 2,858	2,889	934 2,606	2,190	1,216 2,900	1,382	859 1,200	464,346	46,019 112,000
								1990년 10월이래	
4,833	750	5,028	1,079	6,792	486	5,476	561	731,509	43,080
								1990년 1월이래	
3,320	2,818 6,459	2,975	1,658 7,957	2,877	1,658 7,957	2,213	1,229 8,186	59,798 -	31,387 147,110
362	764 571	391	556 682	468	556 682	320	307 410	10,618 -	16,469 24,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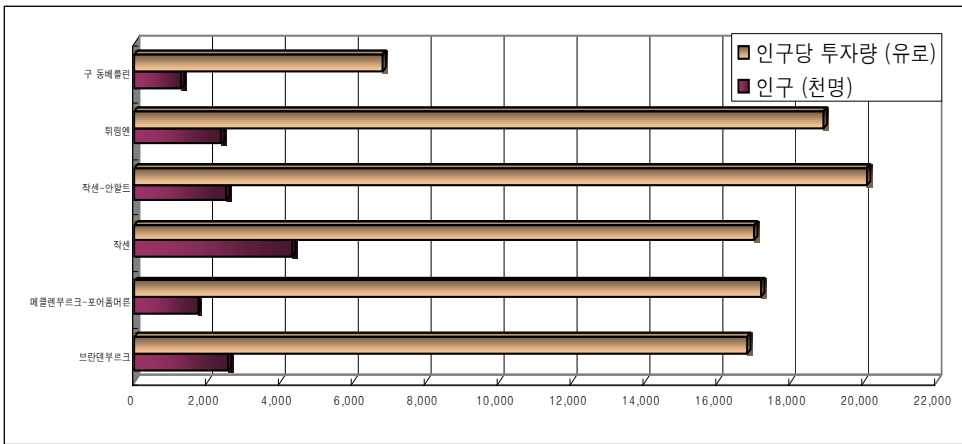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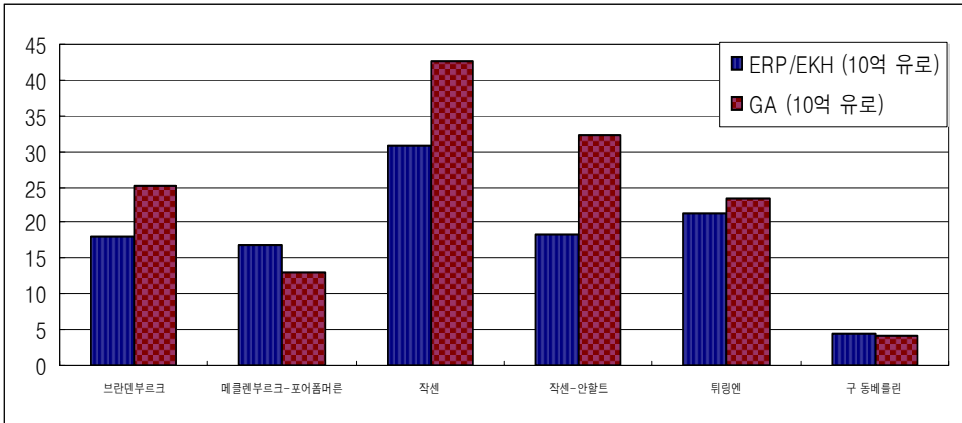
출처: 연방노동경제부(BMWA), 연방 경제 및 수출감독청(BAFA).

5.2 ‘지역경제 구조개선’ 공동 프로그램(GA), 투자지원 대출 프로그램(ERP) (자산성 대출 프로그램 <EKH> 포함)에 의한 신연방주 지역별 투자현황(1990~2005.06)

	ERP/EKH ¹ (10억 유로)	GA ¹⁾ (10억 유로)	인구 ²⁾ (천명)	주민 1인당 투자액 (유로)
브란덴부르크	18.5	26.4	2,575	17,400
메클렌부르크	17.2	13.4	1,732	17,700
포어폼머른				
작센	31.5	46.1	4,321	18,000
작센-안할트	18.6	33.1	2,523	20,500
튀링엔	21.7	24.0	2,373	19,300
구동베를린	4.5	4.2	1,271	6,800
총 계	112.0	147.1		17,500

¹⁾ 전체 지원건수 중 5% 이하만이 ERP/EKH와 GA, 양 프로그램 모두의 지원을 받았음.

²⁾ 2003년 12월 31일 현재(구동베를린 지역통계는 2001년 6월 30일 기준).



출처: BMWA, BAFA

6. 1991년 이후 신연방주 지역 창업 및 폐업건수¹⁾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창업건수	140,000	96,000	79,000	74,000	76,000	86,000
폐업건수	11,000	24,000	41,000	44,000	49,000	74,000
폐업건수 중 부도	392	1,092	2,327	3,911	5,874	7,419
-제조업	131	262	423	610	776	950
-건설업	27	122	461	1,027	1,893	2,685
-상업	57	301	682	961	1,438	1,586
-교통 및 미디어분야	13	74	188	368	414	411
-서비스업	53	227	484	828	1,224	1,624
-기타 경제분야	111	106	89	117	129	163
신규 창업건수	129,000	72,000	38,000	30,000	30,000	12,000

¹⁾ 1999년 이전: 구동베를린 지역 포함한 신연방주 지역.

1999년 이후: 베를린을 제외한 신연방주

2004년 창업건수, 폐업건수 및 순수창업건수: 중산층연구센터(IfM)의 추정치.

²⁾ 경제분야 분류체계의 변화로 전년도 통계와 일대일 비교는 불가능.

출처: 연방통계청(부도건수), 중산층연구센터(IfM), 본(Bonn) 지부(기타 통계, 참고: 1990년, 순수창업건수: 11,00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08,500	110,400	104,200	95,500	90,400	87,300	100,600	119,000
87,900	91,000	91,000	87,500	84,100	82,000	77,000	82,000
8,126	8,615	7,567	8,047	8,506	8,847	7,575	7,296
998	889	836	788	856	869	887	783
3,137	3,402	3,078	3,253	3,360	3,176	2,347	2,275
1,532	1,575	1,278	1,379	1,345	1,610	1,306	1,247
363	322	260	367	410	411	430	310
1,914 ²	2,193	1,904	2,067	2,340	2,589	2,411	2,492
182 ²	234	211	193	195	192	194	189
20,600	19,400	13,200	8,000	6,300	5,300	23,600	37,000

7. 경제분야의 연구개발인력

연 도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 인력수 (전체)	계전체연구인 력 중 연방주 비율(%)	인구 1만명 당 연구개발 인력(명)	근로자 1만 명 당 연구개발(명)	신연방주 근로자 부족비율(%)
1995	구연방주	250,704		40	87	
	신연방주 (베를린 포함)	32,612	11.5	18	43	-51
1997	구연방주	250,545		39	87	
	신연방주 (베를린 포함)	32,725	12.5	20	47	-46
1999	구연방주	271,148		42	94	
	신연방주 (베를린 포함)	35,545	11.6	20	47	-50
2001	구연방주	270,354		42	92	
	신연방주 (베를린 포함)	36,903	12.0	21	50	-46
2002	구연방주	266,260		41	91	
	신연방주 (베를린 포함)	36,340	12.0	21	50	-45
2003	구연방주	269,730		37	87	
	신연방주 (베를린 포함)	33,820	11.1	25	47	-46

출처: 연구개발 2003/04 자료, 독일과학재단협회 2005.2.22 언론보도.

8. 투자활동

8.1 신연방주 설비투자 변화 추이(경상가격 기준)¹⁾

-10억 유로-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설비투자	50.9	70.4	5.2	102.4	105.5	100.8	96.2	91.5	8.4	83.8	76.1	68.7	64.9	64.1
시설 ²⁾	22.1	24.7	26.7	29.0	30.1	30.4	29.1	1.0	32.4	33.9	32.7	30.1	28.6	29.2
건축물 ²⁾	28.7	45.7	58.5	73.4	75.5	70.4	67.1	60.5	56.1	49.9	43.4	38.7	36.3	34.9
건축분야투자가 설비투자전체에 서 차지하는 비율(%)	56.5	65.0	68.6	71.6	71.5	69.9	69.7	66.1	63.4	59.6	57.1	56.3	56.0	54.4

¹⁾ 신연방주(동베를린 포함, 구연방주).

²⁾ ifo 경제연구소 추정.

출처: 연방통계청, 이포(ifo) 경제연구소 추정치 (신연방주 투자 상황 통계-2005년 7월 현재).

8.2 신연방주¹⁾ 주민 1인당 설비투자 및 자본축적 변화추이²⁾(경상가격 기준)

구연방주=100기준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신규시설 포함 기타 설비투자 ³⁾	58.9	68.8	89.0	100.3	103.2	102.0	92.2	90.0	87.8	84.2	84.1	84.3	83.1	85.0
건축투자 ³⁾	71.4	106.1	137.5	168.0	175.4	167.8	161.5	143.2	129.2	114.9	103.5	98.2	95.7	93.5
자본축적 ⁴⁾	37.4	40.2	43.4	47.0	50.9	54.6	58.0	61.0	63.8	66.3	68.6	70.4		

¹⁾ ESGV 1995 통계치.

²⁾ 신연방주(동베를린 포함).

³⁾ ifo 경제연구소 추정치.

⁴⁾ 전 경제분야, 1995 경상가격, 신연방주(베를린 제외), 구연방주(베를린 포함).

출처: 연방통계청, 이포(ifo) 경제연구소(신연방주 투자 상황 통계-2005년 7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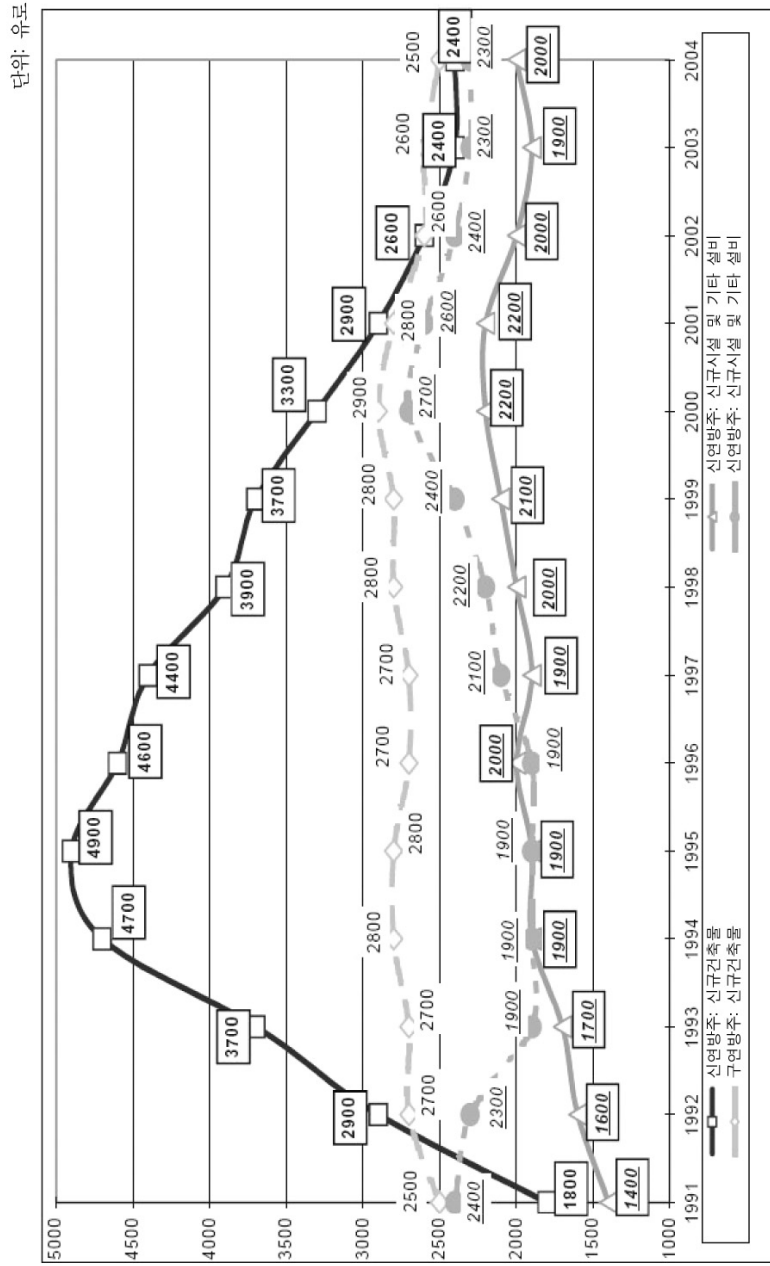
8.3. 신연방주 지역 경제 분야별 투자변화 추이¹⁾

분 야	신규 설비 투자: 경상가격기준 (10억 유로) ²⁾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경제 분야 전체	50.9	70.4	85.2	102.4	105.5	100.8	96.2	91.5	88.4	83.8	76.1	68.7	64.9	64.1
농업, 임업, 어업	0.6	0.9	1.1	1.5	1.6	1.4	1.2	1.4	1.5	1.3	1.2	1.3	1.2	1.2
공업	14.4	20.1	21.7	21.8	21.2	20.0	16.9	16.0	15.5	14.5	14.3	12.4	11.7	12.3
제조업	9.5	11.0	12.4	12.6	10.9	10.4	9.7	9.3	9.5	9.7	10.3	8.9	8.4	9.1
건설업	2.4	3.0	3.2	3.2	2.2	1.9	1.5	1.3	1.3	1.2	1.0	0.8	0.7	0.7
에너지/해운, 광업	2.5	6.0	6.1	6.0	8.2	7.6	5.8	5.4	4.7	3.7	3.1	2.8	2.6	2.5
서비스업	35.8	49.4	62.5	79.2	82.8	79.4	78.1	74.1	71.5	67.9	60.5	55.1	51.9	50.5
무역, 음식/숙박업, 교통	9.6	11.5	12.5	13.8	13.3	10.2	8.7	8.5	8.8	9.2	8.9	8.7	7.7	7.8
금융업, 임대업, 기업서비스	14.5	22.2	30.2	40.8	44.2	47.6	49.5	45.2	42.4	39.1	33.6	29.3	28.2	26.9
공공 및 사적부문 서비스	11.7	15.6	19.7	24.6	25.3	21.7	19.9	20.4	20.3	19.6	18.0	17.1	16.1	15.8

분 야	전년대비(%) ²⁾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경제분야 전체	-	38.4	21.1	20.2	3.0	-4.5	-4.5	-4.9	-3.4	-5.2	-9.2	-9.7	-5.6	-1.2
농업, 임업, 어업	-	46.0	15.2	38.7	5.4	-12.3	-11.0	13.2	5.8	-8.3	-6.8	4.8	-10.0	5.0
공업	-	39.3	7.9	0.4	-2.6	-5.8	-15.3	-5.3	-3.1	-6.4	-1.3	-13.8	-5.0	4.8
제조업	-	15.9	12.5	1.4	-13.6	-4.0	-7.3	-3.7	1.7	2.2	6.3	-14.0	-4.7	8.1
건설업	-	24.7	4.0	1.3	-32.0	-12.0	-22.0	-12.1	1.5	-9.8	-20.8	-20.0	-5.7	-5.1
에너지/해운, 광업	-	20.6	8.7	10.4	-4.1	-23.5	-14.3	-1.8	3.2	-22.7	-15.1	-11.3	-5.8	-3.1
서비스업	-	52.8	36.2	35.0	8.4	7.6	4.0	-8.7	-6.2	-4.9	-11.0	-9.0	-5.7	-2.7
무역, 음식/숙박업, 교통	-	33.6	26.2	24.6	3.0	-14.2	-8.2	2.5	-0.6	4.8	-3.3	-3.1	-11.4	1.5
금융업, 임대업, 기업서비스	-	52.8	36.2	35.0	8.4	7.6	4.0	-8.7	-6.2	-7.6	-14.3	-12.7	-3.7	-4.5
공공 및 사적부문 서비스	-	33.6	26.2	24.6	3.0	-14.2	-8.2	2.5	-0.6	-3.5	-8.1	-4.8	-6.2	-1.5

¹⁾ ESGV 1995 통계치.²⁾ ifo 경제연구소 추정, 2005. 7 기준.

8.4. 경제분야 전체 1인 당 투자액 (신·구연방주 비교)



출처: 연방통계청, 이포(Ifo) 경제연구소 추정 (2005년 7월 기준), 연방정부 자체 작성.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행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행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1 (2004)</i>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2 (2004)</i>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1 (2005)</i>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2 (2005)</i>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1 (2006)</i>		10,000원

협동연구총서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서중석 외 공저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Ⅰ)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Ⅰ)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Ⅱ)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윤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김규륜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 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